

# 충남 2010 정책비전

---

최종보고서

2001. 12

#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본 연구보고서를 「충남 2010 정책비전」 연구과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정종환

# 목 차

제 I 편 계획의 개요 .....	1
제1장 정책비전 수립의 배경과 목적 .....	3
① 정책비전 수립의 배경 .....	3
② 정책비전 수립의 목적 .....	3
제2장 정책비전 수립의 범위 .....	4
제3장 정책비전 수립의 접근방법 .....	4
 제 II 편 충남의 지역여건 분석 및 정책평가 .....	5
제1장 현상과 문제점 .....	7
① 지역개발 .....	7
② 산업 .....	9
③ 인프라 .....	22
④ 지역문화·관광개발 .....	24
⑤ 사회복지 .....	26
⑥ 환경·안전 .....	29
제2장 1990년 이후 도정평가 .....	36
① 평가대상 및 방법 .....	36
② 시기별 정책목표 및 전략의 특징과 내용 .....	36
③ 전략사업 추진실태 평가 .....	43
 제 III 편 여건변화와 시사점 .....	49
제1장 환황해경제권 형성 .....	51
제2장 도시화의 진전 .....	53
제3장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56
① 농수산업 .....	56

② 제조업, 서비스업 .....	59
③ 관광산업 .....	61
<b>제4장 질적 발전의 추구 .....</b>	<b>63</b>
① 문화 .....	63
② 스포츠 .....	64
③ 사회복지 .....	65
④ 환경 .....	67
 <b>제Ⅳ편 비전과 추진과제 .....</b>	 <b>69</b>
<b>제1장 도정기조와 목표 .....</b>	<b>71</b>
① 도정기조 .....	71
② 기본목표 .....	72
<b>제2장 역점과제와 분야별 추진전략 .....</b>	<b>72</b>
① 역점과제 .....	72
② 분야별 추진전략 .....	73
③ 추진전략별 시책과제 .....	74
<b>제3장 2010년의 충남 미래상 .....</b>	<b>75</b>
 <b>제Ⅴ편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b>	 <b>77</b>
<b>제1장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b>	<b>79</b>
①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개발 경영 .....	80
② 거점도시권의 육성과 성장관리 .....	81
③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육성 및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	83
④ 새로운 혁신과 발전거점으로서 신시가지·신도시 개발 .....	85
⑤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 .....	90
 <b>제2장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 충남 .....</b>	 <b>92</b>
① 희망 있는 고부가 농림수산업 육성 .....	93

②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총력 .....	124
<b>제3장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 .....</b>	<b>159</b>
① 관광·휴양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	160
② 선택이 다양한 지역관광상품 개발 .....	165
<b>제4장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b>	<b>171</b>
① 작고 편리한 비행장건설과 항공 교통망 구축 .....	173
② 21C 바다자원을 이용을 위한 해양개발 .....	173
③ 사통팔달의 육상 교통망 구축 .....	175
④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운송 가능한 물류망 형성 .....	180
⑤ 인간·지식·문화가 어우러진 디지털 충남의 고도화 .....	180
<b>제5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b>	<b>183</b>
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정책을 추진 .....	184
②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증진 .....	189
<b>제6장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충남 .....</b>	<b>193</b>
①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	195
②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	197
③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실현 .....	210
④ 이사오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회 실현 .....	216
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218
<b>제7장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b>	<b>228</b>
① 생태가치적 환경관리 .....	229
② 효율적 환경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방안 .....	237
③ 방재시스템의 통합관리 구축 .....	246
④ 예방위주의 안전체제 강화 .....	251

⑤ 일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충남 건설 .....	254
⑥ 소방체계의 확충을 통한 선진소방의 확립 .....	258

## 제8장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 261

① 수요자 중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공급체제 완비 .....	262
② 참여·투명행정 구현으로 도정 신뢰기반 구축 .....	265
③ 지식기반행정 추진으로 도정 생산성 증진 .....	271
④ 유연하고 대응적인 로컬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278
⑤ 지역협력체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 .....	281
⑥ 지역현안에 모두가 함께하는 자치역량 확대 .....	284

충남 2010 정책비전

---

## 제 I 편 계획의 개요

제1장 정책비전 수립의 배경과 목적

제2장 정책비전 수립의 범위

제3장 정책비전 수립의 접근방법

---

# 제1장 정책비전 수립의 배경과 목적

## 1 정책비전 수립의 배경

- 충청남도가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실천해왔으나 거시적 조류, 지역내외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
- 민선 3기를 맞아 2010년까지 충청남도가 새롭게 도달해야 할 목표와 실천과제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인식의 공유와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
- 현상과 과제, 기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전망을 토대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

## 2 정책비전 수립의 목적

- 충청남도의 현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간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
- 거시적 조류의 변화 속에서 충청남도는 어떠한 대내외적인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
- 2010년까지 충청남도가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주요시책을 제시



## 제2장 정책비전 수립의 범위

- 계획범위 : 2001~2010
  - 기준년도 : 2000년, 목표년도 : 2010년
- 공간범위 : 충청남도 전역(6개시, 9개 군, 총면적: 8,455km<sup>2</sup>)
  - 6개 시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 9개 군 :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1개 출장소 : 계룡
- 내용범위
  - 충남의 지역여건과 정책 평가
  - 여건변화 전망 및 시사점 도출
  - 2010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와 전략의 선택
  - 전략별 추진방안 제시

## 제3장 정책비전 수립의 접근방법

-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초두에 지역의 번영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비전과 구체적 추진전략 모색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화 등 거시적 사회조류 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의 공간·경제·사회구조의 혁신적 개편
-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개발경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하드인프라 중심에서 소프트 인프라 중심으로 지역개발 방식의 전환
- 다양한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및 사회 시스템을 구축

충남 2010 정책비전

---

**제 II 편 충남의 지역여건 분석  
및 정책평가**

제1장 현상과 문제점

제2장 1990년 이후 도정 평가

---

# 제1장 현상과 문제점

## 1 지역개발

### ○ 도내 지역간 발전격차 확대

- 신산업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북부지역과 농업중심의 중부지역 및 해안지역간에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
- 산업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북부지역에 집중하여, 북부 5개 시·군이 충청남도 총 제조업체수의 57%, 종업원수의 75%를 보유
- 충남지역의 제조업체는 천안시에 2,182개 업체, 아산시에 1,029개 업체 등으로 충남 동북부 지역에 28.3%가 집중되어 있음. 그 외 지역 중에서는 공주시에 911개 업체, 보령시에 675개 업체, 서산시에 626개 업체, 논산시에 960개 업체, 금산군에 582개 업체, 연기군에 612개 업체, 부여군에 605개 업체, 서천군에 509개 업체, 청양군에 278개 업체, 홍성군에 772개 업체, 예산군에 638개 업체, 태안군에 282개 업체, 당진군에 651개 업체, 계룡출장소에 45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음

### ○ 거점도시의 편재(偏在), 도시체계의 미발달

- 대전광역시와 천안시가 각각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32.19%와 7.41%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심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충청남도의 동남단 및 동북단에 치우쳐 있어 충청남도 전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서해안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은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1.8~3.0% 수준에 불과한 몇몇 시·군 중심지를 중심으로 배후지가 분할되어 있는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어 외부충격에 약함

- 대부분의 시·군중심지들이 배후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 기능을 해왔으나,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농어촌인구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에 의해 주요 기능인 상업·서비스업 기능이 영세화·사양화되며, 제조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부문의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임

○ 시·군생활권의 자족성 약화, 공간통합성 결여

- 충청남도 외부의 中·大도시의 영향력 확대로 도내 시·군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 공주·논산·금산·연기는 대전광역시, 조치원은 청주시, 서천은 군산시의 영향권에 속해 있음. 충청남도 내의 시·군중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광역적인 영향권을 보유하고 있음
- 통근통학에 의한 연계지역 분포에 있어서도 1990년에는 「천안-연기-대전간」, 「대전과 주변 시·군간」, 「천안-아산-예산-홍성-보령-서천간」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지역간 간선교통망을 따르고 있으나, 1995년에는 상호 연계되는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이 같은 생활권의 광역화는 시·군 지역간의 연계를 다양화하기도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천안시, 그리고 수도권과 군산시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군지역생활권의 자족성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지역간 연계교통망체계의 취약

- 지역간 연계교통망체계 미비에 따른 접근성 불량으로 통합적 공간구조의 형성이 지체되고, 물류비용을 증대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특히,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의 기간교통망이 미흡
- 공항·항만시설 부족으로 해외교역 여건의 조성이 미흡 : 임해형 신산업지대, 해양관광지대, 그리고 환황해권 교역기지로서의 잠재력 미활용
- 따라서 충청남도내 지역간 연계교통망체계 구축사업과 항만·공항시설 건

설이 지체될 경우,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발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증대
  - 빠른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북부지역 일대의 공장·주택·위락시설 등의 비계획적인 개별입지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서해 연안지역은 그간의 대규모 간척사업, 금강 하구언 건설, 아산만 일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축산업 증가 등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어 왔으며, 향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대외교역 증대에 따른 보다 다양한 형태의 연안개발이 추진됨으로써 연안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2 산업

### 1) 산업구조

- 1990년 이후 지역내 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1조 2,744억원에 달하고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나타냄
- 농림어업의 비중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정체
  - 1990~1999년 : 농림어업 27.5%→17.1%, 광업 0.8%→0.4%, 제조업 26.2%→37.7%, 서비스업 45.5%→44.8%
  - 1999년 현재 전국 대비 농림어업은 3배, 제조업은 약간 상회, 서비스업은 매우 낮음

## 2) 농업

- 쌀의 단위 면적당 다수확 달성
  - 552kg/10a로 5년 연속 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전국 1위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완만한 진행
  - 3ha이상의 농가구성비; 1995(5.1%)⇒2000년(6.4%)
- 벼농사 위주의 단순한 영농구조
  - 2000년 논벼재배농가; 119,522호(전체 농가의 66.6%)
  - 2000년 전국 쌀 소득은 농가소득의 24%, 농업소득의 50%
- 농산물 브랜드 관리 부실과 홍보활동 저조
  - 쌀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는 경기 이천쌀, 철원 오대미 등에 비해서 낮고, 소비자 가격은 경기미의 83.2% 수준임
-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00년 농가인구의 비율은 충남이 13.4%로 경북(16.0%), 전남(15.0%)에 이어 3번째임
  - 2000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비중은 충남이 12.5%로 전남(14.5%), 전북(13.5%)에 이어 3번째임
- 경영규모의 확대 및 영농법인체의 증가
  -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전업농의 농가수가 품목에 따라서 2-7배 증가하였으며,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90~'98년 사이에 30%~1000%까지 증가하였음
  - 영농법인 경영체 육성시책으로 '91년 농어촌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98년

까지 법인설립은 37배나 증가하였음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 총답면적의 76%이상 경지정리가 되어 농업기계화와 공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밭의 정비사업은 대상면적의 7.1%를 달성하여 안전생산기반을 조성하였음

○ 농업용수의 개발

-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용수원 개발 수리시설설치로 항구적인 수리안전시설을 77.1%확보하였음

○ 배수개선

- 홍수시 침수피해 상습지역과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낮추어 재해방제와 토양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전체 대상면적의 45% 달성)

○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 1565km의 확 · 포장 대상으로 중 834km를 실시하여 33%를 달성하여 작업의 능률과 편익을 도모함

○ 농산물 유통 · 가공의 개선

- 천안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으며, 생산지 포장출하로 상품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19개소에 농산물 포장센터를 설치하였음

○ 충남의 농업정책의 평가

- 국내시장보호와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중심의 정책
- 질보다는 양위주의 미곡 중심의 증산정책 : 다수확 위주의 품종재배
- 시장기구보다는 정부개입에 의한 제한적 경쟁

- 다량투입 다량생산의 원칙고수 :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 농지기반조성위주의 지원 : '92-'98간 농업투융자의 49.8%사용
- 하드웨어 중심으로 농업투자가 이루어짐.
-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과다한 보조지원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
- 지방농정의 자율성 부족

### 3)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 평균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금융, 물류·유통 등 생산자 서비스업이 비중이 낮아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임
- 지식기반제조업의 특화정도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전통제조업은 감소
  - 전국대비 특화계수 : 음식료품(1.554), 펄프,종이및종이제품(2.085), 코크스, 석유정제품(2.087), 화합물및화학제품(1.516), 고무및플라스틱(1.182), 비금속광물제품(1.044), 조립금속제품(1.04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품(1.806) 등 8부문에서 특화됨
  - 조립금속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품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음
- 충남의 제조업의 91%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소기업기업의 90%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임
  - 제조업체수(2001) : 전체 4,530개, 대기업 43개, 중기업 430개, 소기업 4,057



- 종업원수(2001) : 전체 129,443명, 대기업 36,444명, 중기업 47,738명, 소기업 45,261명
-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천안, 아산, 논산, 금산, 공주 등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인구 및 산업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연기로 이어지는 충청남도 동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화됨
- 시·도별 벤처기업의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이 전국 벤처기업체의 62.8%로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경향을 현저히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 충남 벤처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매우 낮음
- 시·군별 벤처기업의 분포현황은 천안, 아산 등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동북부 지역에 충남 전체의 65.6%가 집중 분포하며, 대전 근교지역인 논산, 금산, 연기지역에 17.7%가 분포하여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인접 지역에 집중 경향을 보임

### 벤처기업 전국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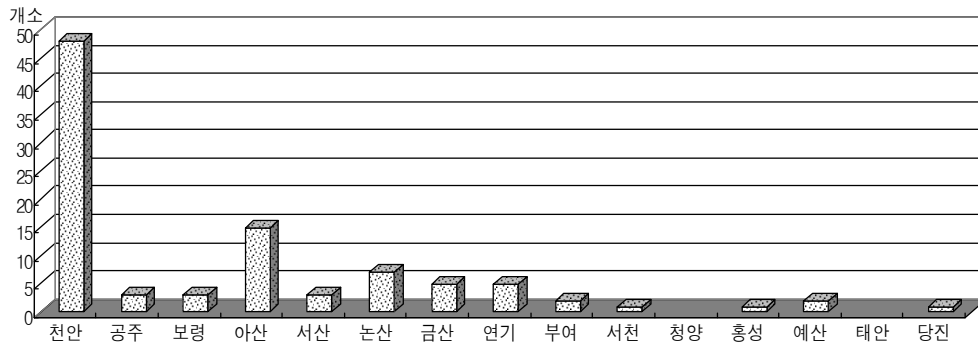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업체수	2,928	1,102	242	197	51	100	96	282	495	31	111	62	154	5
구성비	100.0	37.6	8.3	6.7	1.7	3.4	3.3	9.6	16.9	1.1	3.8	2.1	5.3	0.2

주 : 광업, 서비스업 등 업체수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 [www.smba.go.kr](http://www.smba.go.kr), 2000.

## 시·군별 벤처기업 분포 현황



자료 : 중소기업청, [www.smba.go.kr](http://www.smba.go.kr), 2000.

- 2000년 12월 현재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6개(20,764천평), 지방산업단지 21개(7,438천평), 농공단지 58개(2,743천평)로 총 85개(30,945천평) 산업단지가 소재함
  - 전국대비 : 국가산업단지 16.7%(7.5%), 지방산업단지 13.0%(12.6%), 농공단지 9.3%(20.1%), 전체 17.2%(8.9%)
  -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소,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대죽자원비축단지는 석유비축기지를 건설중임
  - 지방산업단지와 기타산업단지는 25개 단지에 3,3674만㎡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완료된 단지는 천안 제1단지를 비롯하여 8개의 지방산업단지와 계룡왕대단지 등 3개의 기타산업단지에 197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주로 천안, 연기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 등임
  - 농공단지는 총 58개 단지 9,130천㎡에 60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가동중인 업체 488개, 휴·폐업중인 업체 67개, 건축 및 준비중인 업체 50개가 있음
  -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등과 서남부지역의 보령, 서

천과 대전근교인 연기가 산업단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됨

- 산업입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과잉공급 상태임
- IMF 금융위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정책,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획일적인 공급방식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임
- 충남은 지난 30년간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 저조해 서해안 신산업지대 구축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

#### 4) 산학협력체계

-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지식기반확충을 위하여,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신기술보육사업(TBI),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의 산학협력시설은 기초 및 응용기술분야에 홍익대(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외 10개 대학과 창업관련시설로는 테크노파크(신기술창업보육센터)외 16개 대학, 연계 및 지원분야에 테크노파크 외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천안고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884명의 학생, 전문대학으로는 공주영상정보대학외 6개 학교가 주문식교육에 참여

## 5) 산업인력 수급

- 충남의 고등교육기관수는 24개, 학생수는 145,889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6.9%, 4.9%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 5개, 훈련법인이 1개, 노동부지정시설이 4개 기타 85개로 총 95개의 기관이 있음
  - 지역별로는 대부분이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 아산기능대학(아산시 신창면)과 강경기능대학(논산시 강경읍) 설립 추진
- 신규노동력 공급능력은 2000년 현재 23,694명이며, 그 중 대학출신이 15,219명으로 64.2%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산업인력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인구(군제대자)를 고려할 때 25,000명 이상으로 추산됨
-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도내 평균 인력 부족률은 3.39%로 전국평균 3.98%보다 다소 낮으나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3.85%로 높은 편임
  - 생산직 인력부족률 : 전문가 4.15, 기능직 3.98, 단순노무직 3.94, 기술직 및 준전문직 3.31%
  - 기업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 인력수급 22.5%, 자금조달 20.3%, 제품판매 17.3%, 기술개발 11.1%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 주도하에 모든 정책이 획일적으로 수행되어 지방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로 국책과제의 장기성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지역의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소의 자발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미흡

- 중앙부처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권한과 재원의 분산으로 인해 산학협력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함
- 대학과 기업간의 상호불신 풍토는 인적교류 형태의 산학협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앙정부기관 중심적인 산학협동으로 지방정부기관의 산학협동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의 고유역량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교육청 등 타 연관기관과 협력체제가 거의 없음
- 지역대학의 대부분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으로 산업인력 유인체제가 전무한 상태이어서 고급인력 역외유출이 심함

## 6) 물류 · 유통

- 충남의 상류시설은 2000년 현재 백화점 4개소, 대형점 3개소, 지정체인사업지점 3개소, 상설시장 30개소, 정기시장 52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대형업체는 천안에 집중되어 있음
- 물류시설로는 일반화물터미널이 소수 있으며, 대형 물류시설로는 천안시에 위치한 농축산물물류센터 외에는 전무함
- 항만시설은 그 동안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공용항만이 전무한 상태임
- 아산항 건설을 시발로 보령신항만, 대산항, 장군신항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서해안의 신산업지대 형성과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물류시설은 전무한 상태로서, 이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기업입지의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1996년 이후 유통시장의 개방이후 대형할인점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의 자본과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의 영세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잠식하고 있음
- 또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주변 대도시로의 상권 이탈로 인해 지역내 백화점, 정기시장, 재래시장 등 상류시설의 쇠퇴를 초래

## 7) 대외거래

- 2000년 현재 충남의 수출은 170억 달러로 전년대비 45.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3억 달러로 46.4% 증가하였으며, 연간무역수지는 68억 달러로 흑자였음
  - 전국대비 수출 9.9%, 수입 6.4%
  - 주요 수출품목 :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컴퓨터, 자동차, 경유, 기타유류
  - 주요 수입품목 : 원유, 납사, 석탄 및 코크스, 기계류, 반도체, 기타유류
- 수출대상국가로는 미국이 32.9%, 일본 14.2%, 중국 9.1%, 대만 8.4%로 총수출액의 64.6%를 차지하고, 전년도에 비해 영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에 독일과 미국지역의 수출은 증가하였음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수요회복
- 자동차의 수출은 미국지역의 경기회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수입대상국가로는 일본이 19.2%, 아랍에미레이트 13.2%, 사우디 아라비아 10.7%, 미국이 9.0%로 총수입액의 52.1%를 차지함
- 지역의 일반공산품의 수출 대상국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화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지역의 전통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주력산업이 충남의 주력산업과 유사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8) 지방재정

- 충청남도의 항목별 세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1990~1998년 기간 동안 총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각각 연평균 17%, 16%, 19%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
-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연평균 증가율 26%에 크게 못 미치며, 지방채 연평균 증가율이 27%로 전국 평균 41%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 충청남도는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보다 다소 상회하고 있어 자주성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아직도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9년 재정보고서를 기초한 충청남도의 재정운영 실태는

- 자주성 : 재정자립도는 30.8%로 전국의 도 평균 재정자립도 34.3%에 미달,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로 구성재정력지수는 54.57%로 전국 도 평균 재정력지수 63.96%보다 훨씬 낮아 기본재정수요 충족하기에 미흡
- 안정성 : 경상수지비율(29.54%)과 지방채상환비율(5.91%)은 전국의 도 평균 비율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으나 세입세출 총당비율(93.07%)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생산성 :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97.59%,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99.43%, 투자비 비율은 83.37%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력도 : 자체수입 증감율은 85.1%, 경상경비 증감율은 97.64%로 나타나 자체의 가용재원 확보 노력이 타 도(84.2%, 9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지방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면서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
- 자주재정권의 미약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지방으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은 지방의 가용재원 확충 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세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자체재원을 조달하고 성장세원을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 및 신축성이 결여됨
-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 또는 개인 이미지 부각



을 위해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행사 등에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음

- 장기적인 수요예측 등 과학적인 분석 없이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됨
- 시도별 미분양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총 미분양면적은 3,181.4천평에 달하며, 이중 충남은 707.4천평으로 22.2%를 차지함

### 3 인프라

- 교통망의 편중 발달, 교통수단간 연계 미흡
  -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 기간교통망 미흡
  - 항만, 공항시설 부족으로 임해형 산업지대, 해양관광지대의 개발잠재력 약화
- 충청남도의 무역항은 배후의 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의 연료수송용 전용부두의 성격이 뛰고 있으며, 연안항은 연근해 화물수송보다는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00년 말 현재 무역항은 접안시설 총 26선좌, 하역시설 34백만톤/년에 불과
  - 2011년 191백만톤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는 해상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음.
  - 급속히 증가하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계획 미흡
- 충청남도의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주요 3개 노선 233.3km와 4개의 지선이 있음. 전국 철도노선 연장 3,118.6km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형태는 통과위주로 활용도가 낮음

## 편입

- 경부선 및 호남선은 복선철도이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 수송 위주로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짐
- 장항선, 충북선 등은 극히 일부지역만 접속하여 내륙지역의 철도여건은 미약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충남 서북부 신산업지대의 아산, 석문, 인주, 대죽, 천흥, 천안 제3산업단지 등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천안, 아산, 서산, 태안지역의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 및 여객 수송이 원활치 못함
- 충청남도에는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1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일반지방도 38개 노선 등 총 59노선이 있으나, 동·서노선의 부족으로 다수의 노선에서 교통장애 발생
- 년 평균 10%이상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 노선의 확충은 미흡
- 고속도로는 청원~신탄진, 목천~청주, 회덕~유성 구간이 한계용량을 초과한 상태이며 나머지 구간도 한계용량에 근접한 상황임
- 국도는 74개구간 중 21개구간이, 지방도는 118개구간 중 8개구간이 한계용량을 초과하였음
-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총 17개의 공항이 있으나, 충청남도에는 공항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충청남도의 물류·유통단지는 조치원의 내륙 컨테이너기지, 천안 및 아산의 화물터미널, 아산만권 및 장·군권역의 유통단지 등이 있으나, 물류단지간 연계성 부족으로 기능 저하
- 물류표준화, 자동화,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운송시간 낭비 및 불필요한 교통량 유발
-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업체의 대

부분이 영세하여 시설투자 부족

- 물류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이 환적·보관기능 보다는 알선과 대기를 위한 주차장 기능 수행

## 4 지역문화관광개발

### ○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정립 미흡

- 충청남도에서는 일찍이 충남정신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신문화계발에 앞서 왔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지역문화 연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미확립
- 도민에게 지역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의 미확보
- 관내 대학의 지역 연구 미진

### ○ 문화·예술자원의 체계적 발굴, 관리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

-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지역경쟁력의 잠재자원인 문화·예술자원의 현황 파악 부재
- 자원의 조사-발굴-정리-종합의 종합적인 시스템 부재
- 지역문화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
-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산업의 육성책 부진

### ○ 문화 향수기회의 부족과 편중성

- 단순한 하드웨어의 건설과 복원에 그침
-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 부족
- 성·연령·계층에 따른 문화수요 차이에 대한 대응력 부족

- 향토축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부족
- 청소년의 문화 기회의 부족
- 물리적 시설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추진으로 관광자원 활성화 미흡
  - 2000년 현재 자연공원 6개소, 자연휴양림 12개소, 온천 11개소, 관광지 23개소, 관광특구 2개소, 지정문화재 778점 등 보유
- 관광 거점기능의 도시와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 미흡
  - 2000년 현재 관광숙박시설(호텔12개소), 여행사(전국 3.1%), 관광휴양시설(1개소), 관광안내소(6개소) 등을 보유하고, 컨벤션시설은 전무
- 인문관광자원과 이벤트축제의 관광상품화 노력 필요
  - 2000년 현재 지역축제(41건)중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서천모시문화제 등 전국 25개중 3개가 지정되고,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등의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부족
- 다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1999년 관광객수는 50,010천명으로 5.6%씩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역사문화, 스포츠레저, 민속행사 등 테마·체험형 관광행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관광자원활성화 요구는 해양자원 30.2%, 위락시설 27.3%, 역사문화자원 21.0% 등으로 높고, 관광객의 자가용승용차 이용율이 41.8%(제3차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01)
- 급증하는 서해안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공간 개발과 이벤트 축제의 육성 필요

-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유치목표의 2배 이상을 초과한 164만명이 방문함에 따라 행사장의 활용과 연계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의 계기 마련

## 5 사회복지

- 주택의 양적인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주택의 노후화 등 질적 수준 미흡
  - 2000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96.2%이며, 전체 536,825가구중 10년 이상된 주택이 66.2%(전국 28.7%)
- 기성시가지의 단독주택 밀집, 아파트 비중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 아파트의 비중이 1995년 16.0%에서 2000년 30.7%로 증가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
  - 불량주택개량 1,139호, 마을하수도정비 및 마을기반시설정비 각각 17개 마을
- 생활보호대상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대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아직도 높음
  - 1999년 112,782명에서 2000년 93,21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1.7%
-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수준의 도시-농촌간 격차 상존
  - 사회복지시설의 62.5%, 보건의료시설의 65.1%가 시부에 편중

-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서비스 미흡
  - 1995년 60세 이상 노년인구는 12.5%였으나, 2000년에는 18.2%로 증가
  - 1995년 등록된 장애인은 17,544명이었으나, 2000년 50,930명으로 증가
- 교육시설 수는 많은 편이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적자원의 외부유출 심화
  - 전문대학 9개소, 대학교 19개소, 대학원 57개소가 입지
- 생활체육시설의 지역편중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상존
  - 시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군 단위 운동장 및 체육관의 유지관리 소홀
-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 공설·사설묘지수와 매장면적은 1995년 11개소 1,748천㎡에서 2000년 16개소 3,591천㎡으로 증가
-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지난 3년간 충청남도 중·고등학교에서 제적·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수는 해마다 3천명이 넘음. 이중 여학생이 40~45%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 가출 청소년들은 매춘여성을 위한 시설인 충남선도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 수가 대단히 적고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충남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 비율이 각종 위원회 참여를 제외하

고는 대단히 저조함

- 기초단위의 의원은 한명도 없고 광역단위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도 여성은 한명도 없음
- 여성단체의 수는 많지만 여성 마인드의 부족과 활동의 부진으로 인하여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말 현재 여성단체 조직의 수는 238개, 회원수는 266,538명임. 그러나 이중 70%이상이 한 단체에 집중되어 있음
- 여성권익 신장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은 8%에 불과
- 여성복지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호간의 연계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이 낮음
- 여성 능력개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못하고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의 취업률 저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각종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성, 비효율성

## 6 환경·안전

### 1) 대기질

- 현황 및 오염원 분포
- 충청남도의 대기오염원은 외적으로 인천, 경기 지역, 대전지역에서 대기 오염물질 이동·확산의 가능성과 봄철 중국에서 이동하는 황사(yellow sand)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은 약 39만ton/yr으로 전국의 10.3%를 차지하고 있

어 1km<sup>2</sup>당 배출량은 약 46ton/yr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대기오염배출업소는 약 5,800개 업체이며, 이중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약 42%차지하여 오염원을 주도하며, 중·대형배출(1종~3종)업소가 직선형 띠를 이루고 있음
- 서해연안의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비료제조시설 등이 있어 각종 VOC 및 악취물질이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
- 도로망 확충, 자동차 이동이 급증하여 교통에 의한 오염물질이 충청남도 내 고루 분산되어 가는 추세
- 폐기물관리정책이 소각방향으로 전환점에 있어 대기 오염부하량 가중 예상

#### ○ 대기질 상태

- 도시지역에 비하여 산업화, 도시화가 늦게 진행되어 대기질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
- 200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측정결과 0.4%(20업체), 운행중인 자동차는 약 0.5%(444대)가 허용기준 초과

## 2) 유역현황 및 수질

#### ○ 현황 및 오염원 분포

- 충청남도의 하천유역은 내륙 쪽으로는 금강유역 4,506.7km<sup>2</sup>(52.5%)과 삽교호유역 1,619.2km<sup>2</sup>(18.9%), 안성천유역 356.0km<sup>2</sup>(4.1%), 보령호(댐)유역 163.6km<sup>2</sup>(1.9%)으로 대별
- 연안유역으로는 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지역에서 서해안으로 각각 유출되는 크고 작은 하천이 산재하며 유역면적은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22.6%인 1,941.7km<sup>2</sup>해당
- 금강유역은 상류에서 1단계 용담댐, 2단계 대청댐을 거쳐 유출된 금강물



은 대전지역의 갑천과 합류 후 곧이어 충청북도의 미호천 (연기군 조천 포함)이 합류하여 금강호로 유출하는 수계

- 삽교천유역은 충청남도의 단일 유역으로 찬안·아산·연기·예산·홍성·당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입하는 북부권 대표적인 수계로 산업 및 인구의 집중화로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
- 안성천유역은 천안시 성환읍·성거읍·입장면 유역에서 성환천 및 입장천을 형성하여 경기도 평택을 거쳐 아산(평택)호에 유출하는 수계
- 보령댐유역은 부여군 외산면, 보령시 미산·성주면 일원의 하천수를 저수하고 웅천천을 거쳐 부사담수호로 유출하는 수계
- 도내 만수위면적 0.5km<sup>2</sup>이상 호소는 36개소로 203.3km<sup>2</sup>이며 이중 연안에 인접한 담수호소는 8개 호소로 만수위면적은 155.4km<sup>2</sup>이며, 내륙호소는 28개 호소로써 47.9km<sup>2</sup>에 이르고 있음
- 수자원 부존량은 108억ton/yr으로 단위면적당 전국의 110% 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 ○ 수질상태

-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 보전 정책 수립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70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하천수질 분석(BOD<sub>5</sub>) 결과 금강의 경우 대청댐 방류후 대전 갑천(7.8~9.0mg/ℓ), 충북 미호천(4.3~5.0mg/ℓ)과 합류 후 연기 금남교 지점은 3.1~4.8mg/ℓ, 논산지점3.5~5.0mg/ℓ 로써 대부분 상류지역인 대전, 청주 등지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으로 하천환경기준 Ⅲ등급의 수질을 나타냄
- 삽교호 수계는 삽교천(당진 합덕읍 지점) 2.8~3.8mg/ℓ 무한천(예산 예산읍 지점) 3.6~5.4mg/ℓ, 곡교천(아산 염치읍 지점) 5.5~6.5mg/ℓ 를 나타내고 있어 하천환경기준 Ⅲ~Ⅳ등급의 수질임

- 안성천수계는 입장천(성환읍 안궁)5.5~6.6mg/ℓ, 성환천(성환읍 복모) 13.8~30.7mg/ℓ 로써 특히 성환천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남
- 보령댐 유출수인 웅천천(웅천읍 노청)은 1.3~1.4mg/ℓ (Ⅱ등급)로써 비교적 양호한 하천수질임.
- 주요 호소수질 분석(COD<sub>Mn</sub>)결과 보령호(댐)2.1~2.5mg/ℓ (Ⅱ등급), 탐정지 3.6~7.4mg/ℓ (Ⅲ~Ⅳ등급), 예당지 3.8~5.0mg/ℓ (Ⅲ등급) 삽교호 6.9~8.1mg/ℓ (Ⅲ~Ⅳ등급), 간월호 7.3~9.9mg/ℓ (Ⅳ~Ⅴ등급), 부남호 7.6~8.6 mg/ℓ (Ⅳ등급) 금강호 5.7~6.2 mg/ℓ (Ⅲ~Ⅳ등급)의 수질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

### 3) 폐기물

#### ○ 현황 및 발생량

- 전체행정구역 8587.2km<sup>2</sup>중 27.49km<sup>2</sup>(0.3%)를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 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기준으로 연간 총 발생량은 6,340천ton(불연성 83%, 가연성 13%, 재활용품 4%)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604천ton(9.5%) 사업장폐기물 103천ton(1.6%), 배출시설계폐기물 3,214천ton(50.7%), 건설폐기물 2,419천ton(38.2%)이 발생됨.

#### ○ 처리상태

- 발생된 폐기물은 4,293천ton/yr(68%)을 재활용하며, 매립 1,732천ton(27%), 소각 282천ton(4.5%), 해역배출로 33천ton(0.5%)을 처리하고 있음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은 307천ton/yr(43%)이며, 매립 308천ton(44%), 소각 93천ton(13%)으로 좁은 국토 현실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립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4) 연안환경

### ○ 일반현황

- 전국 11,542km의 8.3%인 953.3km의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천수만, 비인만 등이 있고, 안면도, 원산도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260여개의 도서가 있으며,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음
- 갯벌현황은 총 304.2km<sup>2</sup>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2,393.0km<sup>2</sup>)의 12.7%에 해당되며 당진28.4km<sup>2</sup>, 서산67.9km<sup>2</sup>, 태안102.1km<sup>2</sup>, 홍성9.8km<sup>2</sup>, 보령32.7km<sup>2</sup>, 서천63.3km<sup>2</sup>임
- 항만시설은 무역항 5개소(보령신항, 대산항, 장항항, 아산항,태안항)와 연안항 2개소(대천항, 비인항)로 접안능력은 전국항만(584선석)의 4.3%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전국 357,351천ton/yr의 11.1%인 39,814천ton/yr임

### ○ 서해연안 수질

- 경제활동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연안지역의 개발 및 이용 확대에 의한 자정작용(Self-Purification) 능력의 감소로 점점악화 되고 있는 실정
- 서해연안 대부분 지점에서 COD<sub>Mn</sub>기준 II등급 수질을 나타냄

## 5) 토양 및 지하수

### ○ 토양의 일반현황

- 전체행정구역 8587.2km<sup>2</sup>중 임야 4507.5km<sup>2</sup>(52.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2775.4km<sup>2</sup>(32.4%), 하천·제방·구거 482.7km<sup>2</sup>(5.6%), 도로 213.5km<sup>2</sup>(2.5%), 공장용지 61.6km<sup>2</sup>(0.7%) 묘지 28.6km<sup>2</sup>(0.3%), 기타 517.9km<sup>2</sup>로 최근 각종개발에 편승하여 임야 및 농경지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도로, 공장용지 등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음

-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1,650업소로 이중 주유소 1,047, 산업시설 404(석유류 384, 유독물 20), 기타 난방시설 등 199개소임

#### ○ 지하수 일반현황

-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1,142,578천 $\text{m}^3/\text{yr}$ 이며, 관정수는 229천 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2%를 차지하며 지하수 폐공은 4,412개소 임.
- 지하수 이용량은 419,352천 $\text{m}^3/\text{년}$ 으로 이용시설은 228,862개소로 이중 생활용수 이용량은 161,019천 $\text{m}^3/\text{yr}$ (38.4%), 농업용수 224,266천 $\text{m}^3/\text{yr}$ (53.5%), 공업용수 17,231천 $\text{m}^3/\text{yr}$ (4.1%), 기타 16,836천 $\text{m}^3/\text{yr}$ (4.0%)로 나타남

#### ○ 토양 및 지하수질

- 도내 공장주변, 매립장, 골프장 등 215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토양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등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광산주변지역 및 농경지 토양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7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분석결과 음용되는 생활용수 5개소에서  $\text{NO}_3\text{-N}$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6) 자연생태

#### ○ 일반현황

- 충청남도는 식물구계 구분상 한반도의 중부아구(Middle province)와 남부아구(South province)에 속하며, 높은 빈도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군락은 소나무와 참나무군락으로 대표되는 이차림군락과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와 밤나무 등 식재림에 의해 형성
-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에 의한 식물현존량은

33,606천ton, 순생산량은 7,696천ton/yr로 추정됨

- 동물상 중 포유류 12종, 양서류 11종, 파충류 15종, 조류 109종, 곤충류는 1,184종이 분포하고 있음

○ 관리상태

- 녹지자연도에 의한 개발지역(D.G.N 1~3등급)이 48.4%를 나타내고, 반자연지역(D.G.N 4~8등급)이 50.4%를 나타내며, 자연지역(D.G.N 9~10등급)은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림이 13개소가 분포하며, 이외에도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호야생 동·식물이 분포
- 자연공원 면적은 470.8km<sup>2</sup>이며, 국립 390.4km<sup>2</sup>(계룡산, 태안해안), 도립 78.5km<sup>2</sup>(대둔산, 칠갑산, 덕산), 군립 1.9km<sup>2</sup>(고북저수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자연보전 및 자연환경지구는 지정면적의 97.5%인 459.2km<sup>2</sup> 임

## 제2장 1990년 이후 도정평가

### 1 평가대상 및 방법

- 1990년 이후 주요 계획·공약 및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 주요 계획·공약 : 이념/Vision/계획목표, 추진전략
  - 전략사업 : 지역계획상의 핵심사업, 공약사업, 도 중점추진사업, 심사분석 대상사업
- 평가방법
  - 이념·목표, 추진전략 평가 : 시기별 특징과 내용, 정책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
  - 전략사업 평가 : 원활사업과 부진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메카니즘·성과 분석 및 과제 도출

### 2 시기별 정책목표 및 전략의 특징과 내용

#### 1) 관선기(1990~1995)

- 1980년대 말부터 대중국 교역을 겨냥한 「서해안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서해안지역이 국토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음
-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서해안개발사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하여 도내의 각 지역특

성을 살린 장기개발계획으로서 「圈域別 開發計劃('89)」을 수립하였음

- '90년 이후 5개년 동안은 권역별 개발계획을 근간으로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92)」, 「백제문화권개발계획('94)」, 「금강종합개발계획」,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94)」 등을 확정하는 한편, 단위사업별로 행정절차 이행, 타당성조사·실시설계 등을 진행하였음
- 이 시기의 주요 전략은 UR시대 대비 기술집약적 농업구조 구축, 수도권 기능분담과 신산업지대 조성, 지역문화자원의 보전정비 및 백제문화권 개발 등이었으며, 주요 시책과제는 고속도로, 무역항, 수자원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폭확충, 농어촌의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 선진화, 백제문화권 개발 및 지역여가·관광공간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광역대도시군 개발 및 중소도시 특화기능 개발 등이었음
- 그러나, 1995년 제1기 민선자치가 시작될 때까지 대부분 개발사업이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복잡한 선행절차 등이 요구됨에 따라 당초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였음

## 2) 민선1기(1995~1998)

- 민선1기는 지방육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제3차 국토계획(1992~2001)」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도입(1994), 그리고 지방의 발전 잠재력 개발과 민간부문의 SOC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균형개발법(1994)」 및 「민자유치촉진법」이 시행되던

초기에 출범하였음. 또한, 이 시기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도 장소 발전(development for place) 중심에서 주민의 번영(development for people)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특히 양적 성장 위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개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충청남도는 인본·경영행정을 도정이념으로 선택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4대권개발경영구도(1996~1997)」를 설정하였음. 모든 개발사업을 4대권 개발경영사업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기능에 따라 개발사업·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전담부서(정책실)를 설치하여 관련사업을 총괄 관리토록 하였음
- 주요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의 다원화 및 투자자원 조달의 다각화를 도모하였음
  - 대단위 SOC사업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부족재원은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충당
  - 부대산업이 가능한 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적극 유치를 위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대항개발을 유도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유지역 지정, 차관도입 추진
- 기업의 경영적 사고 및 기법 도입
  - 단위사업별로 비용·편익 분석 실시, 기획비용 개념 및 기업회계 일반원리를 적용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 신경영 혁신전략(時테크, 리엔지니어링 등) 도입
  - 민간자본 투자유인을 위해 조세감면, 규제완화, 행정지원체제 구축(도에



민자유치 one stop 서비스센터 개설 운영)

- 단위사업별로 목표년도 설정
  - 상위계획, 재원조달방안 고려 완공년도 제시
  - 98년, 2001년, 2010년의 3단계로 구분
-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추진
  - SOC 확충 위주의 양적 성장 일변도 개발사업 지양
  - 사회복지, 문화, 여가, 환경보존 등의 영역까지 종합개발

### 3) 민선2기(1998~2002)

- 민선2기는 1997년 11월의 IMF 충격 속에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경제난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도정역량을 투입해야 하였음. 이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방의 국제교류, 사회 모든 영역의 디지털화, 환경·문화자원의 생산적 이용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경제난 극복에 도정역량을 총결집하고 새로운 21C 지방정부 모델 창조를 통해 제2기 민선체제가 20C 에서 21C로의 대전환기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21세기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한 차원 성숙된 생활자치를 실현코자 했으며, 충남도정의 정체성을 고양시켜 “경쟁력을 갖춘 개성 있는 충남”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체질을 혁신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하는데 역점

을 두었음

- 특히 ‘디지털 충남’ 추진은 지식정보시대로의 도약기반 마련과 함께 농정·행정서비스·재난관리분야 등에서 전국 평가대상 39개 부문 중 29건이 3위 이내에 입상하는 주목할만한 행정시책으로 평가받았음
- 그러나 민선 2기 기간동안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정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정책집행수단간의 조정이 미흡하여 성과창출에 한계를 보였음

#### ○ 주요시책의 특징

- 당면한 IMF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12개 기능별 전담추진팀 가동을 통해 도정역량을 총결집
- 전국 최초로 ‘디지털충남’을 선언하고 도정 전반을 디지털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
- 동-서간, 해양-내륙간 공간적 연결축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철도·도로·항만·공항·물류센터·산업기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 전개
- 특히, 2002년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통해 화훼산업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道 전역의 관광자원화,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

#### ○ 단위사업별 선정과제

- 삶의 질 수준에서 전국 상위권 진입을 위한 “사회복지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동북아지역 위주에서 미주·구주·호주 등 교류 다변화 및 경제적 실리 위주로 교류영역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국제교류·협력 추진
- 과학농정·서비스농정·현장농정으로 충남의 농어촌혁신 6대 과제 중점 추진

- 지방행정 구조조정, 대규모 사업전 심사평가제도 강화, 행정서비스헌장을 2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적 실천, 민관 공동영역 확대 및 협력 강화 추진
- “푸른충남” 구현을 위해 ‘충남 환경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의제 21 수립, 환경영향평가제 의무화, 천연가스 차량보급 등 환경마스터플랜 구체화

○ 여성정책의 활성화

- 정책연구 및 여성교육기관(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으로 타도에 앞서 충남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여성들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정책 추진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촉진 (28.5%) 및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여성할당제 채용비율 제고 등
-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개최(2001. 9. 20)로 여성정책의 수준 및 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임
- 「유관순 상」 제정·운영으로 종래 여성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여성상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충남여성의 긍지를 살림
- 각 분야의 여성 전문인으로 「충남여성포럼」을 구성(2001. 5.8)하여 지역여성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및 연구과제를 개발
- 모자복지 기금 조성 - 20억원 조성

## 시기별 정책목표 · 전략 · 주요과제 비교

	관선기 ('90~'95)	민선 1기 ('95~'98)	민선 2기 ('98~'02)
정책 목표 (Vision)	<p>〈자연과 개발과 문화의 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요충지 기능 강화</li> <li>• 지역경쟁력 증강</li> <li>• 쾌적하고 문화적인 정주환경 조성</li> <li>• 자율적 행정 및 자립적 재정능력 확대</li> </ul>	<p>〈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본 · 경영행정의 도정이념 추진</li> <li>•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li> <li>• 도민위주의 봉사행정 추진</li> <li>• 안전 · 쾌적한 주민생활 보장</li> </ul>	<p>〈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본 · 경영행정의 도정이념 정착</li> <li>• 경제난 극복에 도정역량 총결집</li> <li>• 현장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li> <li>• 新지방문화 창조를 통한 지역개성화 추진</li> </ul>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시대 대비 기술집약적 농업구조 구축</li> <li>• 수도권 기능분담과 신산업지대 조성</li> <li>• 지역문화자원 보전정비와 백제문화권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세회복을 위한 경영행정 추진</li> <li>•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농촌 건설</li> <li>• 충남정신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 · 안정 · 효율로 경제난 극복 집중</li> <li>• 일관성 · 역동성 · 창의성으로 자치능력 강화</li> <li>•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li> </ul>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시설 대폭 확충</li> <li>• 농어촌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선진화</li> <li>• 수도권 이전기능 수용기반 조성</li> <li>• 백제문화권개발 및 지역여가 · 관광공간 조성</li> <li>• 아산신항 중심 신산업지대 종합적 개발</li> <li>• 쾌적한 환경보전 위해 환경정화 시설 지역적 배치</li> <li>• 광역대도시권 효율적 개발, 중소도시 특화기능 개발</li> <li>• 생산·기술·인력의 자립적 생산체계 구축</li> <li>• 광역행정기능 효율적 추진, 자치행정기능 강화</li> <li>•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모색,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건설</li> <li>• 충남 테크노벨트 조성</li> <li>•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추진</li> <li>• 향토인재 육성</li> <li>• 도청이전을 위한 기반조성</li> <li>• 광역 천안 대도시권 개발</li> <li>• 「프로농어민」 육성</li> <li>• 금강변 노인복지센터 설치</li> <li>• 서해안 종합관광벨트 개발</li> <li>• 여성층 사회참여폭 확대</li> <li>• 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li> <li>• 홍성과 예산군의 시 승격</li> <li>• 보령항 컨테이너 기지 건설</li> <li>• 대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li> <li>•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li> <li>• 천안-태안 산업철도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조성</li> <li>•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제특구 추진</li> <li>• 충남 영상산업단지 조성</li> <li>• 서해안지역 세계적 산·학·연단지 조성</li> <li>• 연기 첨단벤처창업단지 조성</li> <li>• 부여 전통공업단지 조성</li> <li>•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li> <l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li> <li>•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li> <li>• 보령·청양·공주·조치원간 내륙 관통철도 건설</li> <li>• 서산 K-Z 기지 민항기 취항</li> <li>• 서해안 고속 카페리호</li> <li>• 장기 용수공급 대책 추진</li> <li>• 아산호 공업용 상수도 2단계 사업 추진</li> <li>• 서산 A·B지구 담수호 종합대책 추진</li> <li>• 국제적 보령신항 건설</li> <li>• 환경친화적 금강종합개발</li> <li>• 마을단위 4대 공동시설 확충</li> </ul>

## 충청남도 주요 지표의 변화(1990~2000)

구 분		단 위	1990년	1995년	2000년	연평균 증가율 (’90~’00)	전국순위	
							1990	2000
인구 및 소득	총인구	천인	2,028	1,855	1,930	-0.5	9	10
	도시화율	%	49.8	48.2	60.0	1.9	15	16
	지역내총생산 (’95불변가격)	10억원	6,188	14,774	21,274	13.1	9	8
	1인당GRP	\$, 경상	4,140	10,739	11,379	10.6	14	5
	취업인구	천인	820	907	897	0.9	8	9
	취업률	%	99.3	99.0	97.7	-0.2	2	1
	산업구조	1차:2차:3차 (구성비)	35.9:24.7:39.4	43.2:13.2:43.6	35.3:14.6:50.1	-	-	-
산업 기반	계	천 m <sup>2</sup>	64.02	67,241	81,322	32.2	-	-
	국가산업단지	천 m <sup>2</sup>	32.73	33,463	38,518	28.0	-	-
	지방산업단지	천 m <sup>2</sup>	29.06	25,719	24,592	23.8	-	-
	농공단지	천 m <sup>2</sup>	2.23	8,059	9,130	44.9	-	-
	기타	천 m <sup>2</sup>	-	-	9,082	-	-	-
교통	도로밀도	km/km <sup>2</sup>	0.48	0.58	0.73	4.3	11	13
	도로포장률	%	61.1	74.3	72.6	1.7	14	9
생활 환경 및 사회 개발	상수도 보급률	%	35.2	43.2	52.6	4.1	15	16
	하수도 보급률	%	38.1	37.4	31.9	-1.8	-	-
	주택보급률	%	82.7	84.3	96.2	1.5	2	2
	자동차 보유대수 (가구당 차량대수)	대 (대/가구)	96,723 (0.2)	298,459 (0.5)	488,961 (0.8)	17.6	12 (11)	8 (14)
	대학교	개소	10	17	19	6.6	13	5
	공공도서관	개소	12	19	19	4.7	-	-
	체육시설	개소	670	1,153	1,784	10.3	-	-

### 3 전략사업 추진실태 평가

#### 1) 전략사업의 분류 및 추진실태

- 충청남도가 '90년 이후 추진해온 전략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부문별로는 신도시·신시가지 건설(5), 개발촉진지구개발(4), 농업종합개발(3), 산업단지 조성(14), 물류·유통시설(6), 도로(9), 철도(7), 항만(4), 수자원·국토보전(5), 발전소(2), 문화권개발(2),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 등(6), 기타(4)로 구성

부 문	사 업 명	계획기간	부 문	사 업 명	계획기간
신도시·신시가지	계룡신도시	'91~2001	도 로	공주~서천간고속도로	'98~2006
	대산배후도시	'89~2011		공주~보령간고속도로	미정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	'94~2016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미정
	당진배후도시	'94~2016		보령~안면도 연육교	'99~2006
	서해안권배후중심도시	'98~2016		서해안산업·관광도로	
개발촉진지구	청양개발촉진지구	'96~2003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홍성개발촉진지구	'97~2002		국도 4차선 확장	
	태안개발촉진지구	'99~2003		국지도 정비사업	
	보령개발촉진지구	2001~2004	철 도	경부고속철도	'92~2004
농업종합개발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	'91~2001		호남고속철도	2005~2015
	금강2단계 농업종합개발	'89~2004		장항선 복선전철화	'97~2006
	충남농업테크노파크	'96~2003		동서산업선철도	'99~2011
산업단지 조성	장항국가산업단지	'92~2001		충청선철도	미정
	석문국가산업단지	'92~2001		천안~조치원간 전철화	'99~2003
	천안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90~'98		서해선철도	미정
	인주지방산업단지	'93~2002	항 만	아산항	'89~2011
	관창지방산업단지	'92~2002		장·군신항	'90~2011
	대죽지방산업단지	'91~2001		보령신항	'97~2011
	아산테크노컴플렉스	'95~2001		대산항	'97~2011
	서산지방산업단지	'97~2001	수 자 원, 국토보전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II)	'96~2003
	미디어벨리 협력단지	'98~2010		아산공업용수도(II)	'99~2003
	논산지방산업단지	'97~2001		보령댐	'91~'95
	월산지방산업단지	'97~2001		금강수계치수사업	'89~2003
	성거지방산업단지	'98~2005		금강종합개발	'88~2005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99~2002	에너지 (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91~2002
	대죽지원비축산업단지	'97~2003		당진화력발전소	'95~2001
물류·유통 시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2000~2010	문화권 개발	백제문화권종합개발	'94~2005
	중부 농축산물물류센터	'96~'99		내포문화권개발	2002~2011
	금산 인삼물류센터	2000~2002		백제역사재현단지	'94~2001
	권역별 유통단지	'97~2011		백제의 집 건립	'2001~2005
	천안유통단지	'99~2004		안면도국제관광단지	'91~2001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92~'94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02
도 로	서해안고속도로	'90~2001	관광단지·시설	함상공원 조성	'98~2001
	천안~논산간고속도로	'97~2002		한국전통문화학교	'97~2002
	대전~당진간고속도로	'96~2004			

## 2) 전략사업 유형별 추진실태

### (1) 신도시·신시가지 조성사업

- 서해안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대산배후도시, 당진배후도시, 서해안권배후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선행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 (2) 산업단지 조성사업

- '95년 이전에 추진되었던 비봉, 화성, 부여 등의 농공단지와 왕대준공업단지 등은 4년 이내에 순조롭게 추진되었음
- 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천안, 아산, 연기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진함
- 석문, 장항, 인주 등 대규모 산업단지는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함
  - 석문국가산업단지는 국내외 경기후퇴, 높은 분양가(46만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을 계속할 수도 분양가를 낮출 수도 없는 상태, 정부의 기금형태의 자금지원 방안 필요), 대규모 용지의 일괄분양 방식(개별기업의 중소규모 입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선분양 후개발방식(충남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비 부담 곤란 때문)에 따른 기업들의 과도한 초기자금 부담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단지조성이 어려운 형편임
  - 장항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임해산업용지의 수요부족 및 산업구조의 변화(첨단기술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중후장대형의 중화학산업구조로부터 이탈,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관련 업종은 국내에서 이미 공급 과잉, 국내경기 침체로 국내자본에 의한 대규모 용지수요도 기대하기 곤란), 정부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선분양 후개발 방식의 문제,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의 불리성과 정부 관심 미흡(단지 진입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 그리고 장항·서천 등 배후도시가 성숙되지 못하여 생활여건, 노동력, 원자재 수송, 제품수요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연될수록 매몰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정부의 정책집행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

### [3] 물류·유통시설 조성사업

- 대부분 수요 및 사업 타당성이 낮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나 민간사업 신청자가 없어 계획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음
-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는 '99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초 외자도입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 [4] 도로·철도

- 고속교통시대에 대비하여 격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계획하였으나, 서해안고속도로와 공정율이 75% 이상인 천안-논산간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속도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서 추진이 지체되거나 계획기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장항선철도는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그 외 모든 계획철도는 사업타당성이 낮아 기본구상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임

### [5] 항만

- 국제무역항이 없는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국제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나, 아산항, 장군신항, 보령신항, 대산항 등 충청남도의 거점 항만들은 모두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서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낮아 사업의 추진이 매우 미미함



-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쟁지역인 경기도의 평택항과 전북의 군산신항이 먼저 개발될 경우 충남의 항만개발 시기는 더욱 늦춰지거나 아예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이상과 같이, 대규모·기간사업일수록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특히, 서해안지역의 개발을 선도하는 신도시·신시가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망 구축사업 등의 대부분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음

### 3) 부진이유 및 메카니즘

- 외적인 요인
  - 의사결정과 예산권이 중앙전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사업추진여부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아산만권, 장·군광역권개발계획 등 국가계획은 충남지역을 계획권역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은 이미 선도기업 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평택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당초 기대했던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의 수요가 창출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특히 IMF 금융위기로 더욱 위축
- 내적인 요인
  - 서북부지역과 장항 등은 산업기반이 약하고 수요가 부족함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인 개발수요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계획의 수정도 곤란

-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여건변화에 신속적인 대응 미흡
- 경쟁지역의 개발의도·추진에 대한 인식·대응이 미흡
- 시·군간 개발경합,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과다 공급

#### 4) 전략사업의 장기 미추진에 따른 파생문제

-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저하, 비협조
- 정작 서해안시대가 도래했으나 기반조성 미흡으로 경기·전북지역에 선발이익을 빼앗김으로써 충청남도의 잠재력 실현기회를 상실
- 장기 미추진 상태에서 사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이 필요하나, 기 투자자원 처리문제가 복잡
- 지역경쟁력 저하
- 지역간 개발경합과 분쟁 심화
  - 시·도간 : 충남-전북간(금강 해상신도시)
  - 도와 시·군간 : 도가 추진코자 했던 시설물관리공단의 설치에 대해서 관련 시·군이 반대
  - 시·군간 : 천안-아산, 버스연장운행(청양-예산, 조치원-청주)

#### 5) 과제

- 하드 인프라 중심의 사업추진으로부터 소프트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 및 수요·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 장기 미추진사업을 재검토하여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사업과 변경·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 특히 서해안지역의 개발 촉진 및 성장거점을 위한 기간사업에 중점
- 기존 대규모 전략사업은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의 전체 맥락 속에서 항만,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도록 개발시기를 조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획득
-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자금부족 및 여건의 미성숙으로 지연시키기보다는 사업의 수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이 높은 것부터 마무리함으로써 전체사업의 착수·완공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충남 2010 정책비전

---

## 제III편 여건변화와 시사점

제1장 환황해경제권 형성

제2장 도시화의 진전

제3장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제4장 질적발전의 추구

---

## 제1장 환황해경제권 형성

- 환황해경제권 형성의 가시화와 보다 진전된 협력단계로의 이행 촉진으로 서해안지역의 입지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서해안지역은 향후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물류 중심기지로서, 산업협력의 동반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근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 근접성과 교통통신 등의 물리적 연계성이며, 서해안의 인천, 군산, 목포에서 중국의 주요 해안도시와의 거리는 300~500해리 정도이며,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15~20시간 거리에 있음
- 이미 서울·인천과 중국의 주요 도시와는 정기 항공노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웨이하이, 칭다오, 톈진, 다롄과 군산과 엔타이간 해상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공항과 함께 인천항만이 정비되면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거점도시로, 아산항, 군장신항, 목포항이 신설·정비되고 무안 국제공항이 개설된다면 서해안지역은 국제적 관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됨
- 중앙정부는 국제적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경제를 형성코자 할 것이며, 특히 서해안지역에 규모의 경제와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아산만권, 군장권 등 기존의 광역권개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코자 할 것임

- 아산만권은 지역의 주력업종인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수출기지로서 중점 육성하고 항만과 배후중심도시를 확충하고, 군장권은 지역의 항만과 시설산업을 활용하여 원재료, 소재, 정밀화학, 중기계 및 운송장비, 철강 등 임해형 재본재 기간산업과 대중국 교역에 유리한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두 개의 광역개발권에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전북지역에 주요한 거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충남지역이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거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제2장 도시화의 진전

- 도시화 사회로 진입
  - 교통발달과 정보화는 시·공간의 수렴을 가져오고, 특히 충남지역은 입지잠재력 증가에 의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인구·산업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유입인구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가 결합되어 도시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
  - 전반적으로 2007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둔화될 것이며, 충청남도는 2010년에 이르러 도시화율이 80%를 상회하여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사회를 형성할 것임
- 도시화의 진행은 지역구조의 변화로 나타날 것임
  - 도시인접지역부터 도시인구 외곽이주에 의한 교외화가 진행될 것이며, 외

곽으로부터 이주인구 증가에 의해 혼주화·도농공존지역이 증가할 것임

- 인구조밀지역은 격자형의 고속도로축을 따라서 회랑을 형성하고, 인구소밀지역은 내륙지역에 분포할 것임
- 천안·아산권과 대전시 주변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인구조밀지역이 분포할 것임
- 내륙의 청양, 부여, 공주의 서북부지역은 쉽게 편입되지 않을 것이나, 교통발달과 정보화는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전원형 이주)를 촉진하고, 실버타운·세컨드홈 빌리지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임
- 일부 도서·오지지역은 수렴사회로부터 여전히 고립될 수도 있으며 농촌지역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화될 것임(혼주형, 순수농업형, 관광지형, 세컨드하우스 빌리지형)

#### ○ 시기별 도시화 진행의 차이가 발생할 것임

- 1순위: 천안·아산권은 100만 내외의 대도시권으로 발전하여, 서울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임(통근통학, 업무통행 급증). 특히, 이 지역은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의해 사람 및 기업의 활동권 확대, 성장산업 입지가 진행되고, 중추행정기관의 입지에 의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발휘에 따른 자립적인 성장 메카니즘이 생기게 되어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임
- 2순위: 대전시 주변지역은 2005까지는 지역경제의 성과가 대전시로 유출되다가, 그 이후는 대전시로부터 성장파급효과를 받게 될 것임, 따라서 공생적 광역도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산업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 3순위 :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 도시형 취락이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인접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여, 점차 일정범위의 공간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중소도시 수준의 도시연계권을 형성할 것이나, 기존 시가지의 대부분은 고속도로나 산업단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크게 성장·갱신되지 않을 것임

- 충남의 서해안지역이 주변지역에 대해 길항작용을 할 자체 거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서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서남부지역은 군산에 완전 종속하게 될 것임. 그러나 자체거점을 형성할 경우는 소수의 대규모 거점보다는 다수의 중소규모 거점의 연합체가 될 것이고, 각각의 거점이 전문화될 것임

#### ○ 대응과제

- 고속도로 결절지를 중심으로 도시형 취락이 군집을 이루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새로운 도시화 형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기존 시가지의 확장, 신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택지개발수요, 산업입지 증가에 대응하여 시가지·단지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의해 활력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개념에 의한 농촌 취락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임

## 제3장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1 농수산업

#### 1) 시대적 전망

- WTO도하협상과 중국의 WTO가입
  -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하락
- 농수산업의 다면적 기능의 강조와 환경 친화적 농업의 요구증대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전국 60,275호(4.4%), 충남 9,786호(5.5%)



- 시장기능강화, 농업소득의 상대적 저하와 식량 자급률의 하락
  -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5년의 6.4%에서 2000년에는 4.5%로 감소
  - 칼로리 베이스 식량자급률은 1995년의 58.6%에서 2000년에는 49.3%로 감소
- 정보화(IT) 및 생명공학(BT)의 급진전
  - 전국; 2000년 PC보급대수 332,789대(24.1%), 인터넷사용농가 37,051호(2.7%)
  - 충남; 2000년 PC보급대수 42,412대(23.6%), 인터넷사용농가 4,630호(2.6%)
  - 작물의 계놈지도 완성 등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급증할 것임
- 경영규모간 농업소득의 격차증대
  - 대형농기계기술체계의 확립과 인건비의 상대적 상승으로 인하여 소농과 대농간에 농업소득의 격차증대
  - 2000년도 0.5ha~1.0ha의 경영체와 5.0ha 경영체간의 농업소득은 5.41배이지만, 2010년에는 6.80배 이상으로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의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추구를 위해 J-턴의 증가, 교통수단의 증가로 농촌의 주거생활기능의 수요 증대
- 남북통일 및 대북 식량지원에 대비한 주곡 생산능력의 유지
-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농어촌의 관광수요 증가

## 2) 충남의 농업의 전망

-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
  -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부문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 2000년 5.41% ⇨ 2010년 4.29%
    - 충남; 2000년 15.48% ⇨ 2010년 12.48%
    -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생산을 증가시켜야 함
- 인구 구성비로 본 농업의 위상
  -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 2000년 8.53% ⇨ 2010년 2.93%
    - 충남; 2000년 29.00% ⇨ 2010년 8.86%
    - 60세 이상 경영주; 1995년 40.8% ⇨ 2000년 49.3%(8.5% 증가)
    - 따라서, 소농경영주를 중심으로 한 농업취업기회의 확대 및 고령농업자를 중심으로 조기 은퇴 유도
- 농경지 면적의 감소
  - 농경지면적
    - 전국 2000년 1,888,765ha ⇨ 2010년 1,630,147ha(13.69% 감소)
    - 충남 2000년 256,838ha ⇨ 2010년 233,546ha(9.07% 감소)
  - 논면적
    - 전국 2000년 1,149,041ha ⇨ 2010년 895,842ha(22.04% 감소)
    - 충남 2000년 187,753ha ⇨ 2010년 174,388ha( 7.12% 감소)
    - 따라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식량확보를 위

해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농지를 보존하여야 함

-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
  - 2000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수산업의 비중; 전국 4.5%, 충남 12.5%
  - 농업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고, 선별적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원 육성하여야 함
- 농가부채의 증가 및 도·농간 격차 확대
  - 전국의 호당 농가부채; 1995년 21,803천원(부채율 42.0%) ⇨ 2000년 20,207천원(부채율 87.6%)
  - 1994년 도시가구의 99.5% ⇨ 1999년 83.6%

### 3) 충남농업의 과제

- 뉴라운드 영향의 최소화와 소득증대
  -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통한 농·어가 소득의 향상
  - 이농자, 영세·노령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 우량농지 확보 및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
  -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 그린투어리즘의 확대
- 환경 친화적 농수산업의 육성
  - 안전식품의 공급
  - 농촌지역의 환경보존
- 농·어촌과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의 강화
  - 농촌의 지역경제기능다원화 「복합산업공간화」

- 문화관광마을 조성과 녹색관광상품개발
- 도·농간의 격차 해소

## 2 제조업, 서비스업

- 중국의 개방화와 WTO 가입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전과 기회로 작용
  - 중국은 거대한 생산 및 소비시장의 제공과 중국경제의 역동성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시장에서 경쟁상대로 도전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전략적인 지주산업 : 기계산업, 전자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건설업
  - 충남지역의 주요 수출품목 :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컴퓨터, 자동차, 경유
-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지역간 경제격차의 심화 초래
  -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보화의 진전은 수도권의 밀집현상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격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임
- 서해안시대의 도래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와 수도권 경제기능의 대안지로 부상
  -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으로 충남은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국토의 중심지와 수도권의 인접지역으로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기능을 분담
- 국내적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주

변 대도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므로 산업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1년 현재 632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12,447명의 고용 창출
- 천안시(120개), 아산시(122개), 연기군(71개), 논산시(63개) 순으로 기업 유치
-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입지의 수요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IC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전
  - 세계화·정보화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들은 성장하는 반면에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쇠퇴하게 될 것임
-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
  -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기준 7.1%로 이미 노령화시대로 진입하였고,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11.2%

### 3] 관광산업

- 소득증대와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충청남도과 수도권 주민의 문화, 관광수요 확대 예상
  - 자원의 발굴·정리·집대성 및 관리·활용에 대한 대책 필요
  - 문화 공급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및 중심 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 증대
- 다양한 문화향수 취향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
  - 향토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중·저가의 문화 기회의 확대 등 문화의 다

## 각화 방안 모색

- 노인층 및 청소년 문화 기회의 증대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여가·문화 활동공간의 확보 필요성 증대
-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문화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백제·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가속화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배후 관광지로 급부상과 서해안의 해안관광수요 급증
- 중국과의 교류확산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로 대중국 관광수요의 급증 전망
-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의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증가와 문화 컨테츠 개발이 증대
- 충남의 장기적인 관광지표는 관광수요에서 2011년에 총 38,371천명으로 이중 내국인 관광객수가 36,122천명, 외국인 관광객수는 2,249천명이고, 관광수급은 61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관광지표

구 분		2002년	2005년	2011년
관 광 수 요	전국관광총량(천명)	392,160	543,200	633,142
	충남관광총량(천명)	22,731	32,985	38,371
관 광 수 급 비 교	관광공급능력(천명)	308	325	336
	일관광수요량(천명)	609	795	955
	수급 비교량(천명)	△ 301	△ 470	△ 619

자료 :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권역별관광개발계획(안), 2001.

## 제4장 질적 발전의 추구

### 1 문화

- 여가시간의 증대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모(정신적 여유, 자연과의 만남, 아름답고 개성적인 문화로 가득찬 생활에 대한 요구 증대)로 향후 10년간 문화부문은 급속한 사회·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정착, 여성 노동력의 증대,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고학력화가 진전되면서 여가시간 활용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개개인의 자아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활동의 증대로 각 사회계층의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문화활동이 일층 강화되고, 문화부문의 다양한 영역들이 상호연계 속에서 빠른 속도로 대중화·산업화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문화부문은 교육부문과 함께 인간의 창의성 함양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보다 창의적 인간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문화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화와 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

화콘텐츠의 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복잡다기한 개개인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풍부한 문화활동·상품의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셋째,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화부문에서도 지역간·국가간·문화권간 상호의존성 및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 문화의 국내 문화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임. 대다수 선진지역의 경우 이미 자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지식기반경제화의 중요한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왔음. 이에 따라 선진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 문화산업 DB 구축 및 문화영역간 연계체계의 확립,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문화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넷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시민단체의 활동이 국내 외적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여가생활의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문화공간 및 시설의 운영에서 수요자 지향적인 문화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 2 스포츠

- 현대사회에서 스포츠활동은 국민건강의 유지와 여가수요의 충족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단절·소외로부터 사회통합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평화와 문화교류의 수단으로서 외



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따라서 스포츠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스포츠시설·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유지를 우선시하는 관점이 견지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예상되는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 인구의 고령화, 도시화 등의 환경변화는 삶의 질과 건강,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활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3 사회·복지

- 2010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이슈화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역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복지관련 욕구 급증
-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복지재원에 따라 민간단체와 도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계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복지행정체계의 지방화와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대두
- 사이버시대 가상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서비스와 복지기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확대 요구 증대

-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임
- 여성부 출범으로 성주류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 증대
- 인권의식의 증대로 소외된 집단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및 아동 등)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임

#### 4 환경

- 자원 집약적인 산업구조에 기반을 둔 고도성장방식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는 추세임. 이는 소득수준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연환경 악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화되어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인구 및 도시화율의 증가, 지방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확대 등 국토환경 관리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국토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임
- 도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두될 것임

-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신물질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며,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 생물체(LMOs)의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증가 예상
-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성상이 다양화되고 발생량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활양식의 변화, 재개발·재건축의 증가로 포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오염의 양상과 피해가 선진국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환경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과 함께 향후 핵심적인 성장산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무역-환경 연계논의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압력과 국가별 환경규제 강화로 향후 10~15년간 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 등 아시아시장에서는 연평균 15% 내외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주변지역 및 현황적인 여건
  - 북부권은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산업, 인구 등 유입이 가속되면서 직선형 오염축을 이루고, 오염물질이 서서히 남하하고 있음
  - 남부권은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금강의 수리권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하면서 수질오염원의 지속적 유입으로 금강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부권은 한강 및 압록강, 중국에서 유출하는 오염물질이 반폐쇄성 해역인 서해에 유입하여 해양오염이 점차적 심화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비료제조시설 등이 있어 각종 VOC 및 악취물질이 생활환경저해요인으로 작용
- 동부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원·청주와 인접하여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물질 유입가능성 상존

## 충남 2010 정책비전

---

# 제Ⅳ편 비전과 추진과제

제1장 도정기조와 목표

제2장 역점과제와 분야별 추진전략

제3장 2010년의 충남 미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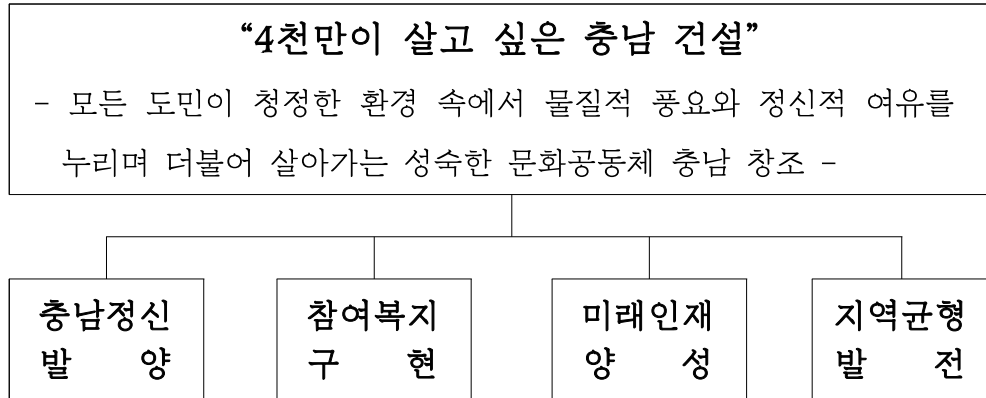
# 제1장 도정기조와 목표

## 1 도정기조

- 「인간·지식·문화」로 집약되는 21세기 시대조류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충청남도과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도약하여 충남의 빛나는 미래를 개척한다.
-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핵심수단으로 하여 미래의 충남 도민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곳으로 창조한다.
- 「문화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도민 개개인이 보람이 있는 생활 영위하는 성숙한 지역문화와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 보다 차원 높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구체적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기 위해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완비하고, 행정정보 공개화 및 참여행정 확대하며, 투명한 열린행정을 펼치며, 유연하고 대응적인 Local Governance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처음보다 더 처음 같은 각오”로  
충남이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선다.

## 2 기본목표



## 제2장 역점과제와 분야별 추진전략

### 1 역점과제

- 「지역문화」 육성으로 「충남정신」 계승 발전
- 「복지충남」 구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미래인재」 양성으로 「희망찬 충남」 기약
-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역량」 강화
- 「산업관광」 진흥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균형」 개발로 「동북아 중심축」 형성

이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며, 국가를 변화시키는  
「충남 역량」을 강화한다.

## 2 분야별 추진전략

- 지역개발 :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창조
- 산     업 :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 충남 창조
- 관     광 :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 창조
- 사회기반 :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창조
- 문화·예술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창조
- 사회복지 :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충남 창조
- 환경·안전 :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창조
- 자치행정 :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창조



### 3 추진전략별 시책과제

추진전략	시책과제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개발 경영 추진</li> <li>○ 거점도시권의 육성과 성장관리</li> <li>○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육성과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정비</li> <li>○ 새로운 혁신과 발전거점으로서 신시가지·신도시 개발</li> <li>○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li> </ul>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제일의 선진 농·임·축·수산업 육성</li> <li>○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경쟁우위의 신산업체제 구축</li> <li>○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li> </ul>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역 개발</li> <li>○ 지정관광지 육성과 관광명소 조성</li> <li>○ 관광사업자와 종사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관광기념품과 브랜드로 관광명품 사업 추진</li> <li>○ 서해안의 거점항구도시와 백제·내포문화권 개발</li> <li>○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적합한 선택형 관광상품 개발</li> <li>○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지역축제의 차별화 추진</li> <li>○ 전통문화공간과 생태자원의 테마관광자원 개발</li> <li>○ 대중국 관광객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상품 개발</li> </ul>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황해권시대의 관문항 육성</li> <li>○ 대 북방 육로교역에 대비한 철도노선 확충</li> <li>○ 광역도로망 구축</li> <li>○ 근거리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li> <li>○ 선진화된 물류 네트워크 구축</li> <li>○ 인간·지식·문화가 어우러진 디지털 충남의 고도화</li> </ul>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정책 추진</li> <li>○ 문화·예술자원의 효율적 발굴 및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li> <li>○ 도민이 향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li> <li>○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li> <li>○ 현대적 감각으로 향토축제의 개선</li> <li>○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li> <li>○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생활 증진</li> <li>○ 청소년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충</li> </ul>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li> <li>○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li> <li>○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실현</li> <li>○ 이사오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회 실현</li> <li>○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li> </ul>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li> <li>○ 효율적 환경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방안</li> <li>○ 안전한 종합 방재체제의 구축</li> </ul>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수요자 중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공급체제 완비</li> <li>○ 정보 공개화 및 참여확대로 자치도정 경쟁력 강화</li> <li>○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기반 행정혁신 탄력화</li> <li>○ 대내·외적 도정역량 구축관련 대응전략 추진</li> </ul>

## 제3장 2010년의 충남 미래상

- 목표년도인 2010년에는 2,008천명의 도민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골고루 거주하여 활력있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이루고, 도민 1인당 GRP는 29,238천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것임
- 고속교통·정보통신기반을 완비함으로써 환황해권의 국제교역과 정보통신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높은 지역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임
- 고유한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 개성적이고 매력있는 지역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충남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 도민들은 지역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정주성을 지니게 될 것임
- 해양과 육지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경관자원의 보전으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룬 청정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의 쾌적성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임

## 2010년의 주요 사회지표 전망

주요 지표	단위	1998년	2010년	비고
인구	천명	1,919	2,008	
1인당 G R P	천원	9,972('97)	19,670	'95년 불변가격
도시화율	%	55.8	63.6	
도로포장율	%	71.1('98)	85.6	
고속도로	km	78	470	
국도	km	1,191	1,523	
지방도	km	1,710	1,859	
주택보급율	%	88.0('95)	101.7	
상수도보급율	%	49.0('98)	83.8	
의료병상수	개	10,189	16,340	
사회복지시설	개소	56	75	
관광객수	천명	41,152('97)	62,631	

## 충남 2010 정책비전

---

# 제Ⅴ편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1장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제2장 지식기반의 경쟁력있는 산업 충남

제3장 언제나 찾고싶은 관광 충남

제4장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제5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제6장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충남

제7장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제8장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

## 제1장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무한경쟁 시대에 충청남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적 개방(外的開放)과 내적통합(內的統合)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광역적으로 공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되는 지역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을 공동 발의하여 투자를 상호 분담하는 등의 업무제휴를 맺고 실천하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개발, 정보화, 환경보전, 수자원관리, 물류·교통망구축, 관광·문화발전,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등에서 다양한 지역간 협력·제휴를 이루도록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분야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얻는 상호보완적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간 협력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의 발전전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제휴·협력에 의한 경영적 지역개발의 바탕 위에서, 먼저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서해안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중소규모의 도시·산업·물류 집적지들을 조성하고, 그 각각이 교통·정보망에 의해 긴밀히 연계되는 거점도시권을 형성한다. 천안·아산광역도시권은 성장관리정책을 통해 과밀과 난개발을 제어하고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육성한다.

충남 도시의 대부분은 중소도시와 소도읍들로서 오랜 역사성과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도시들의 개성을 살려 특화하고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테마와 활력이 있는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생한다. 또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창조적 정주생활권 육성을 위해서 인간 중심의 환경정비에 주력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이루도록 한다.

신산업지대화·정보화에 대응한 혁신과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신시가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수산업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상지역의 확대를 도모하며, 도서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자원화한다.

## 1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개발 경영

### 1) 개발권의 설정과 경영원칙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간 연계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4대 개발 경영권을 설정
  - 북 부 권 : 천안·아산·당진의 전역, 서산·태안·예산·연기의 일부
  - 서해안권 : 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전역, 당진의 일부
  - 백 제 권 : 공주·부여·예산·청양의 전역, 논산의 일부
  - 금 강 권 : 논산·연기·금산의 전역, 공주·부여·서천·청양의 일부
- 지역공동으로 산업 진흥, 환경·자원 관리, 관광·문화기반 조성, 지역이 협력하여 교통망과 정보망을 구축
- 권역별로 기능을 특화하고 광역적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권역별, 권역간 광역기능의 공동설치와 협동적 이용으로 공공투자 효율성을 제고

### 2) 권역별 개발구도

- 북부권 : 아산만권 개발거점, 서해안개발 교두보
  - 국내외적 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철도망·고급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

고 수도권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분산 수용

- 도시간 및 도시와 산업지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합기능 신도시 건설,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추진

○ 서해안권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결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지구를 조성하여 무역항 및 자유무역지대와 연계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 환경 연구·관리 및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백제권 : 전통문화·청정환경·첨단녹색산업 융합지대

- 백제 고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교육·관광·휴양 기능을 특화하여 한국적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
- 금강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 구축
- 농업·농촌의 미래를 창조하는 농업기술 개발·보급의 중심지로 육성

○ 금강권 : 물류·유통·첨단생명산업·근교특화농업지대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덕밸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 근교 및 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 금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 2 거점도시권의 육성과 성장관리

### 1) 서해안 거점도시권 육성

- 기존 및 신규의 전문화된 중소규모 집적지들이 교통·정보망으로 긴밀히 연계된 성장거점권으로서, 충남 서해안지역의 여건상 단일의 대규모거점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그 실현성, 개발 소요기간, 인접시·도에 대한 선발이익 확보 등의 면에서 유리함
- 복수의 집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도시 특화·전문화와 신시가지 개발, 산업·물류·유통거점 조성, 항만배후 및 IC 연접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함
- 이러한 거점(도시와 각종 집적지)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와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 종합이용,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 구축하며, 도·시·군간 협력체제 구축

### 2) 천안·아산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 천안·아산시간 협력에 의한 성장관리를 통해서, 국도 21호 주변의 과다한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광역도시권을 형성
- 이를 위한 세부 시책방안은 천안시-아산만권신시가지-아산시간,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와 읍급도시들이 전문화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네트워크형 도시·산업체계를 형성하고,
- 고속철도 역사와 천안·아산의 기존도심을 중심으로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며, 광역시설의 분담배치 및 공동이용을 도모하며, 집



약적인 개발과 적절한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원절약적 토지 이용 관리를 도모

-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충실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협력의 토대를 만들고, 핵심사업 공동추진 등 지자체간 공동노력과, 각종 문화사업 공동추진, 교육시스템 통합 등 민간차원의 통합노력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 3]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육성 및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 1) 기존 도시의 특화기능 활력거점 조성

- 기존 도시의 핵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도시형 신사업 육성, 전문기업지구 도입 등의 “도시의 핵심기능 활성화사업”과 고도 옛모습가꾸기 등의 역사·문화·경관가로 조성, 대학타운·학사촌 조성 등 “도시별 고유자산 활용사업” 등이 포함됨
- 도시별로 그 특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 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 정비기법을 도입·적용하며,
  - 단기적으로는 충남의 도시들이, 중앙정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시범도시정책, 소도읍종합육성정책 등의 모델도시로 선정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
- 도시의 고유자산 활용방안으로서 고도 옛모습 가꾸기사업을 심화 발전시키고, 충남 고유의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전개

● 시지역 구도심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천안시 구 도심은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여 도시 중심 업무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 도시화 과정에서 경부 고속철도 입지 등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및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으로 도시기능이 편중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구 도심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구 도심 지역의 기반시설확충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 사업 및 사업량
  - 주거환경개선 : 남산지구 외 5지구
  - 도시계획도로정비 : L= 1,418m
  - 재래시장 활성화 : 주차장 시설외 17종
- 사업비 : 3개 분야 323억원(국비126, 도비 11,시비 186)
  - 주거환경개선 210, 도시계획도로정비 56, 재래시장활성화 57
- 사업기간 : 2001 ~ 2005

## 2) 인간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도시가로망 정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시 주변 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및 시설 확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밀도 유지
- 문제주거지 정비를 위한 최저주거 및 주거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지구단위의 주거환경진단·정비유형구분·정비계획수립 등 계획체계 구축

-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 자연적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보전, 역사적 건축물 주변 정비, 전통거리 복원·정비 추진 등을 위하여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작성하고,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

#### 4 새로운 혁신과 발전거점으로 신시가자신도시 개발

- 서해안권배후중심도시 건설
  - 서해안권 행정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전통과 더불어 광역적 중심기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홍성읍 기존시가지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신시가지 조성하고,
  - 교육·문화기능과 내륙형 첨단산업기능 및 농축산물의 가공·유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서해안권 일대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성과의 역내 귀착 유도
- 당진배후도시 건설
  - 아산·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유입인구와 산업·업무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배후 지원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 기존시가지(당진읍, 신평 등)와 신시가지가 통합된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산업 지원기능과 정주생활권 중심도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되, 특히 계획면적의 76%를 녹지로 유지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로 조성
- 대산산단배후도시 건설

- 대산·대죽산단 등 대규모 산업기능, 국제물류·유통기능, 산업단지 배후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 재정비와 연계하여 신시가지를 개발하되,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을 각각 3.1%, 0.3%, 10.7%씩 배분하고, 기존의 자연환경과 농경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계획면적의 50.5%를 녹지로 확보

○ 계룡신도시 건설

● 「계룡특례시」 설치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89년 국가 중추기능인 계룡대(3군 본부)가 신도안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 건설과 市 승격 목적으로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었음
- 그 동안, 계룡신도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도시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호남고속도로 계룡IC 개통 등 최적의 전원형 도시개발 여건을 구비,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 도시행정에 부합하는 교육, 문화, 교통, 치안, 소방지원체제가 취약하여 주민 불편이 큰 까닭으로 7천여 국방 핵심요원의 가족이 이주를 기피하는 실정임
- 이러한 계룡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 중추기능에 걸맞는 행정지원과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계룡특례시」 설치를 추진

□ 사업내용

-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
  - 「特例市」를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성격 명시
- 계룡특례시 설치
  - 독립된 행·재정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 「과학기술인 휴양촌」 건설

□ 배경 및 목적

- 「대덕연구단지」~「대덕밸리」~「계룡대 국방과학기술정보」와 과학기술인의 전당과 Net Work체제 구축으로 과학기술발달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계룡 신도시를 군사과학도시로의 육성해야할 필요성 대두
-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들은 중부권 생활리듬에 정착되어 퇴직후 수도권 이주보다는 계룡신도시의 쾌적성과 청정성을 크게 선호하고 있어 계룡 신도시 노후생활 정착을 희망
- 계룡연구단지 퇴직연구자들의 지방정착 유도로 휴식과 재창조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전문인력의 연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경제활성화를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총사업비 : 960억원(국비 500, 도비 180, 민자 280)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6,000평(부지 22만평)
- 위 치 : 논산시 계룡 신도시내

○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종합복지 관련시설 확충

- 휴양시설 : 과학기술인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콘도와 전망대, 사격장 등의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 기념공원 : 다목적 공원 형태를 띠며 작고한 과학인 유해를 담을 추모의 공간,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박물관 등
- 실버타운 : 은퇴과학자의 요람이 될 전원주택촌 모델로 건립, 생활관, 공공이용시설 등
- 과학기술거래센터 : 연구성과물을 판매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 운영, 노후생활 수입원확보 등
- 지방과학기술진흥원설립 : 과학기술에 대한 양질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확립

- 3군본부(계룡대)의 배후지원도시로서 '90년부터 계룡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 간선가로망과 염사·금암·왕대 등 주거·상업·공업지역 617만평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대덕밸리 및 계룡대와 연계된 디지털 군기술(DT) 관련 산업·연구·교류기능을 집적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자족적인 신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 육·해·공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지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계룡특례시」 설치 추진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건설

●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 건설

□ 1단계 사업내용

- 「역세권 1단계 100만평」의 개발 추진
  - 지 구 명 :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 면 적 : 100만평                      - 수용인구 : 3만 8,000명
  - 사업기간 : 2002~2006(4년)      - 사 업 비 : 7,000억원
  - 시행주체 : 주택공사
- 1단계 이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
  -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기반시설 확충
  - 민자유치 및 사업화계획 수립

□ 2단계 사업내용

- 규 모 : 886만평(계획인구 : 17만 5천명)
- 사업비 : 2조 3,200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6 (10년)

- 아산만권 신산업지대의 배후 지원과 산업교역의 교두보 확보 및 수도권 기능이전수용을 목표로 2003년말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886만평에 인구 17만 5천명 수용규모의 신시가지로 개발하고자 추진하여 왔음
- 그 동안 IMF 경제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우선 「1단계 역세권 100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있음
- 민자유치 및 사업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복합, 자족기능의 신도시 모델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을 이전수용 「지역균형발전 및 도세 확충」에 기여토록 함

#### ○ 장항신도시 건설

- 군산·장항광역권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장항산업기지, 장항항·장군신항, 장항유통종합단지 구성에 따른 신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천읍과 마서면의 연결지점에 조성

#### ○ 도청이전 및 신도시 조성

- '89년 대전시의 직할시 분리승격으로 도청이 관할행정구역 밖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중추관리기능 수행 어렵고 행정의 비능률과 행정비용의 증가 등 행정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욕구증대로 '91년 제4대 도의회 구성으로 도청이전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도내 최적지에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200만 도민의 숙원 해소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개발 촉진토록 함

● 도청 이전 및 신도시 조성

□ 추진방향

- 타시도 사례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 업무 추진
- 공정·투명한 절차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 도청 이전후보지 선정
  - 특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 사업개요

- 도의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도청이전 사업본부」 설치
- 행정자치부와 도청소재지 변경 협의
- 도청소재지 변경조례안 도의회 상정
- 도청이전 추진 시기 및 자원 조달 등 세부계획 마련
- 재원확보 및 도청이전사업 추진

## 5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

### 1) 농·산·어촌의 산업 활성화와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 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 환경농업 육성, 녹색 및 생태관광 육성 등 생태·환경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새로운 농촌산업 육성
- 도시민의 농업생산 체험, 이벤트 도입, 지역자원 활용 창조활동, 자연관찰, 산업·문화·교육교류, 휴양·여가선용 등의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중심지 계층별로 도시적



편익시설을 적정 배치하고, 농촌지역과 중심지간의 교통·정보통신 연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제고

- 농촌마을은 일체적인 생산·생활공간의 정비로 편리성을 제고하되, 마을 고유의 경관·환경·지형·문화자산 등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

## 2)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및 대상지역 확대

- 청양·홍성·태안·보령 등 기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산·서천·예산·부여 등을 새로이 지정하여 개발
-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조건불리 정도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시·군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자원·지형조건·기초생활권·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유사성과 관련성이 높은 면지역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 3)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특성의 자원화

- 정기여객선 미취항도서 해소·고속화·운항회수 증편, 항포구시설 정비, 도서 내부도로 정비, 헬기 등 수송수단 혁신 등의 교통체계 개선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교육시설의 확충 및 원격교육 확대
- 보건·위생시설 확충, 악천후시 긴급환자 대책 마련, 급수난지역 및 미전화지역 해소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지역산품의 특화, 생물·경관자원 보전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교육시설의 확충 및 원격교육 확대
- 보건·위생시설 확충, 악천후시 긴급환자 대책 마련, 급수난지역 및 미전화지역 해소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지역산품의 특화, 생물·경관자원 보전

## 6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개발 경영 추진	개발권의 설정과 협력적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개발경영권간 산업·환경·자원관리·문화관광 공동 구축 및 운영</li> <li>• 광역시설 분담설치 및 공동이용</li> </ul>
	권역별 특화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부 권 : 지식산업에 특화된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li> <li>• 서해안권 : 해양관광지로 육성</li> <li>• 백 제 권 : 박물관 도시로 육성</li> <li>• 금 강 권 : 첨단산업·근교농업·수변생태계의 전원도시로 육성</li> </ul>
거점도시권 의 육성과 성장관리	서해안 거점도시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 거점도시권 조성계획 수립</li> <li>• 도시·산업·유통·물류거점 선정 및 개발</li> <li>• 거점간 연계교통·정보망 구축</li> </ul>
	천안·아산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아산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li> <li>• 자치단체간 다면적 협력체계 구축 운영</li> </ul>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육성 및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활력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별 “핵심기능 활성화사업” 및 “고유자산활용사업” 추진</li> <li>• 市지역 구도심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천안시)</li> </ul>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로망 정비 지속 추진</li> <li>• 적정 개발밀도를 유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li> <li>• 최저주거 및 주거환경 기준 설정, 진단·정비방법 체계화</li> <li>• 도시경관계획 수립 추진</li> </ul>
새로운 혁신과 발전거점으 로서 신시가지· 신도시 개발	쾌적 주거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발전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 건설</li> <li>• 당진배후도시 건설</li> <li>• 대산산단배후도시 건설</li> <li>• 계룡신도시 건설(계룡특례시 설치, 과학기술인휴양촌 조성)</li> <li>•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 건설</li> <li>• 장항신도시 건설</li> <li>•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li> </ul>
농 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	테마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농촌산업 육성</li> <li>• 도·농교류 활성화</li> <li>• 농촌공공시설의 적정 배치 및 도·농간 교통체계 개선</li> </ul>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과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속 추진</li> <li>• 금산·서천·예산·부여 등은 신규 지정·개발</li> </ul>
	도서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특성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체계 개선, 교육·보건위생시설 확충, 응급구호체계 정비</li> <li>• 도서특성의 관광자원화 및 생물·경관자원 보전 추진</li> </ul>

## 제2장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 충남

도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스스로 노력하고 도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도내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며, 복지·의료·여가·레저·관광·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3차산업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은 3각 테크노벨트축에 형성되는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첨단산업, 임해산업, 전통산업이 상생하며, 산업간, 기업간의 분업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대중국 교역 및 국가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활동을 통한 지역의 혁신잠재력의 극대화 하고, 천안·아산의 대학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체계가 강화하여 지식경제의 중심지를 형성한다.

지역민,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인 등 산업경제 주체간의 협력체제를 통한 역동적인 산업공동체 형성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범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충청남도가 미래형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21세기형 농업기반 구축, 토지이용형 농업육성, 녹지생태계의 보전·육성과 산림의 생산성 제고,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확충,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육성과 미래형 어업기반 확충,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 등을 추진한다.

## 1 21세기형 농업기반 구축

### 1) 교육혁신을 통한 유능한 영농후계자 육성

#### ○ 농업인 교육기능의 강화

- 선진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네델란드 1PC를 모델로 「농업 테크노파크」의 실용교육기능을 역점 강화
- 주입식 강의교육을 축소하고 현장 체험식 실습교육을 확대
- 작목별 전문연구원이 연구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추진
- 농업인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을 확대하고, 특정작목에 대한 교육비 일부 실수요자 부담

#### ○ 벤처 농업인 육성

- 농산물 가공 벤처관 신축 : 115평(개방실험실 미생물발효실 등)
- 벤처농업과 신설 → 식품개발, 기능성물질 · 농업정보 기능 강화
- 산 · 학 · 연 벤처시스템 구축 및 벤처농 창업 · 육성지원

● 농업 기술·교육 혁신

□ 사업의 배경

- WTO 신체제 출범과 무한경쟁 시대 도래
-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 교육기능 필요

□ 사업의 목적

- 외국 농산물 및 국내 타산업과의 경쟁력 확보
- 농산물 생산·가공·이용·판매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 창출

□ 주요내용

- 충남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 혁신
  -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벤처농업기술(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 농업인 교육기능 혁신
  -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교육기능 확립
  -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 양성

## 2) 정보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경영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농업관련정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농업관측과 정보전달체계 구축
- 고려인삼 정보센터 설치 : 2003년~2004년까지 50억원 투자
- 유통정보 : 「디지털 농정유통센터」 (중부물류센터내)
- 종합정보 : 디지털 농업정보은행 (농업테크노파크내)

## ○ 정보화 교육강화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정보화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 영농교육의 교과과정을 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

## ● 농업정보 혁신

##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1C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
- 정보화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고 나라전반으로 확산되어 농어업 여건을 변화시키고 있어 농어촌의 정보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실정
- 도·농간의 정보격차가 상존하고 또한 정보화가 농어촌 실생활에 친근하게 접목되기까지는 정보 인프라구축은 물론 운영 Soft Ware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농가호수감소, 고령화 등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 지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농촌정보화가 필요

##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내용 :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축산물류센타와 연계
  - 기반조성 : 통신망 확충, 인력교육, 컴퓨터 보내기 운동전개, 정보화 마을 육성
  - 콘텐츠 확충 : 경영정보, 화훼정보, 생활정보, 상품정보
  - 디지털유통 활성화 : 농업인홈페이지, 사이버장터
  - 행정정보화 : E-농림행정, 인터넷농정서비스

## ○ 「디지털농정 10대 사업」을 실용성 중심으로 확대 개편

- 판매채널 강화(농수산방송, 충남푸드, E-고향, 팜모아 등)
- 맞춤형 컴퓨터 교육 : 지역농협(초급)→기술센터(중급)→물류센터(전문)

- 농업정보 119서비스 확충,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교육 등
- 출향인사, 기업 등과 연계하여 농촌사랑의 컴퓨터 보급운동
- 농촌지역 읍면단위에 디지털방 운영
  - 농업정보119서비스 요원(공주대, 충남대)의 마을전담자 지정배치
  - 농업인 생활 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컴퓨터 교육 연계 실시

### 3)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첨단기술 소득화 및 기술지도 네트워크 형성
- 농업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 및 우량묘 생산
  - 생강, 마늘, 감자, 딸기, 국화, 백합 등 바이러스 무병작물 육성
-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p>● 농업테크노파크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 210천평</li> <li>○ 사업기간 : 1998 ~ 2003</li> <li>○ 사 업 비 : 522억원(국비 173, 도비 349)</li> <li>○ 주요시설 : 농업연구·정보, 농업인교육복지시설, 과수시험포장, 온실 등 조성</li> <li>○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실용교육 및 정보활용 교육 강화</li> <li>-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업혁신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정</li> <li>- 농업인 상호간의 「벤치마킹」시책(현장방문 프로그램 등)확대 시행</li> <li>- 네덜란드 IPC를 모델로 「농업테크노파크」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마련</li> </ul> </li> </ul>
--



-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및 벤처농업기술 연구개발 · 보급지도
- 신기술(Bio-T)을 통한 축산업 수준 향상
  - 한우수정란과 체세포복제소 이식(4천두)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
  - 초음파 진단기 보급(60대)을 통한 가축 공태기간 최소화와 생체육질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 벤처농업 박람회 개최

● 벤처농업 박람회 개최

□ 사업의 배경

- 농산물 1차 산물로서의 경쟁력 대응은 한계에 직면
- IT·BT 등 관련기술 접목으로 농업을 종합생명산업으로 인식 필요

□ 사업의 목적

- 농업과 타산업(정보,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접목기술 기획·연출로 새로운 시장(틈새시장) 창출 계기마련
- 농업인에게는 아이디어와 모험심으로 무장한 기업가적 경영 마인드 확산

□ 사업의 내용

- 개최시기, 규모, 내용 등 자문중(자문비 추경반영)
  - '05년 개최시 인삼 EXPO와 중복, '06년 봄 개최 구상
- 장 소 :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일원
- 행사내용
  - 메인 테마관 운영(5~6개관)
  - 기타 프로그램(세미나, 경진대회, 문화행사, 농사체험 등)
  - 박람회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농업축제로 개최

#### 4) 유통혁신을 통한 농산물의 시장기능 강화

-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전자상거래 확대
  - 대형할인매장과 연계하여 농특산물판매하고, 농수산방송, 충남푸드, E-고향, 팜모아 등 판매채널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의 확대
- 품질 인증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화 지원
  - 도지사품질추천제를 확대 실시
  - 당진 쌀, 간척지 쌀, 특수재배 쌀 등으로 나누어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가가치 증대

##### <개별브랜드 육성과 충남쌀 광역 이미지 제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브랜드 육성사업</li> </ul> | <p>: 시군별 특성에 따라 대표브랜드 집중 육성</p> <p>(예 : 보령특미, 당진쌀, 서천냉각쌀 등)</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이미지 제고사업</li> </ul> | <p>: 소비자에 대한 충남쌀의 친환경성</p> <p>개별브랜드 특성 등 중점홍보·판촉 지원</p>         |

- 충남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인삼, 약초 등의 수출확대

#### ● 농산물유통의 혁신

#####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수년동안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 재원을 투입한 결과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된 단계(산지유통센터 29, 물류센터 1, 공판장 6, 도매시장 1)
- 정부주도의 통일성 때문에 다양성을 잃었고, 기반시설 구축에만 치중하여 양적으로는 증대되었으나 농가소득의 가득움이 떨어지는 등 질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증대사업으로 전환 특히, “농가소득의 가득을 제고” 및 “판매직접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유통의 혁신 상품화 +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사업의 주요내용

- 산지유통거점조직 지원 :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자금
- 품질인증사업 추진 : 도지사품질추천제도의 발전적 변화
- 브랜드화 지원 : 브랜드개발 및 경연대회 개최
- 마케팅 지원 : 마케팅행사지원, 사이버시장 판촉
- 명품화사업단 운영 : 명품지정 및 품질관리

## 5) 기능혁신을 통한 농정의 효율화

- 「농정현장 기획단」을 구성
  - 현장여건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농정혁신을 주도
- 농정파라다임의 전환
  - 농정의 목표를 식량안보 및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고양

-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소비자까지 확대
- 농정의 수단, 추진방식을 개방적, 자기 책임적, 상향식, 열린농정

○ 공무원 교육의 활성화

- 급변하는 농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의 활성화

● 농정기능의 혁신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세계 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은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농정 마인드에서 혁신적 탈피를 요구하고 있음.
- 농업경쟁력의 요체는 지방의 다양한 지역특성에서 찾아보아야 하며 농촌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농정서비스야 말로 자치농정의 절대적 과제
- 지역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방농정의 기능을 단순히 중앙정부정책 집행 수준에서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나감으로써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농정현장화 기획단』 구성·운영
  - 민·관·학·연의 지역농업전문가 및 각 실무부서 책임자 참여
  - 제도상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정리하여 중앙정부 건의  
(재해지원기준, 정책변화예고제, 사업비 지원방식개선 등)
  - 법적 민간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현장여론수렴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건의
  - 지방농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장교육 활성화

## 2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의 육성

### 1) 시장기능 중시의 경영안정화

- 호당 경영면적의 확대
  -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
  - 대형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필지의 면적 확대
- 대체작목의 개발 및 대체작목의 적정 재배
  - 쌀의 공급과잉과 값의 상대적인 하락에 대비하여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
  - 대체작목의 과잉 출하에 대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강구
- 한우 사육기반 확보 및 품질의 고급화
  - 한우송아지 『안정적 재생산』 유도
  - 한우 유명브랜드 집중개발 및 한우경진대회 실시

#### ● 가축의 유전자은행의 설립

##### □ 배경 및 목적

- 식량농업부문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 생산성이 높고, 질병저항성이 크고, 생산환경적응력이 강한 가축 자원개발 필요성 대두
  - 재래가축의 지속적 유지·보존체계확립 필요
- 가축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가축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확립 하고, 재래가축 등 멸종위기 동물의 지속적 유지 보존함은 물론, 유전적 다양성의 보존을 통한 생명산업의 소재를 확보코자함

##### □ 사업내용

- 경제형질이 우수한 재래 가축확보 및 보존
- 재래가축의 동결정액, 난자, 수정란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 생리적인 특수성 시험연구와 생식세포 동결보존 및 확보 추진

-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확충
  - 한우 사육기반 확보 및 품질 고급화, 유명브랜드 집중개발, 돼지고기 수 출농가 및 토종 돼지마을 육성 등
- 한우 초음파 진단기 지원
  -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한우관련 조직체 및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고품위 맞춤형 축산물 생산기지로 전환
  - 모돈갱신(3만두)을 통한 규격화, 국제화된 축산물 생산
  - 우수 종모돈 액상정액(2만두)을 수출 전업농가에 공급
  -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방안 마련(14억원)
- 해양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어업기반의 완비
  - 연안어장의 정비
  - 해양오염방지 및 전용 소각로 설치
  - 기르는 어업기반조성
  -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 수산자원 조성·보호사업을 확대하여 “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 바다자원을 이용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어촌생활환경 개선
- 종합관리형 어업 육성
  - 종합기능형 어항개발 추진
  - 잡는 어업에서 관리형 어업 중심으로 전환
  - 도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연안관리 추진

## ○ 녹지생태계의 보전육성 및 산림의 생산성 제고

## ● 녹지생태계의 보전육성 및 산림의 생산성 제고

## □ 사업의 배경

- 산림이 전 면적의 52%(443천ha)를 차지하는 우리 도에서 산림의 생산성 증대방안 강구는 그 필요성이 절실
-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50조원 (1인당 106만원)
- 임업 총생산 규모는 연간 1조 7천억 (국민총생산의 0.3%)

## □ 사업의 목적

- 녹지생태계 보호
  - 체계적인 산불예방·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 산림 병·해충방제를 통한 우량한 숲 조성, 깨끗한 공기 공급기능을 증진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산림경영 기반확대
  - 산림 내 임도시설을 지속적 확충
  - 임산물유통체제 구축 등 임산물 생산의 단지화·규모화
  -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경영인 확대 발굴 육성

## □ 사업내용

- 생태계 보전육성 : 산불예방·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보호수관리
- 산림의 생산성 제고 : 임도시설, 자원조성,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산지소득증대, 임업경영주체육성

## 2) 특화작목 육성

## ○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

- 지역별로 인삼, 고추, 생강, 어리굴젓, 마늘, 갯잎 등 지역 별 특화작목의 선별 육성

- 밤 방제장비, 표고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등 지원

- 소득원 개발을 위한 수종 갱신지내에 더덕재배 추진

○ 화훼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

- 차별화되는 생산단지 조성 ; 고품질화훼생산지원, 허브공원조성, 수출경  
영체 육성, 백합종구전업생산

-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과 함께 홍보 강화 ; 꽃전시회 개최, 유망화종, 품  
종에 대한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 지원

- 화훼 연구기능 강화 ;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신품종 육성, 화  
색 · 형태 · 향기 · 미각 · 약용 이용 벤처제품 개발

○ 월드마케팅용 공동브랜드 개발

- 충청남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월드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세계 속의 충남 건설

● 공동브랜드의 개발

□ 사업의 배경

- 세계화의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우  
위 확보가 중요
- 지방정부에서도 그 동안의 국가 중심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할 필요성 증대

□ 사업의 목적

- 국가나 지방정부의 이미지는 그 지역의 상품구매, 수출, 관광 등과 직결되는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수출지향적인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지역 이미지의 향상은 상품수출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도 큰  
영향을 줌
-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3) WTO협정 영향의 최소화

-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
  - 직접지불제의 선별적 확대 실시 : 저농약, 저화학비료, 특수농법의 사용하는 경우 우선 대상으로 실시
- 농가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위험관리 강화
  -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수익률 감소를 감안하여 농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농림부 농안기금 5% → 4%, 도 농어촌진흥기금 5% → 3.5%)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단감, 복숭아 추가, 운영비 50%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제도」 시행
-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 지급단가 인상, 논의 담수의무해제 및 재배작목자유화 등
  - 친환경직불제 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발직불제 시행
- 은퇴농가와 소농의 농지에 대한 유동화의 지원

### 4)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

-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일류 수출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인삼 엑스포를 개최

●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

□ 사업의 배경

- 한국인삼산업은 세계적인 성장에도 세계시장에서 위축
- 급변하는 국제시장 유통환경 대응부재 · 수출전략 미흡
- 이러한 현실타개와 인삼산업 육성 · 수출증대를 위해
- 농림부는 세계일류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의지 표명
- 충청남도에서도 인삼생산 · 유통의 중심지로서 세계화노력 경주

□ 사업의 목적

- 생산 · 연구노력과 함께 홍보 · 마케팅 중심의 국제행사 개최
- 「고려인삼 정보센터」를 설치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 생활화

□ 사업의 내용

- 주 관 : 농 림 부
- 「고려인삼」 브랜드 관리면 등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
- 시 기 : 2005년을 시작으로 4년 주기 개최
-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준공 이후 메시지 효과 극대화
- 장 소 :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 종합전시관

### 3 환경 친화적 농수산업의 육성

#### 1) 쌀의 특수재배 면적의 확대

- 쌀의 특수재배(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지역의 확대
- 충남 특수재배 쌀의 전국 명미화 추진

- 친환경을 테마로 우수브랜드 육성(시장평가 6위 → 1위 목표)
- 차별화되는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 친환경비료 지원
  - 특수농법 명미화단지 육성
  - 유기재배 시범단지 육성
  - 기능성쌀(예 : 키토산쌀)생산
- 품질 고급화
  - 완전미 생산기술 연구기반 구축
  - RPC 연계 충남특미 생산시범 : 기술원 · 아산센터 · 영인농협 공동
  - 친환경비료 · 지력증진 · N비료감량 · 병해충방제 · 수확후 관리
  - 벼(원료곡) 他道반출 금지 → 쌀 가공판매

## 2)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재활용

-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생태기능의 효율화
  - 벼의 수매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적게 사용한 벼부터 우선 수매제 실시
- 비닐 등의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시범사업(5개소)으로 중고농기계 활용 촉진

### 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원화함

<p>●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활용</p>
<p>□ 사업의 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 축산업의 규모화로 인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활용방안」이 축산분야의 현안 과제로 대두</li> <li>- 2001년도 말 현재 신고규모 이상 설치대상 농가가 98%의 시설을 설치 완료</li> <li>○ 연간 200 ~ 300개소 정도 새로운 시설 수요가(신규 및 시설보완 농가) 발생</li> <li>- 무방류 자원화시설 위주로 매년 250개소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li> <li>-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생산을 촉진하는 미생물발효제 공급과 축분처리시설 활용도 제고 기술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축산경영 입지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li> </ul>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분 자원화시설 중점 지원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유도</li> <li>○ 액비화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li> <li>○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시설 활용 기술교육 강화</li> <li>○ 정부시책과 연계 처리기술 개선 및 비용절감방안 지속 강구</li> </ul>

-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의 철저로 청정지역유지
-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 사료첨가제의 적정사용 유도
- 완벽한 방역으로 수출재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추진

-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형 축산농가 육성
  -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건실한 독립 경영체 육성(2천호 목표)
  -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800개소)으로 축분의 자원화
  - “목장대청결운동”전개(2천호)로 축산농가의 환경·위생관리 개선
- 가축질병 없는 “청정목장” 조성
  - 축산농가 자동소독시설 설치로 완전 차단방역 조치(1천개소)
  - 『일제소독의날』 지속추진을 위한 가축소독약품지원(45천호)
  -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강화로 안전축산물생산(146백만두)

#### 4) 어장의 청결화

-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
  - 어장환경의 지속적 관리와 수자원 보호, 조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침체어망 수거 추진

●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 사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 어구·어망 등이 바닷속에 침적되어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물로 등장
- 어업생산성 저하 및 어선조업 안전 위협
- 침체어망 실태파악 및 수거·처리 시급
- 수년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바다 오염으로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장 훼손 및 수산 자원 감소
- 바닷속에 침체된 폐 어구·어망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로
-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생산성 제고
- 유용수산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경제 활동의 기본적 토대인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2006(5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 : 1,130ha / 1,356백만원(국비80%,지방비20%)
- 사업내용 : 어장생태계 변화 등에 장애가 되는 폐어망 등을 수거

## 4 농·어촌과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 1)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

- 한계농지는 비농업인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농촌의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의 농지가격을 유지시켜 농지의 재산가치 증대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 유희농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

## 2)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및 거주장소의 제공

- 도로, 주택, 생활용수, 쓰레기 처리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지속 추진
- 농촌 의료, 교육여건의 개선 등 농업인 복지 확충
  -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託老所의 운영과 순회진료의 확대실시
-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종합대책 마련작업에 동참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마련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가도우미 지원범위 확대
  - 현재 산후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장기입원 등 범위 확대
- 여성생활복지 거점시설로서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설치
  - 여성농업인의 생활·문화거점시설로 활용, 육아 등 편익 제공
-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농업기술원)
- 농어업인 교육부담완화를 위한 농어업인자녀 교육비지원 확대
- 농어업인단체와 연대하여 (가칭) 「농어업인복지증진법」 제정

-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제정 건의

### 3) 그린투어리즘 기반정비

- 관광, 테마 등 주제 있는 농촌마을 건설 및 여가활용 공간 마련
  - 주5일 근무제에 대비, 개발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관광농 · 어촌을 건설하여 농외소득 증대
- 정주권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생산기반, 생활기초시설, 복지시설, 자연경관 개선 등
- 친환경농업단지, 전통음식촌, 생태체험마을 등 소득화사업 병행
- 농촌지역 녹색자원을 활용한 지역가꾸기 지원
  - 생활기초 및 편익시설, 체험시설, 경관조성 등
  - 유사 사업간의 네트워크화 종합홍보로 시너지효과 제고
  -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어촌체험, 전통테마마을, 산촌휴양마을 등
- 농업관련축제의 관광자원화
  - 품목별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 지역내 기존 관광 · 유적지 등 테마식 관광루트 및 상품개발
- 쾌적한 녹지생활공간 조성 및 다양한 자연체험 학습기회 제공
  - 산림을 활용한 휴양 · 문화공간 및 전원 거주공간 조성
  - 산림욕장, 휴양림의 확대조성
  - 도시숲 조성을 통한 국민생활환경 개선



- 도심과 생활권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
- 산림재해 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
  - 산지 난개발 방지 제도 마련, 채광·채석지 자연친화적 복구
  -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예방, 산림생태계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도로변 소공원 등 도시숲 확대로 국민건강 지원
- 사방댐, 친환경 녹색임도시공 등 자연친화적 개발
- 관광어촌의 육성
  - 체험형 어촌 휴양단지 조성 ; 어촌마을 및 항포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지원, 어업과 관광체험을 접목한 어촌관광모델 및 운용프로그램개발
  - 유어(遊漁)관광의 확대
  - 관광어업 기반 조성 ;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민박시설현대화등 기반시설 확충, 갯벌체험, 바다낚시, 바지락잡이, 그물손질 등 체험여건 마련
  - 「바다고기 숲」 및 「갯벌형 목장」을 조성하여 안정생산기반 구축 ; 낚시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 종합기능형 어항개발 추진 ;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기반시설 확충,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 추진

## 5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산업공동체 형성

### 1)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 국민정부 이후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현장실태 조사결과 규제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토이용계획 변경, 농지전용, 환경관리 분야 등에서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공장설립 승인기간 대폭 단축

○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단 설립·운영

- 기업인 공장설립 대행
- 산업인력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창업·공장설립 민원 일괄처리단」 구성·운영

- 공장설립 민원 최단 기간내에 처리

○ 「공장설립·SOC 지원단」 운영

- 창업 및 공장설립 모든 절차 대행과 공장설립시 도로 등 인프라시설 지원으로 기업투자유치 촉진
- 산단공과 연계 시·군에 전담 「공장설립·SOC 지원단」 구성·운영
- 창업·공장설립 상담·안내 및 애로발굴·해결 등 One-Stop 서비스

○ 환경분야의 법정일지 작성 최소화

- 개별법에서 정한 법정일지가 너무 많아 작성시간 과다 소요

○ 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

- 정부의 지도점검 관리업무의 지자체 일원화 계기를 활용 각 기관과 협의 지도점검 통합 추진
- 기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 지도·점검계획수립 추진

- 면세용도 물품 사용 확인제도 개선
  - 현행제도는 면세용도 물품 구입 후 특별소비세 면제신청의 경우 도지사 현지 확인 후 면세용도 물품확인서 발행
  - 특소세 면제 : 공업용 원재료, 종교단체 구입물품
  - 도에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도에서 시·군 현지확인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
-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
  - 현행제도는 전기용품 수입자가 수입전기용품을 국내에 유통·판매치 않고 수출할 경우 도지사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을 받은 후 통관, 전기용품 수입 매건마다 道 방문으로 민원불편 초래
  - 관할 시·군에서 안전인증면제확인, 면세용도 물품확인 기업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

## 2) 공무원의 산업행정서비스 개선

- 규제개선 못지 않게 규제취급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
- 기업민원 처리도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관행,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법률해석상 혼선, 중복규제, 업무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행태 및 관행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창업업무 추진시 불합리한 관행
  - 창업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기준공장 면적을 보다 많은 면적의 공장건축 요구
  - 농지전용시 관련 법령에 없는 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

- 공장설립신고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 잔존
  -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설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반대무마, 민원발생 방지 등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 민원설명회 개최 등 요구
- 규제행태 답습
  -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제외토록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이행
- 공무원 교육강화를 통한 기업마인드 제고, 기업인과 공무원의 합동연찬회 개최, 경제담당공무원 장기근속제 시행·사기진작, 시군에 대한 도 감사시 감사방법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 교육훈련시스템 개선방안
  - 고도의 행정수행력 배양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시스템 필요
  - 교육·지원 기능 분리 및 교수진 Outsourcing을 제도화 운영
  - 교수단 설치운영 : 3개 담당관실에 하부조직이 없고, 부서 구분없이 6급이상을 교수로 임명, 강의를 진행하고, 총무·운영과는 지원·강의 병행으로 동시전념 곤란
  - 담당관은 수석교수로 보임, 순수강의만 전담케하고, 총무·운영과 요원은 강의중단,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담당관실을 『교수단』으로 통합, 전문성 제고
- 전담교수제 도입
  - 원내교수가 주요과목 맡고 외래교수는 보충적으로 강의케 하여 원내교수의 비전공분야 강의, 외래교수의 미온적 출강 등을 방지
- 학습체제(Teaching&Learning System) 강화
  - 충남 Edu-net 구성 : 忠發研·테크노파크 및 인근 대학 등과 network 구축, 과정별로 참여기관의 전문가와 교육생간 대화·토론 실시

## ○ 실습중심 평가제도 운영

- 객관식 중심 평가로 단편적 지식 전달교육 불가피한 실정임
- 5개 내외의 객관식 평가과목을 2~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실습·토론평가를 확대, 상황인식 및 대안제시력 향상

## ○ 효과적인 연구토론문화 정착

- 과제연구·자유토론이 교육생 평가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나 문제점 인식 및 대안 발굴능력 증진용으로 활용

## ○ 목표관리(MBO)학습 도입

- 교육목표제 시행 : 과정별 특색없이 일반적 과목 강의, 남는 것 없다는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기본·공통·선택과정을 기반·심화·고도과정으로 차별화, 교육생은 과정별 성격·수준에 맞게 근무년수 등 감안 선발하여 과정별 학습수준 단계화 및 적격 교육생 선발 확행
- 현장학습제 강화 : 수료직전에 실시, 부담없는 자유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첫주에 실시, 오리엔티어링→현장탐방→토론식 진행 道政 추진현장의 산 체험과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과정별 성격에 맞는 현장 벤치마킹 수단으로 운영
- 목표공유훈련 실시 : 민간기업의 가치공유·신경영 훈련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합치를 유도, 행정수행력 배가 도모, 한방향 정렬훈련, Brainstorming, 히딩크 경영학 등의 주제로 교육생을 소그룹으로 분류, 토론·발표 중심의 서구식 진행

## ○ 충남 정체성 확립교육 강화

- 도정이념교육 내실화 : 인본복지 및 지식경영 관련 저명인 특강을 확대 운영, 자치제의 올바른 이해와 도민화합 관련 강좌 설정
- 미래가치분야 과정 운영 : 문화관광분야, 기업유치·지원분야, 경영농정분

- 야 등 우리 道가 중점 추진·육성할 미래가치분야 관련 교육 강화
- 국제화 대비교육 확대 : 영어 및 일본어 기초과정만 각 1기씩 운영(4주) 되고 있으나 중국어를 포함하고 영어·일어는 초급·중급으로 단계화
- 도정시책교육 강화 : 매 년초에 읍면동장 및 6급이하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道·市郡 5급까지 포함한 1박2일 합숙으로 확대

### 3) 기업과 주민이 일체가 되는 지역사회 조성

- 기업은 사회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조세부담 등 지방경제 성장의 원천이나 지역기업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나 협조상태는 대체로 배타적이며, 집단민원 등 이기주의가 기업진입 및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대우 등 여러분야에서 주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행정이 기업인들이 지역에 토착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가교역할이 필요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우대시책
  - 선도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선정시 가점 부여
  - 해외상품전시회, 무역박람회 등 해외개척사업시 우선 선발
- 기업과 주민이 화합할수 있는 친교프로그램 개발
  - 기업입주시 지역주민의 환영행사 개최
  -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기업주간으로 운영
  - 노사분규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전개

- 기업유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 시·군정지에 기업인상설코너를 신설하여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업인 성공사례, 생산제품 등을 소개
- 기업이 지역에 토착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 마련
  - 기업인 민원창구를 개설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 중소기업 절세지원반을 운영 영세중소기업에게 조세담당 전문가를 공용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줌
  - 기업인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인 상호 기술·정보교류, 판매지원, 지역주민과 협력방안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시킴
  - 경제분석 기능 강화 : 통계청 등 각종 경제지표 개발기관의 통계의존 지역경제의 전체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 통계기능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경제 지표개발 및 조사, 분석기능 일원화하고, 중앙기관 단순 의존 → 충남경제지표 개발 체계적 관리로 지역경제통계관련 조직 재편이 필요
- 충남을 국내·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월드 마케팅용 공동브랜드」 개발
  - 현행 「도상징마크」로는 국제적 홍보효과 취약, 「삼성」「LG」등과 같은 「충남브랜드」 개발, 세계수출시장 등에 폭넓게 활용

## 6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신산업지구 조성

-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간의 네트워크의 확충을 통해 집중·육성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충남의 산업구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산업과 정밀기기, 정밀화학,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의 발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성장잠재력은 입지적합성에서는 전자·정보기기, 정밀화학, 석유화학, 기술혁신역량에서는 정밀기기, 반도체, 기계, 생물, 신소재가 양호하고, 정책적 육성 의지에서는 전자·정보기기, 정밀화학, 자동차산업이 양호함
- 충남의 1차 전략산업으로는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2차 전략산업으로는 정밀화학,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두뇌인력, 정보기반 등의 연계강화 및 집적화가 필요
- 기존의 연구시설 및 제조시설이 집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집적지를 육성하고, 기업간 유연한 공동투자 및 공동생산, 계열체계를 구축하고, 동이업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연계체제를 구축
- 충남의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이를 공간적으로 전개하는 3각 테크노벨트를 조성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능적인 연계체계 구축

○ 충청권 「트라이 앵글」의 공동발전체제 구축

- 「대청호 선언」의 정신을 살리면서 충북의 「바이오산업」, 대전의 「과학기술도시 조성」
- 충남의 「전자·정보 집적단지」 등 3개 시도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 「트라이 앵글」 체제를 구축

○ 천안·아산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북부테크노벨트는 전자·정보 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신산업지구를 조성

- 천안·아산중동부권은 현재 기업입지가 가장 활발하고, 도시 및 생활기반시설, 교육시설, 산업 및 연구인력의 공급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또한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 대등한 입지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천안지역 :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중 육성
- 아산중동부지역 : 충남 지역혁신체제의 거점 구축과 전자부품,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집중 육성
- 아산서부권 : 인주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 연기, 공주, 금산, 논산지역을 중심으로는 동남부테크노벨트는 중·소규모 벤처지구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TBI를 졸업하는 기업을 중점 유치함

- 연기군과 논산시는 기존 제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대덕연구단지의 배후에서 생산을 담당

### ● 충청권 트라이앵글 공동발전체제 구축

#### □ 배경 및 목적

- 충남의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충북의 「바이오산업」, 대전의 「과학기술도시」 등
- 3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상호 연구, 개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 추진계획

- 항만시설 확충
  - 보령신항, 대산일반항, 장군신항
- 자유무역지구지정 :
  - 장항,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 시대 변화와 조류에 따른 기능을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등 단지조성사업 착공을 추진
- 전자·정보기기집적화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3~2005(3년간)
  - 사업규모 : 부지 326천평, 1,056천원(용자 700, 민자 356)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일원
  - 사업내용 : 전자·정보기기관련 기업 유치(수용)
- 성거지방산업단지 : Display산업 집중육성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설립(아산 탕정면 일원), 국내부품산업 및 기술개발 촉진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 애니메이션 및 게임산업 집중육성
  - 2006년까지 천안백리내에 영상미디어 벤처센터 건립
  - 영상미디어 관련 집적지 형성, 지역혁신체제 구축
- 충남테크노폴리스조성 : 복합 전자·정보기기산업 집적단지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발전포럼 구성·운영
  - 인주공단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
- 연기, 논산 첨단생산화단지, 금산 건강·의약단지 조성
  - 기존의 인삼 및 약초생산, 유통지역에서 가공과 기술능력을 통해 건강·의약단지로 도약
- 동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03~2006(4년간) / 입지선정중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1,500평(부지 2,000평)
  - 총사업비 : 76억원(국비 50, 지방비 22, 민자 4)

- 공주시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구 섬유지구의 지원기능 강화와 교통의 거점이 될 우성면 주변에 통신·정밀기기의 집적지 조성
- 금산군은 기존의 인삼 및 약초생산, 유통지역에서 가공과 기술능력을 통해 건강·의약단지로의 도약 모색
- 서산, 보령, 장항 등 서해안고속도로 축으로 형성되는 서부테크노벨트는 정밀화학,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원기관을 확충함
- 장항국가산업단지와 대산항, 당진항과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묶은 아산만권 자유무역지구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서해안고속도로 IC 주변(해미, 홍성, 광천, 주산, 서천)에 기업입지 수요에 변화에 따라 중소규모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 축산업이 전국의 17%, 낙농품 재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어 동물자원 BIO사업화센터를 설립하여 고부가가치화 추진
- 충남 과학기술 육성기반 조성
- 천안·대덕밸리와 연계 충남 과학기술 진흥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지역과학기술의 정보·유통 시스템 및 기술혁신 기반 구축
- 종합과학기술 홍보관 건립 (계룡 신도시) 과학자 추모공간, 실버타운 (휴양촌) 조성
- 과학기술 홍보관 건립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 과학종합 집적단지 건설
- 지능로봇 경진대회 및 발명특허박람회, 사이언스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7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산업단지 조성

### 1)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조성

-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두뇌인력, 정보기반 등의 연계강화 및 집적화가 필요
- 생산체제가 소품종대량생산체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변하고, 대규모 장치형, 노동투입형 생산방식에서 전문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와 기술과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문중소기업의 공간적 집적지구가 성장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발전 패턴이나 혁신 프로세스의 변화로 인한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물리적인 투자로 미분양 산업단지를 양산하는 결과 초래
  - 2001년 현재 충남은 기존 3개 국가산업단지와 18개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국가산업단지 65.9%, 지방산업단지 97.5%로 국가산업단지는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에 지방산업단지는 다소 높게 나타남
  - 장항국가산업단지 : 입지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계획되어 지정된지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한 상태임

### ●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성

#### □ 배 경 및 목적

- '89년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장항지구 활성화를 위해 수 차례 공약하고  
도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서
  - 동일단지로 지정된 군산지구는 정상 추진으로 국토의 불균형 초래, 주민 집단 반발 등 설득 한계
  - 도류제 축조로 인한 항로 퇴적 등 직·간접 피해보상차원 다양한 경제 활동 기회 부여
- 군산과 연계 개발할 경우 공간적·기능적 통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및 물류비 절감(22.1km) 등으로 공단 착공 절실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환경개선 및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장기간 미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불만 해소 및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추진계획

- 위치/면적 :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서측일원/445만평
- 사업비 : 13,206억원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90 ~ 2006)
  - 어업권보상(토지공사) : 1,724억원(98%)
  - 진입도로 2,3호선(8.6km 건교부) : 471억원

- 석문국가산업단지 : 국내외경기의 후퇴, 높은 분양가, 대규모 용지의 일괄 공급방식, 선분양후 개발에따른 기업들의 과도한 초기부담으로 단지조성이 지연
- 수자원공사와 상호방문 개발방식 협의 및 외자유치 협상 추진 현재 Skycat社('01.6 LOI체결), Ameritrust社('02.1 MOU체결)와 협상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조기개발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道, 수자원공사)

● 석문산업단지 조성

□ 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의 단지 조기개발 요구
  - '91년 국가산업단지 지정후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편입 사유지(980천평) 선보상 및 행정제한 완화요구 등 집단민원 발생
  - 지역경제 침체와 인근단지 개발로 조기개발 열망
- 입지여건의 호전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석문항 건설계획, 국도38호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수송 여건 양호
  - 환황해권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임해공단으로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활용가능
  - 향후 개별입지 제한시 계획입지로의 기업유치 선호 예상
- 장기간 미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불만 해소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위 치 : 당진 석문 삼봉리, 고대 성산리 일원
- 면 적 : 365만평
- 사업기간 : '92 ~ 2008년
- 사 업 비 : 11,197억원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체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1년 현재 632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12,447명의 고용창출
  - 천안시(120개), 아산시(122개), 연기군(71개), 논산시(63개) 순으로 기업유치
-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입지의 수요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
  - 선분양 후 개발→선개발 후 분양, 분양→임대, 자유무역지구지정
- 공영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에만 지원하던 국비보조·용자 및 지방비를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
- 정확한 산업입지 수요조사를 통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적지적시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추진 : 건교부 계획과 연계 도내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 부지활용 추진
  - 충청남도 단지조성 후보지 추천 건의 : 3개단지 (입암, 석문, 장항)
  - 재원부담 : 사업시행자 30%, 입주기업 10%, 국고보조·용자 60%
- 고속도로 I.C. 주변이나 대전권 주변지역에 중소산업단지를 조성
  - 천안4지방산업단지 : 300천평, 1400억원
  - 농공단지 : 신규착공 2개 단지(당진 송악, 서천 장항), 신규지정 7개 단지, 금삼추부, 공주, 예산 관작, 서산 성연→공영개발, 공주 우성, 서산 운산, 공주 정안→민간개발, 논산에 87천평의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인주에 30천평 영세중소기업임대단지 조성, 부여에 23,871평의 전통공예단지 조성
  -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추가조성 : 서북부지역 1개소, 10만평, 500억원
- 복합해양레포츠 산업단지 조성
  - 관창지방산업단지 미분양지 활용, 레저스포츠용품 전문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 배경 및 목적

- 서해안권 관광여건 변화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해양관광객 지속증가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로 서해안권 관광지 급부상
-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 가족단위 해양레포츠, 문화레저활동 등 다양한 여가문화가 직장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생활패턴 변화

□ 추진계획

- 해양레포츠용품 생산 전문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관광의 거점산업으로 중점육성
- 지역내의 인적·물적자원과 환경여건 등 성장잠재력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의 해양레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 레포츠 용품 관련산업육성
  - 레포츠용품 생산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거점 산업으로 특색화
- 지역경제 및 레포츠문화 대중화에 기여

## 8]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 벤처기업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높은 혁신성과 고용창출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의 핵심요인이 될 것임



-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함에 따라 생산방식이 포디즘식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네트워크생산체제로 전환
- 생산과정의 집중화가 해체되고 생산과정의 분산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여 기업의 형태가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 지식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출된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지식경제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 대학, 연구기관, 기업, 예비창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지원
- 벤처기업과 주위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충남지역에 맞는 벤처생태계 조성
- S/W산업 지속육성 및 벤처기업 지속육성
  - T/P와 천안밸리를 연계한 벤처육성 및 기술개발
  - TIC, RRC,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창업 및 기술보급
  - 해외기술자 초청, 선진기술국의 IT분야 연수지원
- 천안밸리 조성
  - 천안밸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2단계 보육 및 사업화 지원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창업보육, 생산, 종합적인 기업지원 등을 수행함
  - 대상지역 :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일원, 사업비 : 791억원
  - 벤처종합지원단지 조성은 집적화에 의한 산업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부지가 소요되므로 공유재산인 도유재산을 활용 비용부담을 감소

-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된 미성숙 벤처기업에 대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제품개발 및 상품화까지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 중앙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 조기시행

지원부처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간
행정자치부	Post B.I Plant	70억원	2001~2003
산업자원부	영상미디어 벤처빌딩	230억원	2002~2005
중소기업청	벤처촉진지구 지정	50억원	2001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 충남벤처투자조합, 충남엔젤클럽 기금 활용
- 용자위주의 자금지원 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
- IT, BT 등 신산업에 집중투자, 전략적 육성
- 전통골목산업에 IT·BT를 접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 :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조성,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센터 유치(810억원) : '04년부터 가동, 아산T/C (61만평, 2,956억원) 및 신도시개발과 연계 첨단산업유치
- 충남벤처투자조합 「3호」 설립 : 2002년 50억원 규모로 조성, 연차별 확대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 배경 및 목적

- 영상문화사업은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임
-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애니메이션을 집적화하여 선진 미디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면서
- 지역내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영상문화산업 육성으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인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
  - ※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중
- 영상산업을 활용한 위락공간 조성
- 영상문화 제작·전시·시뮬레이션의 집적 공간화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동 체제 구축
- 영상문화산업의 대중화, 영상문화산업 발전의 구심점 형성, 한국적 영상산업 문화 창달 도모

□ 추진계획

- 위 치 :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구룡동 일원
- 조성규모 : 493천 m<sup>2</sup>,
- 사업기간 : 1999~2005(5년간)
  - 단지기반조성('99~'03.), 애니메이션시설건축('01~'05)
- 사 업 비 : 730억원
- 사업시행자
  - 단지조성 : (주)코아필름, 기반시설 : 천안시

###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건립

#### □ 배경 및 목적

- 이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차원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지식·정보화 시대
  -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양적보다는 지식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 세계 1위인 LCD 모듈생산업체인 삼성전자 공장이 천안·아산 지역에 입지하여 양호한 여건 보유
- 고부가가치 첨단 핵심기술 개발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시험생산공장·기업교류 및 창업보육·연구기관 등 종합지원센터 건립
  - 기업 및 연구기관의 집적과 교류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혁신 창출 거점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충남지역에 총생산 유발 효과 710억원 추산

#### □ 추진계획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일원(삼성 테크노콤플렉스 인근)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5,000평(부지 10,000평)
- 총사업비 : 461억원
- 추진주체 : (재)충남테크노파크

-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조직·기능보강 및 경영지원단(분야별 전문가 31명) 구성·운영, 경영·기술·창업·정보화, 금융자문, 각종 인증 등 입체적 지원, 2002년 회원업체 50개기업, 비회원 중소기업 50개업체 지원,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회원업체 지속적 확충
- 벤처기업의 우수기술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등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를 정례화

● 충남 벤처투자조합 운영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 결과 많은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은 있으나
  -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
- 담보력은 없으나 신기술·신제품 등을 개발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융자가 아닌 투자방식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 하여 지원 필요
  - 창업에서 성장까지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
- 2000년 부터 150억원 규모의 충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현재 25개 업체에 대하여 8,649백만원 투자
- 앞으로 기 운영중인 충남벤처투자조합의 자금 6,351백만원 소진시 추가로 신규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
  - 조성된 자금의 50%이상 도내 업체에 투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0~2006(7년간)
- 결성규모 : 150억원
- 투자방법 : 주식투자, 전환사채, 약정투자, 자금대여 등
- 주관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업무집행 - 신보창업투자)

○ 벤처기업 입지지원 확대

- 벤처기업촉진지구 확대 지정하고 초고속통신망,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 정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통합 관리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입지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업체가 입주할 집적시설을 천안과 아산, 연기군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조성하여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유치와 입지를 제공

○ 벤처생태계 조성

- 벤처기업~벤처캐피탈~코스닥은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

○ 해양 벤처산업단지 건설

- 개발완료된 임해산업단지의 일정부분을 블록화하여 조성

## 2) 전통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

○ 충남의 제조업의 91%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 되었으며, 중소기업기업의 90%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임

- 제조업체수(2001) : 전체 4,530개, 대기업 43개, 중기업 430개, 소기업 4,057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 구 아산시청 활용
-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 집단 입주
- One Roof Service 체제 구축
-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산업네트워크 구축
- 구아산시청 활용,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 등 집단입주, 산업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시 운영체계 미비 등으로 현재 T/P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실정
- T/P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분리 별도운영
- 중기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 중소기업지원기관 확충 : 중진공, 중기청 천안사무소, KOTRA 등
-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 운영
  - 기술개발과제 도출 · 기획, 지역 기술지도 작성, 지역혁신 D/B관리 등 중앙의 산업기술평가원 기능 · 역할 수행
  -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자금 지원 및 중앙 각 부처 R&D자금 유치지원
  - 충남 T/P내 설치
  - 전문위원회, 기술교류회, 자문기구 구성 운영 등 설립기반 구축 · 지원
  - 年内 실무진 구성 및 운영사업계획 마련 산자부와 협약체결
  - R&D과제 수요조사 및 기획 · 평가 · 조정 등 지역산업 기술지도 작성
- 지식 · 기술 공동활용체계 구축
  - 동종 · 이종간 교류회를 조직하고, 회의나 세미나 등을 정례화 하여 기초 지식분야 및 경험지식분야의 보완이 가능토록 추진
  - 고가기기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동종 · 이종간의 공동브랜드 개발
- 입지, 자금, 인력, 기술 및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확대
  - 「고급전문인력 네트워크 중개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풀제의 도입을 통해 도내 대학,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 · 운영

- 충남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산업정보망에 「고용정보망」 구축운영
  - 고용정보게시판, 고용자료실, 구직·구인의뢰 등 콘텐츠 제작
  - 기본계획 수립
- 산업인력 수급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 기업체 인력수급실태조사, 산업인력 양성 등 인력공급 방안
  - 충청남도 산업인력 「총괄지도작성」 효율적 관리
- 산업인력 재활교육
  - 생계유지 부담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 가장, 해직자 등
  - 대전지방노동청,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공조 추진
  - 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 건의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확대
- 「사이버백화점」을 구축 운영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인터넷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지원
- 산업별 특성에 맞는 IT기술을 접목을 통해 전통산업의 첨단 고부가가치화
  -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이업종 공동 R&D를 활성화하여 양산업간 정보격차 해소
  - 전통산업과 IT산업에 파급효과 큰 핵심요소기술개발 지원
  - 전통산업기술의 용이한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별 요소기술의 체계화 및 공용화
  - 기존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대한 IT기술교육 지원



- 농수산업, 건설업, 소매유통업 등 정보화 소외산업분야 인력에 대한 특별 정보화교육 실시
-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 2004년 기계제도 등 51직종, 천안공고 등 5개소
  - 대회유치 및 준비 실무기획팀설치 운영
  - 경기장 시설장비보강 및 대회개최 예산확보

## 9 물류·유통시설의 체계적 배치 및 운영

- 전국적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충남지역은 수도권의 이전기능으로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결점지역인 공주시, 당진군, 서천군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은 상권 및 인구 외부유출이 심함
- 따라서 주변의 대도시들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차별화된 기능을 유치하여 중소규모의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유통거점도시 건설 구상추진
  - 당진 인터체인지 주변, 공주시 우성면, 연기군 ICD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검토 추진
  - 연기군은 중부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예정되어 있고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나 북쪽으로는 천안, 동쪽으로는 청주, 서쪽으로는 공주, 남쪽으로 대전 등 대도시들에 둘러 쌓여 상권의 외부유출이 심함
  - 주변의 천안, 오송, 대덕 등 첨단산업단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전문쇼핑몰 혹은 창고형매장, 국제무역전시관 등을 건설하여 逆勢權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당진군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주변 충남지역의 상권을 흡수할 정도 규모의 상업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현재 총 77개의 시장 (상설 32, 정기 45)이 있으며 그 중 활성화 15개, 침체 53개, 기능상실 9개임
-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총 27개시장, 801억원) : 재개발 13, 현대화 12, 환경개선 2
- 문제점으로는 시장상인들의 보수적성향, 협동심, 개혁의지 부족으로 의견결집 지난하고, 국비분담률(30%)이 낮아 지방비 확보 어려우며, 영세상인들이라 민자부담을 기피
- 따라서 시장상인과의 「만남의장」 마련 및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 운영시장별 문제점 및 대안마련을 위한 재래시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 ⑧ 글로벌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혁신체제는 지역 내 산업의 강점과 약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내 각 기능의 집적을 통해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함
- 과거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주로 한 특정산업들의 일관형 생산시스템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종래의 투입요소에 의한 생산능력의 확충보다는 기술 및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주도형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대학, 자치단체 등 구성요소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허브-스포크 산업생산체제 구축
  - 충남 산업의 생산체제는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기기 산업군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정밀기기, 정밀화학,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킴
  - 선도적인 산업군의 전·후방산업인 동시에 나머지 전략산업과 연관관계가 있는 세부업종을 선정 육성함
- 산업생산-과학기술-기업지원체제의 시스템 연계기관 설립
  - 산업생산-과학기술체제의 연계기관으로는 충남 테크노파크, 산학연커소사업, 기술이전기관, 애로기술 해결기관 등이 있음
  - 산업생산-기업지원체제의 연계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의 지원부서, 종합지원센터,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전담기업 등이 있음
  - 응용연구와 시제품 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충남 테크노파크)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기관(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의 기능확충 및 신규설립 추진
- 지역혁신체제의 자율적 운영체제 구축
  - 지역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시스템간의 상호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를 연계시키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플랫폼은 기업, 대학,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능과 협력주체 및 공간적 차원에서 기업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분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학네트워크, 지역간 네트워크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담당

○ 지역산업발전의 기획·조정기구로 지역발전기구 설립

- 지역발전기구는 지역내 핵심 주체들을 결집하여 지역산업발전을 기획 추진하고 플랫폼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 서울·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개선

- 관 주도 운영방식은 능률과 성과에 한계가 있어 민간경영방식으로 전환 능률과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전환, 성과급지급, 인력 운영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해외통상·교류의 능률과 성과제고 및 자립화 유도

## 지식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체계 확립

○ 21세기는 지식·기술집약산업 중심의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급진전될 전망이며, 이에 고급인적자원의 확보는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커다란 과제임

○ 충남지역은 19개의 4년제 대학과 10개의 전문대학이 있어 연간 25,000여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아산시와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고

● 충남 북부권에 국제영재육성단지 조성

□ 배경 및 목적

- 국제화 시대에 대응을 위한 조기유학 러시
  - 최근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해마다 수천명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는 실정
  - 이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체계적인 세계통용언어 습득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
- 국내 영재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의 교육시설 등 환경 미흡
  - 국내에서는 뛰어난 영재들을 발굴,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제도 운영
  -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영재들이 국내 대학진학을 기피하고 외국 유학 선택
- 국내외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천안·아산지역 일원에 유치원에서 초·중·고·대학을 망라한 학원중심 신도시 개발

□ 추진계획

- 명문대학 「캠퍼스 이전」 등 검토
  - 정보, 통신, 생명, 환경공학 등 첨단기능 중심
- 대학캠퍼스와 연계하여 「국제교육도시촌」 조성
  -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국제교육촌(영어촌, 중국어촌, 일어촌 등) 건설
  - 캠퍼스를 중심으로 서구의 이상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기능 확보
- 대학의 연구기술과 연계된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대학, 연구, 산업을 Net-work 시키는 최첨단 두뇌지식산업단지로 조성

-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층의 역외유출 심화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농촌에는 단순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임

- 이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꺼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의 거점도시 조성으로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급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북부권에는 산·학·연 기능이 복합·연계된 종합대학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식생산벨트를 형성
  - 아산시 신도시개발지구에서 시범교육단지를 조성 지역의 고급인적자원을 배출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종합대학타운으로 육성
  - 연합대학체제의 구축과 대학원대학을 유치하여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유도
- 대학과 도시·지역사회가 결합된 지역사회의 문화·교육활동의 구심점으로 학사촌을 조성하여 도시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향상시키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
  - 교통이 사통팔달로 구축되어 있는 교육의 도시 공주시에는 중부권의 대학도시를 조성하여 대전 및 충남의 대학인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주문식교육, 예약입학제도, 인턴십제도 등 산학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학습능력을 제고

●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산·학·관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는 민선 3기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은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기업체, 학교, 자치단체간 각 참여주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구심점 미비가 원인
- 따라서 기업체, 학교, 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 지방대학 육성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지적자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기술 개발

□ 추진계획

- 사업명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침
  - 도내 소재 지방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호 관심분야 발굴
  -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 협약체결 및 활동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 구심점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시설 상호이용, 학생현장 학습, 교육과정 연계성 유지
  - 지방대학에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 유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대학내 산·학 협력단 설치, 운영 유도
  - 지역기업들과 대학이 협력하여 「특약학과」 설치 유도
- 그동안 추진상황
  - 관·학 협력체결 : 공주대, 건양대, 대덕대 등 7개교
  - 공주대학교 창의력 경연대회비용 등 지원(15억)
  - 한남대 도청이동 대학원(지역개발대학원) 개설 운영

● 기능별 차세대 유망주 체계적 육성지원

□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재양성 관심 부족
  - 人材는 곧 國富로 인재 양성없이 국가 경쟁력이나 나라의 장래 담보 어려움
  - 그동안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자치단체에서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 부족
- 지방인재 확보의 어려움
  - 또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할 때 지방 자치 정착도 가능
  - 그러나 인재와 정보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자치단체는 유능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각분야 전문가 체계적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 이에 따라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밝고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각 분야별 유능한 인재를 우리道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육성

□ 추진계획

- 道內 대학에 가칭 「충남자치행정강좌」 설치
  - 정치신진기예, 경제·복지전문가, 예체능 특기자 등 유망주 육성을 위한 강좌 설치, 지원
- 道費 유학제도 도입
  - 분야별 유망주를 매년 일정인원 선발, 해외유학 실시
- 장학기금 운영 활성화



##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희망있는 고부가 농림수산업 육성	21세기형 농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혁신을 통한 유능한 영농후계자 육성</li> <li>• 정보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제고</li> <li>•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li> <li>• 유통혁신을 통한 농산물의 시장기능강화</li> <li>• 기능혁신을 통한 농정의 효율화</li> </ul>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기능 중시의 경영안정화</li> <li>• 특화작목 육성</li> <li>• WTO협상 영향의 최소화</li> <li>• 세계인삼 엑스포 개최</li> </ul>
	환경친화적 농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의 특수재배 면적의 확대</li> <li>•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재활용</li> <li>•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확충</li> <li>• 연안해안의 청결화</li> </ul>
	농·어촌과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li> <li>•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거주 장소의 제공</li> <li>• 그린투어리즘의 기반시설 정비</li> <li>• 관광, 테마 등 주제 있는 농촌마을 건설</li> <li>• 여가활용의 공간마련</li> </ul>
기업하기 좋은 충남만들기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업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활동 지원정책의 다각화</li> <li>• 일원화된 수요자중심 지원체제 구축</li> <li>• 기업, 주민, 지방정부 협력프로그램 개발</li> </ul>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신산업 지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3각 테크노벨트 조성 및 권역별 특화집적지 조성</li> <li>• 북부권(천안~아산축) : 지식기반산업지구</li> <li>• 서해안권(서해안고속도로축) : 산업구조고도화지구</li> <li>• 동남부권(대덕밸리근교축) : 첨단·벤처지구</li> </ul>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li> <li>• 금산 「건강·의약단지」</li> <li>• 홍성 「동물자원 BIO 사업화 센터」</li> <li>• 보령 「북합해양레포츠 산업단지」</li> <li>• 장항 「재활용수출산업단지」</li> </ul>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촉진지구 확대·지정 및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li> <li>• 산업진흥기술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li> </ul>
	물류·유통시설의 체계적 배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및 대산·당진항 배후에 자유무역지구 지정</li> <li>• 연기군 ICD의 종합물류단지화</li> <li>• 엔터테인먼트형 「주말테마재래시장」 개발</li> </ul>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한 지역 혁신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자치단체의 네트워크 형성</li> <li>• 지역산업발전 기획·조정기구 지역산업발전기구 설립</li> </ul>
	지식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신도시개발지구에 시범교육단지 조성</li> <li>• 산학연계 교육체계 강화로 현장실습 및 훈련 강화</li> <li>• 충남산업인력대책협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li> </ul>

## 제3장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

21세기 국내외 관광패턴은 환경과 문화관광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에 관광을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관광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편리하고, 관광객은 여행에 만족하도록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따라서 관광을 지역의 고부가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며, 관광객에 적합한 선택형 지역 관광상품을 제공한다.

첫째,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산업화 위해서는 거점관광지역과 명소관광지를 육성하여 관광산업기반을 마련한다. 관광기반시설을 갖춘 관광거점지역과 명소형 테마관광지의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관광기념품과 특산물의 브랜드를 지역명품으로 판매한다.

둘째, 서해안의 고속도로 개통과 급부상하는 대중국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을 개발합니다. 해안의 美港의 거점항구도시 개발과 백제·내포문화권 관광루트를 연계하고, 서해안-금강-내륙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도로를 건설하여 다채로운 도로경관 연출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는 숙박·음식·쇼핑시설을 관광도시에 건설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응하는 지역특성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국민 여가활동의 생활화와 주5일근무제 시대에 적합한 선택형 관광상품을 제공합니다. 농·산·어촌에 녹색관광상품의 개발과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과 지역특성을 살린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 문화관광시범 관광도시를 개발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은 생태관광지로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조성된다. 충남의 4대 문화관광축제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각종 지역단위 축제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축제를 차별적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관광권 교통중심지에 관광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관광상품의 판매를 추진한다.

## 1] 관광·휴양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 1) 관광산업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역 개발

- 국내의 수도권, 중부내륙권, 호남권 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충남권 서해안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 ● 서해연안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 □ 배경 및 목적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용이와 서해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갯벌체험의 장으로 각광
- 남해안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으로 서해안 전역을 관광벨트화
  - 서해안 지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명도 향상
- 관광자원의 상호연계로 관광객 유치의 이점 최대한 보장
  -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 □ 기대효과

- 서해안 낙후지역개발 촉진 기여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관광벨트를 지정·개발시 국가지원 및 관심도 배가, 지역발전 활성화
- 환 황해권시대 對 중국 관광거점지역으로 역할수행

##### □ 추진사업 내용

- 서해안을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해안-내륙연계 관광코스 개발
- 인천국제공항에서 충남으로 이어지는 「중국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 관광특구에 차이나거리(음식, 숙박, 쇼핑) 조성,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지역자원 특성별 테마형 관광루트 개발
- 인천~충남~목포간 서해안 연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 2003~2004년중 국비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 연구용역 추진

- 충남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보령·아산관광특구, 공주·부여, 서산 등에 관광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호텔, 음식점, 쇼핑시설, 테마위락시설 등 관광산업 도시로 발전

□ 「Honey-Pot」형 관광거점지역 육성

- 안면도 : 국제적 리조트 휴양지 개발
- 보령·아산 : 관광특구 집중 육성
- 공주·부여 : 백제문화권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화
- 서산 : 산업관광 거점도시화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보완·발전 추진

-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국제적 휴양관광지로 조성
- 특색 있는 관광·레저시설 도입으로 외래관광객 확대유치 ; 환황해권 거점 관광지로 개발, 낙후된 서해안 관광개발 주도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하와이」로 국제수준의 관광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

□ 배경

- 청정한 바다와 안면송 등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안면도의 관광이미지 급상승
- 꽃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가족 및 단체관광객의 지속 증가 예상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꽃박람회의 성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

□ 사업내용

-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과 유기적 연관성을 유지, 꽃지해안 지구를 관광지 개발의 거점화
- 음식점, 휴게소 등을 현지주민에게 임대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여
  -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신선한 먹거리 제공

## 2) 지정관광지 조성과 관광명소 개발

- 명소형 테마관광지의 개발을 위해 지역의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기 지정 23개소중 개발이 정채된 21개소 관광지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 ● 명소테마관광지 만들기와 지정관광지 재정비

#### □ 배경 및 목적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수도권 관광객이 급신장함에 따라 조성과 정비 필요
-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관광패턴의 변화
- 관광지별 매력과 특징적 관광자원 개발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안정적 수용
- 수도권 및 외국인의 다양한 관광수요층 유치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기대효과

-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 및 전국적 인지도 상승 기대
-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대응, 전국 제일의 관광충남으로 도약

#### □ 명소테마관광지 만들기와 지정관광지 재정비 사업내용

-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재정비 사업 도입
- 자연 특이현상, 종교, 인물, 전통문화자원의 관광명소만들기 전개
- 이채로운 지역이미지 창출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사업 추진
- 미개발 지정관광지의 활성화 사업 추진
- 내포음식 특화단지를 홍성 남당, 당진 도비도에 조성

- 「충남 100景」 선정
  - 保全가치가 높은 경승지와 문화유적이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훼손·유실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소중한 자원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 他 시도 사례조사, 선정대상·범위 결정, 시·군 추천에 의한 후보지 선정, 학계·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충남 100景 선정 위원회 구성, 객관적·투명한 선정

### 3) 관광사업자와 종사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자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를 위한 교육과 사업설명회, 관광사업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민간사업자 관광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div>□ 배경 및 목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각광받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관광종사원 등에 대한 관광마인드 향상 필요</li> <li>○ 全 道民의 관광요원화를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 등 전문가 양성 필요, 관광객의 편의 도모</li> <li>○ 외래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봉사과 함께 지역의 주요관광지나 역사문화유적에 대하여 자세하고 알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줌으로서 「친절한 충남인」, 「관광하기 좋은 충남」을 널리 부각 홍보</li> </ul> <div>□ 기대효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관광충남의 이미지 제고 및 충청남도를 한국관광의 중심지로 부각</li> </ul> <div>□ 사업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 제도교육</li> <li>○ 지역주민 사업참여를 사업설명회, 제도, 서비스 교육</li> <li>○ 관광사업 종사원의 서비스교육훈련 프로그램</li> <li>○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li> </ul>

#### 4) 지역 관광기념품과 브랜드로 관광명품사업 추진

- 시·군별 특산물과 공예품을 관광기념품과 브랜드로 특화 개발하여 지역명품으로 판매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에 기여

##### ● 고품질 관광기념품 개발

###### □ 배경 및 목적

- 지역 특성과 부합한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필요
- 국제감각에 부응하고 해외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
- 우수 관광기념품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수입을 증대
- 전래민속품, 토속상품 등 개발 및 생산 업체지원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상품 육성

###### □ 기대효과

- 관광기념품의 세계화와 관광충남의 이미지 제고

###### □ 「지역 관광기념품과 브랜드 개발 사업내용

- 지역공예품, 유·무형의 자원을 소재로 관광기념품 개발
- 지역 농수축 특산물의 브랜드화와 포장디자인 개발
- 도지사 추천 농산물 및 공예품은 관광명품화 사업 전개

- 철화분청사기 「도예촌」 건설

- 공주시 박정자 주변에 제2 도예촌 종합조성, 관광코스로 개발

##### ● 철화분청사기 도예촌 건설

###### □ 목적

- 기존의 도예촌 지역과 연계한 신흥 도예타운 조성
- 계룡산 국립공원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에 조성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 추진방침

- 계룡산 국립공원, 유성온천, 상신리 제1 도예촌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증대
- 옛 철화분청사기 재현을 통한 충남고유의 도자기 산업 육성

☐ 기대효과

- 도자예술품, 도자생활용품 등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선택이 다양한 지역관광상품 개발

### 1) 서해안 거점항구도시와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보령미항의 거점항구도시 개발과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을 관광루트로 연계

☐ 서해안 거점항구도시와 연계 관광루트 개발 사업내용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연계 서해안문화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보령 신항을 국제적 관광항구로 조성
- 서해안을 소규모 항포구 등에 미항 조성사업 추진

- 서해안변-금강변-내륙간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테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테마관광도로 구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와 도로 공원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연출과 휴식공간 제공



● 테마관광도로 건설

□ 배경

- 금강하구둑에서 백제문화권을 경유 대청댐하류 내륙지역으로 연계되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망 확충
- 서해안과 금강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유치 증대

□ 추진방침

- 서해안, 금강변, 내륙지역 연결 「테마관광도로망」 구축
- 서해안 및 중부내륙 관광객 접근성제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 기대효과

- 서해안, 금강변, 백제문화권을 찾는 관광객 교통편의 도모
- 금강변, 백제문화권 연결 관광코스개발 도시민휴식공간 제공

□ 추진내용

- 서해안변 갯벌과 간척지, 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테마관광도로 건설
- 금강변으로로 서천-부여-공주-연기로 연결되는 금강변 테마관광도로 건설
- 서해안 테마관광도로의 태안-남면-홍성-청양-공주-논산의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내륙 테마관광도로 건설

## 2) 주5일근무제 시대 관광객에 적합한 선택형 관광상품 개발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농·산·어촌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주 5일 근무대비 가족단위 주말여행 테마관광코스 개발
  - 청소년 수련시설 연계활용,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역사문화유적·충신·열사·천주교 성지 순례코스 상품화 등
-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강구
  - 기존 관광지를 생태·체험·가족형 관광지로 보완 개발

● 녹색관광시범마을 조성

□ 배경 및 목적

- 주5일 근무제 및 5일 수업제, 2008년부터 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국내 관광 수요 증가 예상
  - 향후 5~10년에 걸쳐 관광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현재 자연경관을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형태가 변화될 전망
  - 도시의 농촌방문객 변화 : (2005년)4,600만명→(2011년)5,700만명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 산촌, 어촌체험이 모두 가능하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으로 수도권시민의 관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해안선 953.3km, 해수욕장 48개소, 자연휴양림 12개소
- 이에, Green Tourism 시범마을과 전통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농사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농외소득 증대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2006
- 대상마을 : 임기중 30마을 선정 조성
  - 녹색체험10, 전통체험5, 산촌체험11, 어촌체험4
- 사 업 비 : 19,900백만원
  - 녹색체험 2,000 전통체험 500, 산촌체험 15,400 어촌체험 2,000
- 사업내용 : 여가기반시설·마을경관·생활편의시설 등 조성 및 전통과 생활체험 P/G 개발

### 3)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지역축제의 차별화 추진

- 충남의 4대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인물·산업·민속 등 지역단위 축제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축제를 차별적으로 육성

#### ●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지역축제 평가제 실시

##### □ 배경 및 목적

- 전통 유·무형의 문화관광축제를 특색 있게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모
  - 관광객이 참여·체험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 지역의 축제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육성·발전
  - 향토축제를 부각시키면서 이미지 각인과 경쟁력 제고

##### □ 기대효과

-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연계로 관광객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향토축제를 지역간의 건전한 경쟁의식을 제고, 지역 발전 도모

##### □ 추진사업내용

-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서천모시문화제, 강경맛깔젓축제 등 4대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 추진
- 축제평가단을 구성 시·군 지역단위 축제 평가제 실시
  - 지역고유 전통문화축제의 수준을 높여 세계속의 축제로 승화발전 도모
- 민속놀이, 제례, 지역단위 이벤트 행사의 지역문화자원화와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체제 구축

- 관광권의 교통중심지에 관광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관광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역 관광정보의 제공과 사이버관광상품 판

#### 매 추진

- ☐ 충남 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사이버관광상품 판매
  - 관광거점도시에 관광정보 및 안내기능 강화
  - 행담도 또는 해미에 비지터센터 기능의 관광정보센터 조성
  - 도·시·군 홈페이지 관광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 사이버관광상품 판매

#### 4) 전통문화공간과 생태자원의 테마관광자원 개발

- 전통과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로 공주, 부여, 강경, 해미, 홍성 등에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으로 문화관광 시범관광도시 개발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추진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

□ 배경

- 공주, 부여, 홍성, 서산(해미), 논산(강경) 등 역사성 있는 충남 고도 지역
  - 원형훼손, 상대적으로 낙후와 개성 없는 도시로 변모함에 따라
  - 귀중한 역사자원을 재조명하고 옛 古都의 역사, 문화, 유적, 환경 등 도시모형을 새롭게 복원 창출 필요

□ 기대효과

- 고도별 특색과 상징성 있는 사업을 추진
  - 찬란했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
  - 지역주민의 자긍심고취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다목적 관광지 조성

□ 사업내용

- 공주·부여 : 백제문화 옛모습 되살리기 거리 사업
- 강경 : 근대건축물 복원·재현사업 추진
- 해미 : 해미읍성 정비사업 추진
- 홍성 : 홍성관아 등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 해안의 갯벌, 사구, 섬 등과 금강과 저수지 등의 습지와 철새도래지 등을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조성

□ 갯벌, 사구, 철새도래지, 간척지 등 생태관광의 환경교육장 조성

- 갯벌과 간척지, 사구, 철새도래지, 섬 등을 해안생태공원으로 조성
- 금강 및 지천변으로 둔치, 강변로, 습지 등에 수변 생태교육장 건설
- 저수지, 논, 하천변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공간 조성
- 산악 계곡, 숲, 갈대밭 등에 생태환경 교육공간 조성

- 「생물다양성관리」, 「생태공원화」, 「생태학습장」 등 21세기형 환경테마공원 조성 관리

## 5) 대중국 관광객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상품 개발

-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여 서해안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쇼핑시설 등을 관광도시 건설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응하는 지역특성의 관광상품 개발

- ☐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역수용태세 확립
  -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거점도시에 숙박, 음식, 쇼핑시설 건립
  - 보령신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국제항으로 조성
  - 베이징 방문관광객을 안면도 꽃박람회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국제관광지 조성
  - 베이징올림픽 전 미니꽃박람회 개최

## 3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관광·휴양 산업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육성	관광산업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 보완·발전 사업</li> <li>• 서해안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li> <li>• 보령·아산관광특구 「Honey-Pot」형 관광거점지 개발</li> <li>• 행담도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 조성</li> <li>• 해미관광종합센터 건립</li> </ul>
	지정관광지 육성과 관광 명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소 테마관광지 만들기 사업</li> <li>• 지정 관광지 재정비 제도의 추진</li> <li>• 내포음식 특화단지 조성</li> <li>•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li> </ul>
	관광사업자와 종사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사업과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수연수원 시설 활용)</li> </ul>
	지역 관광기념품과 브랜 드로 관광명품 사업 추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관광기념품과 브랜드의 관광명품 개발 사업</li> <li>• 도지사 추천 농산물 및 공예품의 관광명품화</li> </ul>
선택이 다양한 지역관광상품 개발	서해안의 거점항구도시 와 백제·내포문화권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신항 및 안흥항 관광미항 조성</li> <li>• 서해안변·금강변·내륙간 삼각 테마관광도로 건설</li> </ul>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적합한 선택형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관광마을을 조성 ; 청정마을 녹색관광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충남 사이버 여행상품 개발</li> </ul>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 와 지역축제의 차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트리엔날레”개최</li> <li>•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li> <li>• 충남의 4대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 사업</li> <li>•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 육성제도</li> </ul>
	전통문화공간과 생태자 원의 테마관광자원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 옛모습 테마거리 조성 사업</li> <li>• 테마 생태관광지로 환경교육의 장 조성</li> </ul>
	대중국 관광객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8년 베 이징 올림픽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베이징올림픽 관광상품 개발</li> <li>• 보령 관광특구내 차이나타운 건설</li> </ul>

## 제4장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세계경제가 전면 자유화되면서 경제활동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사람, 자본, 기술, 상품이 국경 없이 자유로이 이동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환황해권, 환동해권과 같은 지역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 블록화 추세에 따라 기술과 자본 등은 언제라도 이동이 가능하나, 이동이 불가능한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은 지역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인자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충청남도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사회간접자본은 아직 미흡한 점과 개선될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항만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최 근접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무역항이 없으며, 철도 분야에서는 노선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급부상하는 서·북부 산업지대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로 분야에서는 남·북축의 간선도로는 발달하였으나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미흡하여 동·서간 통행에 장애가 있는 실정이고, 물류·유통을 담당할 컨테이너기지 및 화물터미널은 건설이 미진하거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항공기장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전무하여 장래 다양화·고급화될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꾸준히 성취하면 충청남도의 사회간접자본 경쟁력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항만 분야에서는 실직적인 무역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산항 및 보령 신항이 2011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며, 철도 분야에서는 서·북부 신 산업지대 지원이 가능한 동·서산업선 및 서해선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도로 분야에서는 동·서축 및 X축으로 간선도로 연결이 실현될 것이며,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조치원내륙컨테이너기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항공분야에서는 국가 6대 거점별 공항 육성방침에 의해 계획된 공항건설계획은 없으나 지점연결형 소규모공항 건설로 지역거점공항 및 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이 실현되면 대산항 및 보령항은 환황해권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서해안 신 산업지대를 관통하는 철도는 대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남·북축, 동·서축, X축의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사통팔달의 도로교통 구현이 가능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신속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다시 찾고 싶은 길로 탈바꿈되어 지역이미지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항공교통은 소규모 경비행장과 지역 거점공항 및 국제공항간 연결이 가능하여 단시간에 세계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야별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상호 균형을 유지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환황해권 경제블록의 관문으로서 충남 서해안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국토의 중심입지로서 국내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작고 편리한 비행장 건설과 항공 교통망 구축

- 근거리-지점 연결형 컴퓨터 항공교통망 구축
  - 다양한 항공교통 수요에 대처
  - 소규모 공항 개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 서비스 제공
  - 수도권 ↔ 충청권 ↔ 영·호남권 및 서해안권 ↔ 충청내륙권을 지점에서 지역거점으로 연결하는 근거리 항공루트 개발
  - 도서 및 교통오지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항공교통 개발
  - 『서산기지의 군·민간 항공 병행』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으로 복합기능(multi-function)의 서산공항 개발
- 지역간을 연결하는 거미줄 항공교통망 구축
  - 서산공항 개발을 토대로 항공수요가 예상되는 서천, 공주, 천안, 논산 등에 경비행장 건설
  - 경비행기, 헬기 등을 통한 충청남도 내 거미줄 항공망 구축
  - 지점 경비행장으로부터 지역거점 공항 및 국제 공항으로 연결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항공망 구축

## 2 21C 바다경영을 위한 해양개발

- 서해안 신 산업지대 지원 항만 건설
  - 환황해권 무역을 선도하고, 서해안 신 산업지대 지원이 가능한 대산항 건설
  - 대산항을 환황해권 해상물동량 처리를 위한 서해안 관문항으로 육성

- 대산항은 충청남도 내 유일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계획되어 있고, 배후의 산업단지, 아산만권 물류·유통단지 등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서·북부권역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위한 항만으로 육성
- 당진항~평택항간 육로 개설로 당진항-평택항 시설의 충청남도-경기도 상호 공유 및 보완으로 시너지 효과 유도
- 「당진항」 분리지정을 통한 환황해권 해상물동량 처리를 위한 관문항으로 육성

#### ○ 보령신항 조기 착공

- 중국과 가장 근접하고 동북아 및 환 황해 경제권의 기능이 항만 중심으로 변화
- 충남·북권 및 대전권 산업단지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천혜의 여건과 개발의 잠재력을 가진 보령신항 개발
- 동북아 물류거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개발 초기단계에는 북부 및 남부권 대규모 항만의 보조항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중부권역의 물류 거점으로 상항기능의 보령신항만 개발
-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한 신의주~인천~아산~보령~장·군~목포~통영을 잇는 L자형 국내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및 중국 청도~서해안 보령~남해안, 통영~일본 큐슈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 ○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 단순한 어업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어항에서 벗어나 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어항 개발
- 수산업 중심 어항, 교통·물류 중심 어항, 관광 중심 어항, 생활거점 중심 어항 등 어촌·어항 기능별 특성에 맞추어 개발 추진
- 특히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산물 공급 장소, 만남·휴식의 장소,

어획·갯벌의 체험장소, 아름다운 해변환경 감상의 장소, 등 다기능을 갖춘 어항 개발

- 대천항을 여객 터미널, 해수욕장, 어업자원, 도서, 배후기능시설 등 양호한 입지여건을 이용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육성
- 방포항을 수려한 해양경관, 어장, 해변, 수산물 유통시설 등 풍부한 어업자원을 이용한 어항체험 학습장으로 육성

### 3 사통팔달의 육상 교통망 구축

#### ○ 동·서축 및 X축의 간선도로망 구축

-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축의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축 및 X축의 광역간선 도로망 건설
- X축의 광역간선 도로망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 남·북축 간선도로망과의 연계성 강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 대처, 서해안 산업단지 및 항만의 물동량 처리, 내륙 물류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동·서축을 이루는 당진~천안~울진간 고속도로 및 보령~공주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조기 추진
- 동서간 연결 고속도로 조기 시행
  - 당진~천안(45km), 공주~청주(14km), 보령~공주간 조기착수
  - ⇒ 2003년 기본계획, 2004년 실시설계 착수토록 추진
  - 동서간 주요 간선국도 4차로화 조기 완공
  - ⇒ 국도 36호(공주~청양~보령)
    - 공주~청양 : 2003년 실시설계, 2004년 착공

- 청양~보령 : 2004년 실시설계, 2005년 착공

⇒ 국도 32호(예산)~남천안 I.C(천안~논산고속도)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 국도지정 개발

- 60분 이내에 도내 어느 곳이나 도달 가능한 도로교통망 구축
  - 남·북축, 동·서축, X축의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하여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켜 충청남도 내 1시간 생활권 달성
  - 지방부 도로로부터 간선도로망으로의 접근성 제고
  - 도심 우회도로 지속적 추진
  - 주요 거점도시 진·출입로 확·포장
  - 국도 및 지방도 통행량 조사·관리를 통한 교통애로 구간 해소
-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추진
  - 고속도로건설 및 국도 4차로 공사 시행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한 지방도로망 구축 필요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
  -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지도 확충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세부실행계획 마련
- 북방교역을 선도할 철도노선 확보
  - 충청남도의 주요 간선철도망이 동쪽과 남쪽에 치우쳐 있어 당진, 서산, 태안 등 서·북부지역과 공주, 부여, 청양 등 내륙지역에 철도노선 신설이 필요
  - 충청선 산업철도 신설 추진
    - 21c 환황해권시대 및 중국교역 전진기지 기능 확충
    - 백제문화권개발 및 서해안 해수욕장 등의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

-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내륙지방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대책 필요
- 보령~공주~조치원간 총연장 89.0km
- 2003~2012(10개년간), 총 1조1,200억원 투자

⇒ 2003년도 기본설계비 100억원 확보 설계 추진

- 동서간 간선 철도망 확충사업 추진기반 마련

- 충청선 : 보령~조치원, 89km
- 동서산업로 : 천안~태안, 98km

- 아산만권역 유통단지, 대산항, 안흥항, 서·북부산업단지 등 대량의 수송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송난 해소를 위하여 충남내륙 통과가 예상되는 보령~조치원선, 동·서산업선(천안~당진)의 계획 추진

- 서해안 신 산업지대와 대륙을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로 장차 활성화가 예상되는 북방교역에 대비

- 서해안 신 산업지대~나진~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서해안 신 산업지대~신의주~중국을 잇는 장거리 육상 운송 수단 확보

-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등으로 진출이 가능한 교두보 확보

○ 장항선 개량화 및 복선전철화 사업 본격 추진

- 선형불량 등 안전성 문제 대두
- 서해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물동량과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철도 수송 한계
- 경부고속철도(2004년) 개통관련 장항선과 여객·화물 연계수송체계 구축 필요 ; 수송물동량 증가 및 지역개발촉진

○ 자연과 인간 중심의 지역기반시설 설치

- 환경친화적이고, 경관적으로 양호하며, 교통공해가 적은 인간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 자전거 노선확보, 노면전차 도입, 방음벽 설치, 우회도로 건설, 연도정비, 주차장 등 시가지 구간에서의 도로환경 개선
- 교통약자르 배려한 안전한 교통시설 정비 추진
- 도로녹화, 도로주변 난개발 방지, 식재형 중앙 분리대 설치, 대철취를 지양한 터널형식 채택, 저속의 농기계 전용차로 신설 등 지방부도로의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으로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유도
- 개발의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환경전문가 참여
- 대중교통 이용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대식 모델을 적용한 버스승강장 건립 지원

· 2003~2005년까지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 대상 정비 추진

#### ○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가설착공

- 충남서해안 주요 산업·관광벨트 연결도로망 확충
- 2001. 12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2002. 4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이후 연육교 조기가설로 순환교통망 구축
- 대천에서 태안 연육교구간 주행시간 단축(90분→10분대로)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4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운송 가능한 물류망 형성

#### ○ 물류유발단지 및 물류유통단지간 체계적 물류망 구축

- 아산만권 물류·유통단지, 천안권 물류·유통단지, 장·군 유통단지, 조치원 내륙 컨테이너기지 등 도내 주요 물류·유통단지 상호간의 연계기능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보로 물류단지간 하드웨어적 연계

#### 기능 강화

- 육상·해상의 개별정보망과 항만물류정보·통관·무역 등 유관 정보망이 연계된 물류정보망 구축
- 물류단지는 보관·운송에서 가공·포장까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단순보관 및 운송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송의 효율성 제고 및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계화된 현대식 시설확보 및 포장의 규격화 실현

## 5 인간·지식·문화가 어우러진 디지털 충남의 고도화

### 1) 인간·정보·문화가 어우러진 충남 디지털로피아 (digitalopia) 구현

- 풍요로운 주민생활의 실현을 위해 「서로 통하는 공동체」 조성
  - 계통정보화 모델신도시 개발사업 : 국방·문화·역사도시를 표방하는 계통신도시를 국방관련 벤처육성 및 대덕의 스핀오프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생산·상업화·생태주거단지로 육성, 문화·관광 및 생태 전원도시로 육성 (1,621만평)
  - 사이버 지역문화답사공간 구축사업 : 가상 충남의 무형문화재 답사, 국공립 및 사설박물관을 전세계에 확산
  - 전자상거래시범사업 : 충남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립
  - 복지정보네트워크 : 청소년, 장애인, 아동, 보건의료망
  - 모든 가구에 디지털 주소 보급, 지역별·계층별·성별 정보격차 해소, 공



공시설의 디지털문화 공간화, 지역별 「디지털 편민」 지정에 관심과 투자 노력 경주

- 주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열린 자립 공동체」 구현
  - 생활정보서비스체계 : 의료복지, 사회복지, 생활정보시스템
  - 도홈페이지 포털사업 : 수요자 중심의 포털사이트로 재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사업 : 전자결재, 화상회의, 예측시스템 등
  - 민원행정관리시스템 : 민원, 행정관련 DB 및 정보시스템
  - 교류단체커뮤니티 : 교류자치단체 포털시스템
  - 공공시설 지식센터 : 시군도사관, 문화원, 경찰서, 행정기관
-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조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 공동체
  - 재난관리정보화사업 : 재난관리 DB구축 및 응용시스템 통합, 위성망 GPS 기기 도입, 국가정보시스템과 연계망 구축
  - 위기관리정보시스템 : 사고지휘시스템, 비상DB 구축, 위기대처 작업시스템 개발
  - 환경관리정보시스템 : 환경오염정보, 공원, 상하수도 관리, 청소행정시스템 통합 시스템
  - 위기관리에측시스템 : 홍수, 기후, 수질, 지하수, 대기오염 등
  - 지능형교통체제(ITS) : 교통안전과 효율을 위한 지능형체계

## 2) 정보 · 경영 · 기술의 창조적인 산업정보인프라 형성

- 사이버 충남산업공학센터와 리서치 파크 등 권역별 혁신센터
  - 충남온라인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 기업간 교류 및 사이버 쇼핑몰 관련

하드웨어 정비, 온라인 결재, 인트라넷 구축

- 산업정보망 구축 : 충남산업정보센터, 산업정보시스템
- 종합물류정보망 : 당진, 서산, 보령신항, 장항유통단지 460천평 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광역정보센터와 권역별 모델정보시스템 구축

- 광역 인트라넷구축 : 엑스트라넷, 시군포탈, 미들웨어 도입
- 정보통신벤처센터 : 충남테크노파크 벤처창업 지원
- 초고속통신망 구축 : 광케이블, 디지털전화망, IMT2000

○ 첨단과학 및 국방기술이전·상용화 및 아웃소싱 인터넷 센터(IDC)

- 군기술이전센터 :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기술혁신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 6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작고편리한 비행장 건설과 항공교통망 구축	근거리·지점 연결형 컴 퓨터항공 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중심부적 입지를 이용한 근거리·지점연결형 경비행 장 건설</li> <li>민항기 취항이 가능한 복합기능의 서산공항 개발</li> </ul>
	지역간을 연결하는 거미 줄 항공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산, 서천, 공주, 천안, 논산 등의 작은 지점으로부터 광역거점 및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거미줄 경비행 항공교통망 구축</li> </ul>
21세기 바다 경영을 위한 해양기반시설 개발	서해안 신산업지대 지 원항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해안 신산업지대 지원 대산항 건설</li> <li>충남 무역 거점 보령신항 건설</li> <li>크루즈관광을 선도할 보령미항 건설</li> <li>당진항과 평택항과의 육로로 항만 기능제고</li> </ul>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식량 및 무공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양벤처단지 조성</li> <li>해양공간을 이용한 경관감상, 해양레포츠, 휴식·휴양의 보령 ·남포 친수공간 개발</li> <li>다기능 대천어항 육성</li> <li>방포어항 체험 학습장 개발</li> </ul>
사통팔달의 육상교통망 구축	동·서축 및 X축의 간선 도로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li> <li>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설</li> <li>당진~천안~울진간 고속도로 계획</li> <li>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계획</li> </ul>
	60분 이내에 도내 어느 곳이나 도달 가능한 도로 교 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 우회도로 신설</li> <li>주요 거점도시 진·출입로 확·포장</li> <li>지방부도로와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제고</li> <li>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 시행</li> </ul>
	북방교역을 선도할 철 도노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전결속성을 높이고, 중국·중앙아시아·유럽까지 대량·장 거리 운송이 가능한 서해안 철도건설</li> </ul>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운송가능한 물류망 형성	자연과 인간 중심의 지역기반시설 설치 →자연친화적개발로부 터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지↔유통단지·화물터미널↔컨테이너기지의 하드웨어 물 류체계 구축</li> <li>언제, 어디서나 물 흐르듯 흘러가는 소프트웨어 물류체계 구 축</li> </ul>
인간·지식· 문화가 어우러진 디지털 충남의 고도화	충남디지털로피아 (digitalopia)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정보서비스체계 구축</li> <li>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li> <li>사이버 지역문화답사공간 구축사업</li> <li>복지정보네트워크 구축</li> <li>충남재난종합관리 및 예측시스템 구축</li> <li>교류단체 포탈시스템 구축</li> </ul>
	정보·경영·기술의 창조 적인 산업정보인프라 형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li> <li>충남정보센터, 정보통신벤처센터, 군기술이전센터 설립</li> <li>충남온라인기업네트워크, 산업정보시스템, 종합물류망 구축</li> </ul>

## 제5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이제 우리는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유구한 문화적 전통은 지역발전의 장애가 아니라, 가장 큰 경쟁력을 지닌 요소이다. 선진 문물의 창구였던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산, 그리고 빛나는 조선시대 선비의 고장이었던 충청남도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은 우리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도립역사문화연구기관(가칭 : 충남도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다. 도민들이 역사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충청남도 역사문화에 관한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 관한 문화·예술 자원을 집대성하여,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상품 개발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문화가 발전의 원천이 되는 까닭에, 지역개발 또한 문화권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각 권역의 잠재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했을 때, 개발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뒤를 이어, 내포 및 금강 문화권 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곳으로 가꿔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충남정신의 창조적 계승·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학과를 육성·지원하며,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활동가·관련 공무원을 연계한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청년전문가를 양성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힘쓰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유도하여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쉽게 현대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토축제에도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문화 공간에는 유아시설을 확충하여 문화향수의 어려움을 덜어가도록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노인 공경 프로그램을 현대에 맞게 부활시켜, 사회윤리의 회복에 경주할 것이다.

## 1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정책 추진

- 충남 5대정신에 대한 후속 정책 추진
  - 백제~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찬란한 유산을 연구·보존하는 도립역사문화연구기관 (가칭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건립

### ●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처에 산재한 道政史料를 집대성, 정리함으로써 道 歷史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충남정신 계승·발전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활용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
- 충남역사문화 및 도정변천사의 체계적 연구·전시

#### □ 사업내용

-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소」를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승격
- 연구기관 산하에 박물관을 운영하여 관련 자원의 수집·연구·전시토록 하여 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
- 충청남도 전 시기와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자원의 목록 집대성(예시 : 충남 역사문화전자대전)하여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 구축
- 충남이 배출한 역대 인물 홍보 및 소개 방안 강구 (예시 : 충청남도 인물사이버전시관)

- 문화적 전통을 살린 지역 개발사업 시행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산 교육장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편입용지 보상민원, 고증을 위한 절차이행, 개발계획 변경,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 2001년도에 보상관련 민원 등이 해소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
- 2002년부터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및 기능촌건축공사 등의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2005년말 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 낙화암, 정림사지 등 백제의 유적과 연계성을 갖춘 부여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 규 모 : 100만평(역사재현촌 83, 연구교육촌 17)
- 주요시설
  - 역사재현촌 : 백제역사·문화·생활상 재현
  - 연구교육촌 : 문화재보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사 업 비 : 4,528억원(국비 1,466, 지방비 1,350, 민자 1,712)
  - 2001까지 : 1,180억원(국비 811, 지방비 369, 민자 - )
  - 2002이후 : 3,348억원(국비 655, 지방비 981, 민자 1,712)
- 사업기간 : 1994 ~ 2005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시행

<p>● 내포문화권 개발사업</p>
<p>□ 사업의 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內浦」란, 가야산 주변을 통칭하고 있는 지역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에서 해안을 통하여 대 중국문화가 전래된 지역이고,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었던 문화유적의 寶庫이며, 수많은 충신과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li> <li>-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개발, 수도권 배후 관광지로 육성 필요성 대두</li> </ul> </li> <li>○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내포문화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2천만 수도권의 배후관광지로 육성함은 물론</li> <li>○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유역의 「백제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관광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li> </ul>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범위 : 2시 4군 3,195<sup>km²</sup> (서산·보령·홍성·예산·당진·태안)</li> <li>○ 사업량 : 5개분야, 43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문화창달 : 9사업, 230억원</li> <li>- 문화유적정비 : 23사업, 3,240억원</li> <li>- 관광휴양시설 : 7사업, 1,440억원</li> <li>- 도시환경정비 : 1사업, 936억원</li> <li>- 도로교통시설 : 3사업, 3,700억원</li> </ul> </li> <li>○ 사업비 : 9,546억원(국비 6,761 지방비 1,874 민자 911)</li> <li>○ 사업기간 : 2003 ~ 2012(10개년)</li> </ul>

- 금강문화권 개발사업 계획 수립

-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정리

○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문화연구지의 간행 및 지원

- 지역문화해설가의 양성코스 개설
-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과의 증설·지원
- 관련 연구자의 연합체 조직
- 연구자-문화활동가- 관련 공무원 간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단체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방문화예술진흥 인프라 확충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급 신장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기반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과제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의 핵심분야로 浮上
  - 전문가 양성과 인재의 지속적 발굴 활동 필요
-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基金擴充 및 체계적 지원체제 정립
- 문화예술공간·시설 확충, 기금지원, 문화예술 리더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로 선진문화도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사업내용
  - 시설확충 : 25개소(문예회관8, 문화원5, 박물관4, 도서관3, 문화의집5)
  - 문예진흥기금 확충 체계적 지원 : 매년 500백만원
  - 인재양성 : 257명(문화유산 해설사83, 축제 기획자35, 예술·공연단체40, 시설운영자21 전통문화계승자78)
- 사 업 비 : 1,437억원(국비 317, 도비 76 시군비 1,044)
- 사업추진 : 신규·계속사업 연차적·단계적 추진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 환경성 검토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서류(설계도면 등) 작성중
-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건립부지 선정에 참여하게 대립
- 금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바람직한 방안 강구
- 계룡산 천황봉 복원 추진

## 2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증진

-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div>□ 사업의 배경 및 목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 할 국제적 수준의 복합적 시설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소재지 都市에 건립토록 되어있는 기준(문화부), 대규모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li> <li>- 도 단위 각종 행사시 원거리 천안의 도교육청 시설을 대관·활용</li> </ul> </li> <li>○ 공연·전시공간·교육·정보·회의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거점공간 연차적 건립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 문화혜택 제고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li> </ul> </li> </ul>
<div>□ 사업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li> <li>○ 위    치 : 미정 (도청이전에 따라 위치 선정)</li> <li>○ 사   업   비 : 950억원 (국비150, 도비 8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敷地매입비, 설계용역비(30억) 別途</li> </ul> </li> <li>○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건평 10,000평(지상4,지하2층)</li> <li>○ 주요시설 : 대공연장(2,000석), 소공연장(500석), 전시장(2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소 회의장 등</li> </ul> </li> </ul>

-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지속적 확충과 계발
  - 공공기관의 보유 공간 개방
  -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공간의 현대적 활용방안 강구
  - 「충절 추모공원」 조성
  - 산업화로 만연된 이기주의 불식,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성 회복의 정신교육장으로 승화
  - 「충남 예절관 건립」 설치 운영 ⇒ 전국 제1의 예절의 고장으로 육성

● 충남 예절관 설립 운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우리고장 충남은 많은 충신, 열녀, 예학자들을 배출, 예의 바르고 질서가 있는 예절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음
- 그러나,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예절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위상확립과 예절 후학의 양성 기반시설 구축
- 어린이·청소년·도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예절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확보 필요

□ 사업내용

- 예절관 설립의 유형
  - 신규설립-신규부지 확보, 재정과다 소요
  - 기존시설의 활용 - 예산절감 효과, 유휴자원 활용 측면
    - 폐교, 향교, 서원, 충남평생학습회관 활용 등
  - 기존시설에의 기능부여 - 시너지 효과 제고, 효율적 인력자원 활용 가능
    - 공무원교육원, 충무수련원, 충남교육연수원, 충남운수연수원 등
  - 기능이 유사한 기존시설에 예절관 기능을 부여 부설기관 형태로의 설립 운영
- 예절관 설치시 도입시설 검토
  - 예절 연구실, 교육관, 전통놀이 체험장, 공연장, 예절사료관, 공공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기타

- 지정문화재 구역 내의 공간 활용계획 수립
- 충남 축구진흥 사업 및 「한국 축구대학」 유치

#### ● 충남 축구진흥 사업추진

#####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를 통하여 고조된 국민에너지를 결집하여 역동적인 道政의 動因으로 승화 발전
- 축구 꿈나무 교육훈련, 월드컵 선수양성 등 「한국축구신화 창조」의 발원지로 육성
  - ⇒ 충남을 「한국축구의 메카화」, 전문축구인 양성 및 지역개발 등 산업화 모색

##### □ 사업내용

- 축구대학 설립에 뜻이 있는 인사 및 축구관련 기관단체와 협의, 道內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지역 검토
- 유치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축구대학 설립과 관련된 축구의 지역산업화 방안 강구
- 관련사업
  - ① 황선홍 축구공원 조성 : 2003 ~ 2006
    - 위 치 : 예산군 응봉면 또는 덕산면
    - 사업자 : 예산군
    - 사업량 : 축구공원조성(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휴식건립 등)
    - 부 지 : 7,000평
  - ② 여성 축구단 창단 : 2003 ~ 2006
    - 목 표 : 7개팀
    - 방 법 : 도 및 시·군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 시지역부터 창단
  - ③ 유소년 축구단 창단 : 2003 ~ 2005
    - 목 표 : 7개팀(초등부 3개팀, 중학부 4개팀)
    - 방 법 : 교육청과 협조 권역별, 연차별, 시지역부터 우선 창단

○ 향토축제의 현대화 추진

- 청년 문화전문가에 의한 문화·예술 자원의 현대적 활용 지원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예시 : 농사일, 집짓기, 선비의 일상, 백제왕궁의 하루 등) 개발
- 유관 연구기관(예시 : 도립대학, 충남발전연구원)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강좌 개설 지원
-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와의 가정별 Home Stay 교류 - 역사탐방 등
- 청소년 『효실천』 박람회 신설 - 효실천일기, 영상물 등 공모
- 청소년 보호 시범업소 지정 및 홍보 - 시장·군수의 인증서 발급

○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

-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의례행사(예시 : 양노연, 향사례 등)의 재연을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 문화·예술 공연 기회의 확충
- 어르신-아동 간 유대강화 실천계획의 수립

○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생활 확충

- 가족 공동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문화공간 내 유아시설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

○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근린 문화·예술·체육 복합시설 확충
-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 청소년 창작·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3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전통과 현대 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정책 추진	충남 5대 정신에 대한 후속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립역사문화연구기관(가칭:충남도립역사박물관) 건립</li> <li>• 충남 역사문화전자대전 구축</li> <li>• 충남인물사이버전시관 구축</li> </ul>
	문화적 전통을 살린 지 역개발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li> <li>• 금강문화권 개발계획 수립</li> <li>• 기호유교문화권 내 역사문화자원 발굴·정리</li> </ul>
	지역문화연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연구지 간행</li> <li>• 지역문화해설가 양성</li> <li>•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과 증설·지원</li> <li>• 연구자들의 연합체 조직</li> <li>• 연구자·활동가·관련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li> </ul>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증진	문화공간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보유 공간 개방</li> <li>• 향교, 서원 등의 활용방안 강구</li> </ul>
	향토축제를 현대적 감 각에 맞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강구</li> <li>•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li> </ul>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 ·예술 향수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공경 전통의례행사 실시</li> <li>• 어르신의 현대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li> <li>•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어르신-아동간 유대 강화</li> </ul>
	가족이 함께 하는 문 화·예술 생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공동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공간 내에 유아시설 확충</li> </ul>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 문화·예술·체육 시설확충</li> <li>•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다양화</li> <li>• 청소년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li> </ul>

## 제6장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충남

생활환경이 정비되고 사회복지가 충만한 사회는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이사오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회를 말한다.

첫째,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만들어가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은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외부방문객에게 친절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역 주거기능 강화와 모든 주택에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성, 테마형 시범주거단지 조성, 임대주택 건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참여 기회 확대, 새주소부여사업, 주택인증제 도입, 친환경 건축 클리닉제도 확대추진 등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도민을 위한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네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고,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심밥을 굽는 어린이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네 복지종합카드 발급, 간병과 오락을 겸비한 탁노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가정도우미 제도 도입과 청소년수련관의 확충,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여성관련 시설 확충, 자원봉사크리딧카드 발급,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정, 도립화장장 확충과 화장문화확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인력 확충,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설, 건강관리실 설치, 지역정신보건센터 지정·운영, 치매상담센터 설치, 호스피스센터 설립, 노인들을 위한 농촌건강도우미제도 및 응급의료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사오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제·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에서도 영화·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한사람이 하나 이상의 생활체육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평생교육센터·공공도서관·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1시군 1향토박물관건립, 서원과 누정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1면 1개소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1인 1스포츠 클럽 가입 등이 필요하다.

## 1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만들기
  - 동네의 주민대표회,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모임이 주축이 되어 독거노인 찾아보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돌보기, 불우이웃돕기행사, 장애인봉사활동을 추진
  - 주민들간에 자녀돌봐주기, 음식나누어먹기, 의류나 장난감·책 돌려보기, 관혼상제 도와주기, 병간호, 헌혈 등을 추진
  - 문화·예술·동호인 등의 테마형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논산시, 금산·연기군 지역에 건립
  - 무주택 서민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조건이 양호한 지역 곳곳에 임대주택 건설
-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조성
  - 2003년부터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마을회관, 문화원, 체육관, 학교시설, 종교시설 등과 같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육문제, 인간관계, 가사문제, 건강문제 등 논의
  - 동네별로 어린이 놀이터, 썸지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 개최
- 모든 일은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함
  - 동네의 주요현안사업의 입안과 결정, 집행에 대해서 주민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자문위원회, 반상회, 주민간담회, 주민제안제 등을 적극 활용



- 외부방문객에게 친절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
  - 2010년까지 외부방문객들이 동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지역에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안내체계 정비
  - 저밀도의 전원주택단지는 도심의 외곽 또는 비도시지역에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되, 2003년부터 논산시, 금산·연기군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대도시근교지역에 조성
  - Cyber 주택, 환경친화적 주택 등 고품질의 주택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주택인증제」 도입
  - 시·군별로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환경조화형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

- 주택의 효율적 보전관리 측면의 빈집 활용
- 농어촌 빈집정보 센터 운영: 빈집현황자료 비치하여 매매 및 임대 알선 및 여가를 이용하여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
- 농어촌주택의 전원주택, 주말주택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미관개선
- 주택개량사업 등 농촌주택 건립모델 개발·보급

-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역 주거기능을 강화
  - 시급도시의 도심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밀도 중심도심형 공동주택 건립
  -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 「“친환경 건축 CLINC”제도」의 확대 추진

- 관·산·학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개선
- 사전 진단 및 처방에 의한 계획적인 지역형 주거단지 조성

- 모든 주택에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2010년까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우선적으로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
  -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도함

## 2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 저소득 도민을 위해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 현재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생계비 기준을 완화
  - 2010년까지 시군,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체계를 확립하여 점심밥을 굶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없고, 혼자사는 노인이 없도록 함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확대,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능력 배양
- 소외계층 「종합지원대책」 마련
  -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층별 복지수요 파악
    - 대상별 복지욕구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반영
  -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복지편차 및 정부 지원실태 분석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소외계층 특별 지원대책 강구

## ○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

## ●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

##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 10.1시행)의 기본 큰 틀
  - 연령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이 기준액 이하이고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계층의 최저 생계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 생산적 복지구현
- 자활지원시행기반 확충 필요성 대두
  - 자활후견기관 확대 현 4개소 → 시·군당 1개소
  - 자활후견기관의 주요기능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집중적·체계적인 자활후견 서비스 제공,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 지원
    - 자활공동체육성,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 무료간병사업 등 공익추구사업
  -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 수행

## □ 추진방침

- 민선 3기내 시·군당 자활후견기관 1개소씩 지정
  - 총 15개소지정 개소당 매년 150백만원 운영비지원
-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 개인당 월수입 50만원이상 자활공동체육성(2개단 10명)
  -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실시

## ○ 어르신네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 2005년부터 생산적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정도에 따라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 민간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간단한 목수일·청소·아이돌보기·제초·장담그기 등을 일을 주선하는 어르신네전문인력은행 설립
-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수준을 99년 2~5만에서 2010년 10만원으로 확대
- 건강한 노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
- 노인자원봉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포상
- 노부모를 봉양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

● 「간병·오락 겸비한 탁노소(託老所)」 설치·운영

- 일상생활에 불편한 재가노인을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 유지
- 읍면동, 보건지소, 노인회지회,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
-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부족시 시군비로 확보
- 입소순위는 생활보호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노인, 보훈가족, 장애인, 맞벌이가정 노인, 일반노인 등

● 「어르신네 복지종합카드」 발급

-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네 복지종합카드 발급을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및 기존 고령부조제도의 대폭 확대
- 혈압, 지병, 진단의사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건강 DB화로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 경로수첩·연금수첩·건강보험수첩 등의 역할을 겸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통합 제공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2003년부터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인에게 장기저기의 학자금 융자
  - 거동불능 중증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재활기금을 확충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확충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수당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지급하며 수당금액 인상
  -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사업을 추진

● 「장애인 가정도우미 제도」의 도입·운영

- 장애인 가정봉사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급가정도우미 사업 도입
- 방문의료사업과 연계한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과 네트워크 형성
- 도우미 육성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교육 실시후 자격증 부여.
- 생활보호대상 장애자들에 대한 무료실시 후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가정에 대해 유료 실시

- 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유도바닥재, 맹인용 음향신호기와 같은 교통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화

○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 영아·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으로 여성 사회활동 증대를 위해 2003년중 도내 13개소 신축

●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 개요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 영아보육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 영아보육여건이 열악한데다 대부분 통합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육아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욱이 영아의 경우, 면역성 등 특수적 보호요인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보육환경은 여전히 미흡
- 또한 장애아의 경우에도 정상적 발달을 도모할 특수시설과 보육시스템을 갖추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춘 전담보육시설은 절대 부족
- 이에 영아 및 장애아를 위한 전담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특히, 저소득층가정 아동에게 보다 많은 보육혜택을 줄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에 이바지

□ 추진방침

- 확충계획
  - 전담보육시설 신축운영 추진 : 18개소
    - 영아전담보육시설 : 17개소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1개소
  - 기존 보육시설의 영아전담시설화 유도

○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종류별 복지수요 중심의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

○ 자활지원센터 운영

-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 추진
  -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중추적 역할 센터로 발전

# ●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 개요

- 장애인에 대한 범주확대로 등록장애인이 64,177명이며 장애인의 복지시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은 이에 따르지 못함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 발전시켜 그들이 원하는 「맞춤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함.

## □ 추진방침

- 장애인 전문요양 시설 설치
  - 치료와 보호기능을 갖춘 요양시설 설치(전국 최초)
  - 시범적 운영(신규시설) 1개소(2005년), 1,318백만원
  - 장애의 치료 재활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판매시설 설치 및 판매지원
  -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판매소 설치 1개소 (2003년도), 180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복사용지 등 6종 우선 구매, 기타물품 판매지원
- 중증장애인(1~2급) 보호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8세 이상 장애인 보호자
  - 대상인원 : 3,923명, 월 45,000원, 7,391백만원(2003년부터 시행)
- 장애인 택시 무료이용권 발급
  - 장애인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
  - 대상인원 : 1급 중증장애인 9,065명 월13,000원, 4,933백만원 (2003년부터 시행)
- 기혼여성장애인 출산·산후조리 지원
  - 보건소와 연계사업으로 체계적인 출산·산후조리 지원
  - 대상인원 : 212명, 1인당 200,000원, 520백만원(2003년부터시행)
-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 말로는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의사 전달체계 구축
  - 설치대수 : 10대(단체), 개인 28, 38백만원- 2003년부터 시행
-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기존 난치병 치료·후원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
  - 기금조성목표 : 20억
  -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행정부지사, 위원 15인 이상)

## □ 계속사업

- 장애인 생활시설 연차별 확대운영(10→15개 시설)
  - 입주 수요를 감안 시설 신·증축 5개시설(노후시설 : 3개소)
  - 소요사업비 : 6,592백만원(2003년부터 시행)
- 중증 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지원
  - 중증 장애인(대소변 처리)보호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종사원에 대하여 월 200천원 지급, 442명, 388백만원(2003년부터 시행)
- 중증 장애인 수당 추가 지급액 인상
  - 대상 : 중증 장애인 (1~ 2급, 3급중복장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수당을 월 12천원을 30천원으로 인상 10,229명, 7,510백만원
- 장애인 적성에 맞는 취업시설 설치(5개소→8개소)
  - 장애인복지관의 직업 재활센터와 연계추진 3개소, 2,009백만원 (2004년부터 시행)
- 재가 장애인 종합복지 타운 건설(8→14개 시설)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1시군 1복지관)
  - 2002년 천안시(1,726백만원), 금산군(1,148백만원) 신규설치
  - 6개소 7,411백만원
- 시각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비 지원
  -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필요
  - 음성 활용 컴퓨터 33대, 39백만원(2003년 시행)
- 시설 입소 장애아동 Home-Stay 프로그램 운영
  -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을 일반가정에 1~2일간 위탁보호
  - 중·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책정 유도
  - 비예산, (2003년부터 시행)
-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 도우미」 운영
  - 재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서비스 실시
    - 청소, 빨래, 목욕, 주택수리, 밀반찬, 생활·건강 상담 등
  - ↳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재가봉사팀, 자원봉사자 등 실시
  - 이동목욕차량 구입 및 운영(5대) 1,084백만원



- 도내 「장애인 안전사고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도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감독 강화, 안전성과 활용성 연구
-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배려
  - 소년소년가장세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금·전제자금 확대지원, 결연후원사업 지속적 추진
  - 2010년까지 전문아동보호기관을 5개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
  - 2005년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5개로 확충하고, 2010년까지 시·군별 1개소로 확충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블루존”을 설치하고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추진
- 유소년 대상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운영
  - 유치원과 초등 1·2·3학년 연령대 대상, 인성교육과 보호기능을 갖춘 「어린이 교육원」을 설립
- 각 분야 차세대 유망주 체계적 육성
  - 도내 대학에 (가칭)「충남자치행정강좌」를 위탁병설
  - 「정치신진기예」, 「경제·복지 전문가」, 「예체능 특기자」등 차세대 유망주 양성 교육기관으로 육성
  - 공무원, 도민 등 대상 道費유학생제 운영
  - 국내·외의 유능인재를 양성하는 합숙시설을 설립·운영
    - 생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 지역인재로 육성

●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운영

□ 개 요

-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
  - 규 모 : 부지 3,000㎡ 이상
  - 위 치 : 신규보육수요가 많은 천안·아산지역 일원
  - 교육대상 : 3세이상 취학전 아동
  - 개원목표 : 2005년
- 인성교육연계 특수시책 추진(2개사업)
  - 기존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인성교육 실시
  - 저학년 방과후 보육교실 개설 운영(시·군별 1개소)
- 소요예산 : 3,050백만원

□ 추진방침

- 「어린이 인성교육원」은 도 출연 독립법인체로 설립·운영
  - 도내 1개소 시범적 운영후 타 지역 확산
- 인성교육과 보육기능을 갖춘 신모델 보육시설 정립
  - 여성정책개발원 및 자문위원 참여, 국내·외의 우수사례 응용
- 인성교육원설립운영실행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여성정책개발원에 과제부여 및 용역수행 위탁
- 기존 보육시설에 인성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보육교사 소양교육 실시
- 저학년 방과후 보육교실 개설운영비 지원
  - 시설비, 인건비, 몬테소리 교구구입비 등 지원 검토

○ 충남 북부권에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 조성

- 유치원에서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선진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세계 일류 영재교육 메카로 육성

- 「청소년 선도와 육성 프로그램」 체계적 추진
- 장학재단 설립, 장학기금 조성 확대 등
- 청소년 쉼터 운영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쉼터 15개소, 권역별 장기쉼터 4개소 설치
-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촉진
  -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교육, 보육센터, 정보망 구축과 자금지원 확대
  - 성폭력 상담소를 2005년까지 4개소,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설치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2005년까지 3개소, 2010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함
  - 2005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 2005년까지 도나 각 시·군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로 확충하고 현재 교체요인이 있을 경우 여성위원으로 교체
  - 2010까지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5급 및 6급 승진시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며, 1과에 여성1인 이상을 배치하는 시스템 도입
  - 미혼모 보호시설, 모자 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현기능을 유지하면서 최소 1개 시설 유지함
  - 2010까지 모든 시·군에 여성회관 설립
  - 「생활속의 평등문화 운동」 전개 ; 「평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살림문화」 「부부문제 달기」 「평등한 재산권 행사」 등 4대 실천과제 선정 중점 추진, 가정의 달, 설, 추석 등 계기홍보로 범도민적 관심과 참여제고, 「여성주간」에 수범가정 선발 「평등문화가정 패」 수여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
  - 2003년까지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2005년까지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함
  - 2005년까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
  - 2005년까지 자원봉사 실적 크레딧카드 발급
  - 충청남도에 등록된 150여개의 지역NGO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인증제 및 보험제 도입
-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 2010년까지 15개 시·군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실시
  - 2005년까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의회에 사회복지분과위원회를 신설함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
  -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 중앙과 연계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 마련
    - 단계별 양성화 : 조건부 신고제 도입, 신고기준 완화, 재정지원 등
    - 가건물 등 취약시설 특별관리 및 유희시설 활용 이전대책 추진
    - 행정 지도감독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제도권으로 흡수 기존 신고시설과 함께 관리에 만전,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 계층별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장애인·보육사업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추진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충남 노인복지 2010」 수립·추진
  - 장애인의 다양한 복구욕구 충족을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전 정착
- 신청위주의 선정방식을 발굴위주로 전환 → 찾아가는 복지구현
  - 특례보호 확대, 「민·관 연계 보호망」 구축,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등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 → 생산적 복지 구현
  - 자활후견기관 확대, 「근로소득공제」 전면 실시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충청남도 자활·자립賞」 제정 운영
  - 공공근로인력 「사회복지 도우미제」 운영
-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
  - 「간병, 급식 도우미」 제 운영
- 사회복지 도우미 운영범위, 교육, 예산확보 등 실무협의 (年内)
  - 급식도우미 : 푸드뱅크(Food Bank)사업과 연계
  - 간병도우미 : 시·군보건소, 복지관련시설 등과 협의

## ○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전개

- 2010년까지 도립화장장을 1개소 설치하고, 화장비율 50%로 확충
- 도청 및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에 화장서약을 접수
- 장례식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의 융자를 실시

- 2005년까지 화장촉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
  - 장묘제도 정비 : 조례제정, 묘지수급계획 수립
  - 흥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 공동묘지 재정비 및 납골시설 확충 : 시·군별 1개소

● 「화장문화 확산운동」의 전개

- 현대식 화장·납골시설 확충, 가족납골묘설치, 화장확산운동 전개 등 화장위주로 장묘문화 개선
-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화장참여 서명운동 적극 전개
- 화장문화 확산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정착 유도

### 3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실현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시설을 확충
  - 2010년까지 시군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1개소 이상의 종합병원 설립
  - 2010년까지 보건소·지소·진료소의 건물 신·증축, 의료장비·전산화장비 보강사업의 지속적 추진
  - 농촌 및 낙후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한방의사의 배치 확대
  - 종합병원이 없는 군 지역에 대해 보건소가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함
  -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까

지 노인전문요양시설 10개소로 확충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2개소 신설

- 중소병원, 지방공의료원의 일부를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특화
- 금산군에 건강·한방타운 조성

○ 건강·한방타운 조성

● 금산 건강·한방타운 조성

□ 개요

- 인삼의 종주지이며 국내 인삼 생산량의 80%이상 유통으로 최대 복합 약령 시장으로 발전
- 금산의 기존 인삼약령 시장을 생산, 유통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가공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약타운으로 조성하고 인삼약초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인삼약초산업 발전·육성 촉진

□ 추진방침

- 민족의약 재현 마을조성
  - 인삼 발원지, 한약방, 한의원, 침구(뜸)마을 조성 등
- 건강 체험관광 상품개발·홍보
  - 한방사우나, 한약가로수 조성, 인삼종합쇼핑센타 등 체험 관광지 조성
- 인삼약령시장과 연계 한방타운 조성 및 인삼관광특구 지정 추진
  - 인삼약초 관광특구 지정(관광진흥법 제67조)
  - 약령시장 현대화, 한의학 종합박물관 건립
  - 전문인력 양성(관내 대학 한의대 설치, 한방전문병원 개설)
  - 자생한 약초 보존과 연계한 식물원 조성 ; 한의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한약제조·가공 관련업체 유치
  - 기존 약령시장을 한방 타운화 하고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인삼약초산업 육성발전 촉진

- 2005년까지 농부증과 하우스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1면 1개씩의 건강관리실 설치

○ 농어촌 여성을 위한 「순회이동검진반」 운영

● 농어촌 여성 「순회이동검진반」 운영

□ 개요

- 최근 노령인구증가, 생활양식변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위험요인 증가 등, 암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여
  - 전체 사망의 22.3%로 순환기계 질환(23.3%) 다음으로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 따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 '91부터 60세 이하 기혼여성에게 자궁암
  - '96부터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위암등 5종암
  - '99부터 55세 이하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실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여 도민건강증진에 주력하고 있음
- 2003년도부터 암 검진사업은 물론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진을 병행추진 농·어촌 여성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방침

- 세부사업명
  - 3종암(위암, 자궁암, 유방암), 6종성인병질환, 골다공증검진
- 대상 및 사업량
  - 4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294,840명
- 사업기간 : 2003년 1월 ~ 2006년 12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암검진 107,320명(양성자 164명 발견 수술조치)

- 5千 도서주민 건강관리 「마스터 플랜」 추진

- 주민 건강수준 측정 및 만성질환 이환율 조사 : 25개 도서주민 600명



- 도서주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검진, 각종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 등 특별관리
- 14개 초·중학교 학생 253명 병원선 정기적 순회 건강관리
- 거동 불편노인 등에 대한 방문진료 활동 강화
- **全** 도서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카드화 : 질환별로 단계별 추진
- 병원선 운영의 up-grade : 진료기능 확대, 진료의 고급·전문화
-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으로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조성
- 시·군(보건소)과 업무 역할 개선
  - 소음·악취 검사업무 시·군 이관
  - 간편한 검사 기능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 현장행정 처리
  - 고질적, 반복적 민원 업무는 연구원에서 심층분석, 대처
  - 자가측정 성격의 검사업무 시·군 이관
  - 보건소 기능으로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민간위탁 가능 업무, 점진적 이양
  - 먹는물 검사, 식품 규격기준 검사 대상, 민간 검사기능 양성
- 전염병 검사체계(보건소-연구원-국립보건원) 조정
  - 지역 연계된 비브리오 예측사업 등 보건소 실시
  - 현재 국립보건원 확인기능을 점진적으로 연구원 이관
- 「실험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업무처리
  - 민·관원 업무 Cyber 통한 접수, 처리로 서비스 개선
  - 검사 위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연구기능 확대

○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활성화

- 의료원의 공익성·수익성 동시 추구를 위한 경영전략 추진
- 경쟁력 있는 의료원 운영과 인센티브제의 적극적 도입
  - 「친절·절약·청결」 3S운동 정착,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진료체계 구축, 의료원간 인사교류 등
  - 의료원 시설·장비의 연차별 현대화사업 추진 등

○ 도민 「평생건강」 체계 구축

- 도민 건강실태 조사·분석 및 「건강 충남비전 21」 제시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4개년(2003~2006)계획」수립 추진
  - 보건기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효율적인 조직운영, 외래치료 최소화
- 민간 의료기관 수준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 2003년부터 4년간 40개소 26억원 투자
- 치매관리체계 전문화 : 전문병원건립, 상담센터 확대
- 저소득계층 건강관리 강화 : 암 무료검진, 골다공증 등

○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 2005년까지 모든 시·군에 공공 및 민간병원 중 권역별로 지역정신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충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능력 갖추
- 2005년까지 도민들이 각종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보건의료기관이나 종합복지관 등에 건강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 2005년까지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시·군보건진료소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

- 치매요양병원과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치매 예방 및 간병요령 교육 실시
- 정신보건전문인력을 2005년까지 100명, 2010년까지 500백명 양성하여 보건소에 배치
- 2005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응급구조시스템과 농촌건강도우미제를 도입
- 2005년까지 30분 이내에 병원과 의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제 도입

○ 「충남 노인복지 2010」 정책 수립

-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섬세한 노인복지 정책을 비롯, 실업자·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생활안전, 의료복지 등
  - 종합적·장기적 복지정책을 수립, 내실있게 집행 추진 노인능력개발센터 운영
  - 노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선 시범운영후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씩 점진적 설치

● 간병도우미 사업추진

-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참여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 저소득여성에게 간병도우미 일자리 제공과 간병전문인 양성
- 요보호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 지역내 간병 관련 민·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도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 노령화율이 높은 도내 5개지역 주민들의 의료수혜 제공을 위해 2003~2004년까지 90병상 규모로 건립

### ● 도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 □ 개요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 비용적인 적절한 장기 치매 요양치료시설이 없어 대부분 노인 및 만성질환자가 급성 진료기관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치매요양 병원 확충이 필요
  - 65세 노인인구 : 11.7% (전국2위) / 전국 7.6%
  - 치매노인(추정) : 18천명(8.3%) / 전국280천명
  - 치매입원 소요환자(중증) : 2,480명 (65세인구의 1.1%)
- 공공부문 치매환자 전문치료 의료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민간 노인질환 진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임
  - 민간 노인진료 의료시설 : 426병상
  - 도립치매요양병원 : 1개소 건립중 (홍성의료원내, 90병상규모)
- 홍성의료원내 도립치매요양병원을 '03년부터 개원 운영함에도 부족이 예상 '04년에 공주의료원내에 신규 설치계획이며
  - 앞으로 치매환자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공공 및 민간 치매요양병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 □ 추진방침

- 소재지 : 공주시 중동 330 - 1 (現 공주의료원 부지내 건립)
- 사업기간 : 2003 ~ 2004 (2년간)
- 사업규모 : 90병상 / 연건평 835평(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32억(국비16, 도비16)

## 4 이사오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회 실현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
  - 2010년까지 시·군별 도서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센터 1개소

### 이상 설치

- 2010년까지 시·군별 1개소 이상의 공공도서관 설립
- 2010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청소년수련원 3개소, 유스호스텔 4개소 설립
- 2010년까지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입
- 2010년까지 각 학교마다 1개 이상의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지원
- 2010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학생들이 외국과 홈스테이 교류 추진

### ○ 농촌에서도 영화·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충청남도의 고유한 문화, 역사, 자연, 멋과 맛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충청남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적 통합을 이룸
- 2005년까지 충청남도 민속문화사전 발간, 맛과 멋 자료집 발간, 충청남도 향토지 발간, 충청남도 지명유래집 발간 등 추진
- 2005년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별로 민속마을을 지정하고 전통생활문화를 복원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2010년까지 1시·군 1향토박물관 건립의 추진과 함께 마을별 작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함
- 예술인 마을 및 창작작업지구 조성, 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의 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一校一技, 一企業一文化 운동의 활성화
- 2010년까지 시급도시와 대학촌에 문화의 거리 및 문화의 광장 조성을 촉진하여 도시의 문화활동 공간을 벨트화하는 동시에 도시벽화운동, 거리미술운동 등의 도시미관 조성사업을 기획 지원함

- 2010년까지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서원과 누정을 활용하여 유림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훈장교실, 예절교실 및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함
- 도민 한사람이 하나의 생활체육클럽에 가입하여 활동
  - 2010년까지 농어촌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1면 1개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 시·군단위로 각종 스포츠 교실의 개설, 지역 스포츠 동호인 클럽의 조직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로서 생활체육공원의 설치 추진
  - 2010년까지 읍·면·동지역에 기존의 동네체육시설의 수준을 높인 일정규모 이상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간이 운동장을 갖춘 동네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최소화, 「전자도서관」 시범설치운영
  - 지역단위별 근린공원, 공공시설, 주민회관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역 인근에서 손쉽게 스포츠 교실에 참여하도록 추진
  - 2005년까지 지역별, 직장별, 연령별로 다양한 스포츠 동호인 클럽에 쉽게 가입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 1스포츠 클럽 참여 추진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시·군 단위에 오토캠핑장 등의 지정과 시민공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마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 청소년 스포츠·레저·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 1교 1스포츠 운동, 1교 1문화 운동 추진
  -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유희공유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2010년까지 안면도·보령·예산지역 등에 조성

## 5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 여성의 취업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 - 충남여성취업센터를 설치·운영함

- 대상 :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신규졸업생, 전업주부, 장애여성, 전업을 희망하는 취업여성
- 취업정보체계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취업알선기관들을 상호연계함
- 지역별, 산업별, 직업별, 근로조건별 여성취업정보를 DB화함
- 직업훈련정보를 취업센터의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줌
- 직업적성, 심리검사, 학력, 자격증 등 제조건을 고려한 취업상담
- 구인과 구직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운영체제를 구축함

### ○ 여성의 공공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 보호, 지원 등 종합적인 사이버 멘토링 실시

- 여성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상담·알선
- 性·家庭暴力 등으로부터의 보호·지원 등

#### - 여성취업박람회 및 창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주요대상 : 취업을 앞둔 대졸 여성, 신규창업을 원하는 여성
- 구인 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인동태를 파악함
- 취업준비작업의 방향과 감각을 익힘
- 원하는 일자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창업계획을 컨설팅함
- 여성창업워크숍을 동시에 개최함

○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

- 대상 :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및 기존여성기업가
- 체계적 창업마인드를 심어주는 기업인식 함양프로그램을 개발
- 여성에 적합한 업종 아이템과 여성유망 벤처업종을 발굴
-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창업자금을 신설함
- 여성기업지원반 운영 : 기존여성기업의 경영안정 제고
- 전문 컨설팅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을 지원

○ 여성기업인들간 네트워크 활성화

- 경제와 기업체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
- 상호 후견인 제도를 운영
- 경영기법교육, 창업강좌, 창업지원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여성에게 교육기회·훈련·취업기회 제공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차별성을 살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교육생을 모집함
- 지역인력수요와 지식기반산업 인력수요에 상응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함
- 집단특성별로 지원방법과 훈련방법, 훈련시간운영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저소득층 여성세대주나 여성장애인 : 생계형 단순저임금직종에 취



업종인 경우 무료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훈련기간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직종전환 희망 여성 : 일반 직업훈련시설에서 산업수요에 맞는 정보화 관련직종을 개발하여 훈련시키고 취업으로 연결시킴

○ 남녀평등 우수기업체를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남녀고용평등 의식을 확산

- 기준 : 여성의 고용 비율, 임금, 승진, 배치, 직장내 교육기회 제공, 성희롱예방교육, 법정모성보호조항 준수 등의 실시여부
- 방법 :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심사함
- 여성주간이나 고용평등주간에 시상함

#### ● 남녀평등 우수기업체 우대방안 강구

##### □ 개요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섬세함과 유연성을 갖춘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남녀고용평등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
  - 따라서, 公共분야뿐만 아니라 企業에서도 실질적인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며
  -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 분위기를 조기에 확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촉진을 도모코자
  - 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 고용과 대우, 기회제공에 있어 남녀평등의 수범이 되는 기업체와 유공자를 선발
  - 「평등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 및 홍보

##### □ 추진방침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체를 선정 「평등 인증서」 수여
-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체 임·직원에게 대한 표창
- 우수기업체와 유공자 수범·공적내용을 널리 홍보 평등의식 확산

- 남녀 평등마크제 도입
  - 바람직한 양성간 평등 실천기관 및 기업체(상품)에게 평등마크 부여 홍보
  - 평가 공정성 위해 여성단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남녀평등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단 운영
- 취약계층 여성들인 여성장애인, 노인여성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하고 작업공간을 제공
- 일하는 여성의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
  - 수요에 비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2세 영아보육시설수를 확대함
  -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을 위해 새벽과 밤시간의 보육시간을 연장하며 장애아 보육시설, 24시간 육아시설, 직장탁아제도,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형태를 확산함
  - 농촌지역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확충함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 자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 학교교육 이외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후견인제」 시행 ; 한 부모 가정과 여성단체 회원, 시군 간부공무원, 기관·단체장 등과 1:1 연계, 公·私 領域에서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
-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
  - 도내 각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 2005년까지 여성위원의 비율을 50%로 확충하고 교체요인이 있을 경우 여성위원으로 교체함

- 기초,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참여비율 : 각각 50%, 30%정도로 제도화함
- 각부서에 여성관리자 및 실무자 :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고 이를 위하여 각 시·군의 5급 및 6급 승진시 여성공무원 비율을 20%로 확대함
- 도 여성발전기금을 2005년까지 3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 여성의 요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함
- 여성공직자 승진비율 확대
  - 여성공직자 승진비율 확대를 위한 「보직관리」
- 여성의 지방행정, 지방정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연수 기회 확대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養成시스템」 도입운영
-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여건조성
  -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지원기능 강화 ; 실·국장 참석 정책협의회·실무자 중심 추진협의회 개최
  - 성 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 도 실과·사업소 주무담당, 시군 기획담당
  - 「여성정책 용어사전」발간, 「성별 분리 통계」 작성
  - 「性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Guide Line」 설정·통보
- 「명예 여성정책관제」 시행
  - 道 단위 여성단체회장단(10명)을 매월 1명씩 명예 여성정책관으로 위촉, 도정의 올바른 이해도모 및 참여·협조 도모 ; 주요 도정설명, 여성복지시설 방문 격려 및 현황 청취, 직원과 대화 등
- (가칭) 「忠南女性 100年史」發刊
  - 충남여성의 지나온 100년을 재조명, 변화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고 후세에 기록유산으로 전수, 여성발전의 자료로 활용

- 가정생활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 총망라
- 여성정책개발원 기본연구과제로 추진, 분야별 사계전문가 위촉참여

○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p>●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선진국 대열 진입여부는 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이 관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지방정치·행정 등 공공분야 참여확대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li> <li>- 점차 그 영역이 전문화·다양화 되어가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li> </ul> </li> <li>○ 지역 여성의 의식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을 실시</li> <li>-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자립·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li> </ul> </li> <li>○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사회적 역할증진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도모</li> </ul> <p>□ 추진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개발원, 道內 소재 사회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여성교육 확대</li> <li>○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훈련</li> <li>○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교육 강화</li> </ul>
---

○ 여성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 충남여성 교육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여 DB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
- 2010년까지 모든 시·군에 여성회관을 설립하고 지역의 여건과 여성의 정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학교, 공공·민간 사회교육기관, 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의식을 교육한다.  
 각종 연수나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강  
 사은행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강화시킴
- 여성친화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
  - 여성 E-mail 갖기 운동 : 여성단체별로 전개하고 홍보사업을 실시  
 함
  - 정보화 시설 확대 : 시군 정보화교육장, 여성회관 및 지역사회 복  
 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 주부를 위한 컴퓨터 활용 기초 교육을 무료로 실시함
  - 정보관련 직종에 고학력 주부에게 적합한 노동형태 개발하여 여성  
 정보화교육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직업훈련기관에 정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홍보함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 「지역여성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  
 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소재 대학, 기업체 등을 총 망라  
 Net-work 구축
  - 유사·중복 기능조정, 정보교류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 「IT중심 전문교육 과정」 운영, 지역정보화 사업 등에 활용
  - 농어촌 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방」과 연계 추진
- 여성자원활동 지원
  -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설립
    - 여성자원활동자들의 기초정보 분류 및 체계화
    -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지역자원활

동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관리를 제고함

- 자원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언론 및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여성자원활동자를 배가시키고 자생적인 자원활동 조직을 확대함
- 자원활동자의 긍지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인정·포상제도를 확립·시행함
- 무보수 활동에 대한 정신적, 문화적인 보상기회 제공
- 자원활동 적립통장제 실시
- 지역의 교육·문화행사 초대
- 공공시설 무료 이용 제도마련

○ 지역 여성문화활동을 지원

- 지역여성문화제 개최를 지원함
- 목적 : 남녀차별의식을 추방하고 지역특성과 건강한 여성문화제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서 여성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의 건강성을 회복함
- 방법 : 여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준비위원회와 기획팀, 운영팀, 홍보 팀 등으로 구성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지역에 맞는 일정으로 행사를 주관함
- 여성이 지역문화제행사준비위원회의 위원과 활동가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다음 축제에 환류됨으로서 진정한 주민참여형 지역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킴

### ● 충남여성문화제 개최 지원

#### □ 개요

- 지역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증대
  -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매우 미흡한 수준
- 또한 지역별로 유일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시군 문화원」은
  - 대부분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어
  -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아우르는 데는 한계
- 따라서 지역여성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여성문화제」 개최를 지원해 나가면서
  -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지역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 □ 추진방침

- 市郡 여성회관사업 등과 연계 지역별로 「여성문화제」 개최지원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 지원하고 성과와 호응도 등을 종합 분석 단계별로 확대 지원
- 여성정책개발원 등 전문기관과 협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6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 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더불어살아가는 이웃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 찾아보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돌보기, 불우이웃돕기 행사, 장애인 봉사활동</li> <li>• 자녀돌봐주기, 음식나누어 먹기, 헌혈</li> <li>• 테마형 주거단지 시범건립</li> <li>•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li> </ul>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설치 적극 추진</li> <li>• 공공시설 이용하여 교육·가사·건강문제, 인간관계 상담실 운영</li> <li>• 어린이 놀이터, 썸지공원 조성</li> </ul>
	모든 일은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자문위원회, 반사회, 주민간담회, 주민제안제 적극 활용</li> </ul>
	환경친화적 주거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안내체계 정비</li> <li>• 대도시근교지역에 저밀도·전원주거단지 건설</li> <li>• 주택인증제 도입</li> <li>• 환경조화형 시범주거단지 조성</li> <li>• 농어촌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li> </ul>
	도심지역 주거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밀도 중심도심형 공동주택 건립</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친환경건축클리닉 확대추진</li> </ul>
	모든 주택에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 장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설치</li> <li>• 합병정화조 설치 유도</li> </ul>
사각지대 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저소득 도민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생계비 기준 완화</li> <li>• 점심 굶는 어린이, 혼자 사는 노인이 없도록 함</li> <li>• 생계비 지원확대, 자녀학비지원</li> <li>•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li> <li>• 소외계층 종합지원대책 마련</li> </ul>
	어르신네들이 소외 받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인센티브제 도입</li> <li>• 어르신네 전문인력은행 설립</li> <li>• 노인경로연금 확대</li> <li>•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확충</li> <li>• 노인자원봉사전담기구 설치</li> <li>• 노부모 공양가정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li> <li>• 간병·오락 겸비한 탁노소 설치·운영</li> <li>• 어르신네 복지종합카드 발급</li> </ul>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장기 저리학자금 융자</li> <li>• 장애아동 부양 및 보호수당 지원, 장애연금도입</li> <li>• 직업재활기금 확충 및 장애인일자리 확충</li> <li>•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 실시 및 금액 인상</li> <li>•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li> <li>•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li> <li>• 장애인 가정도우미제도 도입·운영</li> <li>•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li> <li>• 장애인 복지5개년 계획 수립</li> <li>• 자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안전사고대책위원회 설치운영</li> </ul>



구 분		내 용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성장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 운영, 차세대 유망주 체계적 육성</li> <li>• 국제영재육성 교육단지 조성, 청소년쉼터 운영</li> <li>•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대학입학금 및 전세자금 확대지원, 결연후원사업 추진</li> <li>• 전문아동보호기관 설치 및 인력배치</li> <li>• 청소년수련관 확충</li> <li>• 블루존설치 및 교육청과 연계사업</li> </ul>
	남녀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 보육센터, 정보망 구축 및 자금지원확대</li> <li>• 성폭력상담소 확대 설치</li> <li>•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li> <li>• 여성발전기금 안정적 조성</li> <li>•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 확충</li> <li>• 공무원 승진시 여성비율 확대</li> <li>• 미혼모·모자일시·선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유지</li> <li>• 여성회관 설립</li> </ul>
	자원봉사활동화를 통한 지역사회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설립</li> <li>•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li> <li>• 자원봉사 실적 크레딧카드 발급</li> <li>• 자원봉사활동 인증제 및 보험제 도입</li> </ul>
	복지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복지종합센터 설치</li> <li>•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실시</li> <li>• 도의회에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신설</li> </ul>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립화장장 설치, 화장비율 증진</li> <li>• 행정기관에 장례담당부서 설치</li> <li>• 장례식장 및 사설납골시설에 대한 장기저리용자</li> <li>• 화장촉진조례 제정 및 인센티브 부여</li> </ul>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장수사회 실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종합병원 설립, 건강·한방타운조성</li> <li>• 농어촌여성을 위한 순회이동검진반 운영</li> <li>• 보건소 신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li> <li>•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확충</li> <li>• 보건소의 종합병원기능 강화</li> <li>•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설</li> <li>• 농부증 및 하우스증 예방위한 건강관리실 설치</li> </ul>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지역정신보건센터 지정</li> <li>• 보건의료기관에 건강정보센터 설치</li> <li>•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관리</li> <li>• 치매예방 및 간병요령 교육 실시</li> <li>• 충남노인복지 2010 정책 수립</li> <li>• 도립치매병원 건립</li> <li>•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li> <li>• 노인응급구조시스템과 농촌건강도우미제 도입</li> <li>• 30분 이내 병원도달위한 응급의료체계 도입</li> <li>• 간병도우미 사업추진</li> </ul>

구 분		내 용
이사와 고 싶은 여유와 문화사 회 실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생교육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평생교육센터 설치</li> <li>• 시군별 공공도서관 설립</li> <li>•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설치</li> <li>•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입</li> <li>• 학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li> <li>• 외국과 홈스테이 교류 추진</li> </ul>
	농촌에서도 영화·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문화적 통합</li> <li>• 충청남도 민속문화사전 발간</li> <li>• 맛과 멋 자료집 발간</li> <li>• 충청남도 지명유래지 발간</li> <li>• 시군별 민속마을 지정 및 전통생활문화 복원</li> <li>• 1시군 1항토박물관 건립</li> <li>• 예술인 마을 및 문화의 집 건립</li> <li>• 일교일기, 일기업일문화운동</li> <li>• 문화의 거리 및 문화의 광장조성</li> <li>• 서원 및 누정활용 훈장·예절교실, 문화공간활용</li> </ul>
	도민 한사람이 하나의 생활체육클럽에 가입하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면 1개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li> <li>• 생활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li> <li>• 1인 1스포츠클럽 참여</li> <li>• 1교 1스포츠킴동, 1교 1문화운동 추진</li> <li>• 퍼블릭 골프장 설치 확대</li> </ul>
일하는 여성 에 대 한 지 원 과 양 성 평 등 사 회 화 경 조 성	충남 여성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장, 저소득층 여성, 신규졸업생, 전업주부, 장애여성, 전업을 희망하는 취업여성</li> </ul>
	여성취업박람회 및 창업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앞둔 대졸여성, 신규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li> <li>• 다양한 창업아이템 소개, 창업계획 컨설팅</li> </ul>
	여성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규여성창업자 및 기존여성기업가</li> <li>• 여성에 적합한 업종 아이템과 여성유망 벤처업종 발굴</li> </ul>
	여성기업인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법교육, 창업강좌, 창업지원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li> </ul>
	여성직업교육기회 제공 및 취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력수요와 지식기반산업 인력수요에 상응하는 여성인력 양성</li> </ul>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직업훈련 기회 확대</li> <li>• 정보화관련직종 개발</li> </ul>
일하는 여성 에 대 한 지 원 과 양 성 평 등 사 회 화 경 조 성	남녀평등 우수기업체 표창 및 인센티브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용비율, 임금, 승진, 배치, 직장내 교육기회 제공,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 등의 실시여부</li> </ul>
	일하는 여성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보육시설 수 확충</li> <li>•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확충</li> </ul>
	여성평생교육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여성 교육정보네트워크 설치</li> <li>• 강산은행제 실시</li> </ul>
	여성친화적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이메일갖기 운동</li> <li>• 컴퓨터 활용기초교육 실시</li> </ul>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자원활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화</li> </ul>
	지역여성문화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여성문화축제 개최</li> </ul>

## 제7장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충청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의 노력과 지역간 균형개발이란 대명제 하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될 「환경의 세기」에 접어들어서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한계(Carrying Capacity)를 넘어선 대량 생산·소비 및 개발은 도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연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生命共同體)라는 기본이념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충남도민이 여유롭고 지혜로우며, 경제적 풍요와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간 충청남도는 각종 개발과정과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에는 다소 미흡했고, 기반시설 확충, 공단조성, 에너지 등 환경관련 정책의 입안시 환경을 사전배려하는 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국지적인 환경오염을 심화시켰으며, 환경관련 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환경분야 재원의 확보와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새 천년에 걸맞는 선진 환경정책의 총체적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보전과 개발이 잘 어우러져, 생명력이 왕성하고 생물다양성이 상시 유지되어, 생태계의 질서가 자연스런 충남을 이루기 위해, 환경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모두가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가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도권 개발억제 정책,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의 개통 등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유입 증가 및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서 산림, 농지, 하천 등이 갖고 있는 국토보전기능과 보수(保水)·유수기능이 저하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등 충남안전기반의 위약화가 우려된다.

충남의 인위재난의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재산 피해 등의 피해 심도는 증가하는 실정이며, 또한 사회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른 재난발생 위험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가 조성되고, 화재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사고발생시 즉시 구조나 구원할 수 있는 시스템 요망되고 있다. 우리 도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재해경보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홍수 등 재해 관련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예방활동, 구난, 구조, 응급 의료, 구호물자 보급 등을 지역방재 네트워크화에 활용하며, 도민의 방재의식을 강화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방재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충남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 1] 생태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관리

### 1)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 추진

-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 유도
  -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계획으로 전환
  - 생태 · 자연도 작성
  - 생명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
- 환경적합성 사전 평가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분야별 환경관리목표 설정
  - 단계별 · 시기별 · 권역별 환경목표 달성여부 평가
  - 소생태계(Biotop) 및 소공원(Pocket Park) 조성 등 생태중심 계획수립

#### □ 계획수립의 개요

- 생태계 훼손방지
  -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 됨
  - 생태자연도 등을 작성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시 활용
- 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 도내 주요생태계에 대한 자연환경 자료 마련
  - 생물다양성 및 경관 우수지역등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 자연환경 기초자료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태보전 종합계획 수립
  -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자료제시
  - 생태자연도를 작성 개발사업 시행시 기초자료 활용
  - 자연생태 우수지역 보전 및 도민에게 생태공원 제공

- 환경과 경제를 병행하는 『ECO-2 프로젝트』 추진
  -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2003년) : 지속가능 개발
  - 도 전역 「자연생태계 조사」 (2007년) : 생태관광 기반구축
  - 「안면도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2003년) : 친환경 개발
  - 「도립공원 자연휴식년제」 도입(2005부터) : 생태보전
- Eco-polis 계획 추진
  - 기본구상
    - Eco-polis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 도시지역에서는 소규모 지역단위, 농촌지역은 마을단위로 주민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별 장기 Master-Plan 수립
    - 주체 : 주민 + NGO, 지원·유도 : 행정기관
    -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개발사업(택지개발, 도로, 하천, 건축 등) 계획수립시(실시설계) 강도높은 녹화계획 수립의무화⇒녹화율 상향조정
    - 『Eco-polis』 추진대상 구역내 신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사시 『Eco-polis 기금』 신설, 부과
    - 도시하천의 둔치, 제방에 나무를 심는 방안 심층 검토
    - 구도심의 낡은건물 연차적 구입 ⇒ 씬지공원화(행정기관)
    - 공공기관은 강제화, 사회단체 등 일반주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
    - 매년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 활용

- 삭막한 도시환경, 난개발 되고있는 농촌지역을 숲과 어우러진 도시, 깨끗하고 정돈된 농촌마을로 가꿔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체감화

#### ○ 東北亞 그린파트너십 형성

##### - 환경 협력체계의 국제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확립 :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 『동북아지역 환경협력협의회』 주도 : 회장 자치단체 역할 수행
- 국제 환경기술·정보 적극 교류 : 격년제 교류 정례화
- 환경공무원, 기술인, NGO 상호교류 협의체 구성

#### ● 환경 협력체계의 국제화

-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자치단체간 국제적인 연대 필요
  -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연대 강화
  - 기술인 및 NGO를 주축으로 한 교류
  - 환경분야 신기술에 대한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 생태계조사 등 자치단체간 역할분담 추진
  - 철새이동경로 등 생태계조사
- 동북아지역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선도적 기여
  - 국내·외에서 충청남도의 위상 제고 및 환경분야 선진기술 도입

## 2) 종합 「환경측정망 센터」 설치·운영

#### ○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 종합적 분석·과약

- 환경오염 진행이전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 환경정보관리시스템 확충에 의한 환경관리 과학화 도모

- 환경가치와 생명가치를 연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환경특화 지역 및 오염우려 예측지역의 효율적 집중관리

● 환경정보관리시스템 확충

- 운영중인 분야별 측정지점 수질 210지점, 지하수 75지점, 토양 127지점, 대기 4지점을 자동측정방법으로 점진적 통합개선
- 대기 10지점, 소음 14 지점(시·군별 약 1지점)을 추가설치
-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합적인 환경측정망센터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3)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복원

- 생태축의 보전·복원사업 지속 추진
  - 거점지역 훼손된 자연생태의 역기능을 말끔히 해소한 순기능의 '생태계 접근(The Ecosystem Approach)'
  - 개발권역에 대응하는 보전축 및 생태녹지축 설정
  - 도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 실시로, 조사결과를 D/B화하여 활용
  - 국립 및 도립공원, 금강 생태축, 연안의 생태환경 복원 및 개선사업 추진
  -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리 추진
    - 산, 하천, 연안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생태축의 보전, 복원사업 지속추진
    - 「서해안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등
  - 안면도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 안면도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면도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기본 계획·관리계획을 조기 수립
-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 2003~2004년까지 생태학습관, 생태관찰시설, 수생식물 식재, 탐방객에게 생태적 휴식공간 제공
- 서해안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호
  - 생태계 우수지역 및 생물다양성에 따라 습지별 등급체계를 도입
  - 간월·부남호 및 천수만과 금강하구 등 철새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추진
  - 2003~2007까지, 서산시 천수만주변 간척지내에 철새생태공원 및 철새학습관 건립
-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복원대책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는 핵심생태지역(Core area) 설정
  - 핵심생태지역과 인접지역의 생태통로지역(Eco-corridor) 확충
  - 외래종 동·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4) 과학적·생태적 수질관리

-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무방류 관리시스템 도입
  - 각종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고도처리 후 공업용수 및 중수도로 전량 재 사용하여 폐수 무방류 실현

-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입주 기업체 환경부담 요인 대폭해소

- 현 황 : 산업단지 : 7개소(시설용량 : 27,750 m<sup>3</sup>/일)

농공단지 : 20개소(시설용량 : 8,740 m<sup>3</sup>/일)

●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무방류 관리시스템 도입

- 월산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후 시범 추진
- 폐수종말처리시설(용량:23,000m<sup>3</sup>/일) 방류수는 BOD 1mg/ℓ 이하로써 공업용수 1급(BOD 6mg/ℓ 이하)기준보다 양호

○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

- 하수차집 및 유역변경 등으로 건천화된 도심하천을 생태중심의 하천정화 사업 실시
- 아파트 단지, 공공건물, 산업시설 등 하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 등은 기존 정화시설을 보강(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억제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 생태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복원사업 추진
- 처리된 하수를 모아 건천화된 상류하천에 이송함으로써 도심하천 복원, 생태기능 회복

●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

- 공주 제민천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후 시범추진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또는 금강 물을 상류지점에 이송
- 친환경적인 하상내 정비와 제민천 하류에 생태습지공원 조성 및 조명·분수시설 설치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역 생태뉴지 조성
  -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를 친자연적으로 재처리하여 인근 농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
  - 방류수역의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정용량의 생태뉴지를 조성
  - 현 황 :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11개소(2005년 33개소 계획)

<p>●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역 생태뉴지 조성</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당성 검토 후 기존처리시설 부지내 주변에 자생하는 수생식물 식재를 중심으로 일정규모의 생태뉴지를 조성</li> <li>○ 생태뉴지 유출수량 및 수질농도에 따라 활용방안 모색</li> </ul> |
|---|

-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관리 기반구축
  - 민간 위탁관리 중인 시설과 시·군 운영중인 시설의 인력 및 장비공유 등 기술교류 추진
  -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소규모 축산폐수, 침출수, 분뇨를 생활하수와 연계처리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 시설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도입

## 5)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 환경생태적으로 무해한 대체 자연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 산업 및 경제 발달과 함께 연료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로 자연생태 뿐만아니라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
  - 환경개선을 위한 선진국형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
  -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 풍력발전단지 설치사업 (2003년~2005년) ; 석문방조제
- 소수력발전 시범사업 ; 예당저수지

● 대체에너지 개발

- 일사량이 비교적 풍부한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에너지를 개발
- 가로림만 등 조석간만의 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조력발전소 입지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저수지 등 수두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검토

-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 활용
  - 폐기물 소각로 건설에 따른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
  -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난방 및 화훼산업, 수산업 등 열원공급

## 2 효율적 환경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 1) 하천 및 호소 관리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현
  - 농도규제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허용
  -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하수처리율 74%이상 달성
  -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결정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분배
  - 생활하수 및 소규모 축산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 하수관거 정비와 질소, 인 제거시설 도입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
  - 하수처리구역내 입주하는 시설 및 업체의 환경규제 완화
- 금강수질 II등급 완성

- 금강은 유역면적이 광범위하고 여러 광역단체와 공유하고 있어 수질개선에 어려움에 직면
- 그간의 노력으로 Ⅱ~Ⅲ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상시 Ⅱ등급 유지

-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질기초시설 확충
- 2001년말까지 11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어 하수처리율은 38%이나 2007년까지는 22개 처리장을 완공하여
  - 하수도 처리율을 74%이상 달성하여 주요하천의 수질을 Ⅱ급수로 개선

- 상류 갑천 및 미호천 유역의 수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푸른금강』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추진
  - 금강수계 특별법을 차질없이 추진 ; 수변구역 지정·관리,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상수원 이용하천(40개소)·호소(4개소)에 대해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관리 오수처리시설 확대보급 등

- 환경기초시설 설치 : 2005년까지 26시설 4,940억 투자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류 갑천, 미호천 오염물질 삭감할당량제시로 수질개선사업 공동노력

#### ○ 중부권 생활용수 공급여건 조성

- 충남 중부권 내륙 최대 호소인 예당호 및 탐정호는 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수질이 양호

- 환경기초시설 확충, 탑정호·예당호·삽교호·대호 수질 등급 개선 및 여과수 개발로 북서부권 생활용수 공급기반 구축
- 개선여지가 충분함에도 농업용수에 한정하여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

- 환경기초시설 집중 설치 및 호소심층 폭기시설 설치 등으로 II등급으로 수질개선
- 고도 정수시설 도입으로 중부권 생활용수 공급지로 활용
- 호소수 유출지점 소수력발전 설치검토

○ 여과수 개발로 북서부권 가용수원 확보

- 삽교호 및 대호 수질개선 사업 지속전개
- 호소변여과수 개발(II등급) 타당성 검토
- 고도정수시설 설치로 북서부권의 생활용수 공급 상시체계 구축

- 삽교호 및 대호 주변 여과수개발로 II등급 상수원수 수질을 확보
- 북서부권(서산,당진,태안) 생활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 수급대책 강구

○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등급으로 유지·개선

- 이용목적에 적합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수질 목표등급 설정관리
- 농업 및 공업으로 활용되는 하천 및 호소수는 III~V등급으로 유지
- 비상시 서해연안 지역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토록 담수호 수질개선
- 담수호(간월·부남호 등)의 농업·공업용수 수질등급 상시유지
- 유입부 수생식물식재 등 늪지조성,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 2) 폐기물 감량 및 관리기반 확충

-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추진
  - 도심 폐기물 배출지역, 사업장별 감량목표 설정(감량 달성지역 인센티브)
  - 가정 및 식당에 적합한 알뜰식단 개발보급으로 음식쓰레기 발생 최소화
  -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과다포장 금지
  - 환경친화적 공정개발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산업 집중육성
  - 특정산업의 배출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산업 구조인 환경친화적 클러스터(cluster) 형성
  - 폐기물 관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매립량 최소화
  - 폐기물 분류수거체계 정착과 음식물·가전제품 재활용 기반조성

### ● 폐기물 분류수거 정착과 음식물·가전제품 재활용기반 조성

-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보완·개선
  - '95년 도입이후 쓰레기량 감소, 재활용량 증가의 성과가 있으나
  -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봉투재질과 가격에 따른 주민 불편·불만내재
  - 불편·불만사항 증가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 필요
- 폐기물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사후관리 위주의 대책은 늘어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 한계
  - 사전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원천적 감량
- 감량으로 처리비용절약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 음식쓰레기 처리 및 관리시설 기술개발
  -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수분함유량 최소화 정책
  - 지역단위별 가축사료 수요량에 적합한 수거체계도 작성
  - 남은 음식쓰레기 퇴비화 및 연료화를 위한 기술개발

- 폐기물 수거체계의 정착과 재활용 기반 조성
  -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 지역별 관리체계에 맞는 분리수거 체계 정착
  - 물품교환 및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환경교육 센터」 설치·운영
- 폐기물 중간처리의 활성화
  - 선별, 압축, 파쇄 등 중간처리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기여
  - 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 및 연료화(RDF) 실현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및 열분해로 감량화 및 무해화 도모
- 폐기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의존 비율이 다소 높아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시설 확충으로 최종 매립량 최소화 추구
  - 광역적 폐기물관리지구를 지정하여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
  - 기존 비위생매립시설 적정공법으로 재정비하여 토양환경 복원

●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및 정비

- 재활용시설 3개소,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4개소, 소각시설 9개소, 위생매립 10개소 추가설치·운영

### 3)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방안

- 지하수 부존량 기초조사 및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 광역 지하수 조사와 정밀 지하수조사로 구분 수문지질도 작성
  - 광역지하수 조사는 권역별 지하수 수위, 수질조사 및 지표 수문조사 등으



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정밀지하수 조사는 지역단위로 지하수 부존량, 개발가능량, 수위 및 수질 현황 등의 조사로 지하수개발시 실패공을 줄이고, 지역 지하수관리 활용
- 지하수 보전지구 및 개발제한지구 지정 운영
- 도시지역의 지하수 함양대책 강구 ; 공원지역 주차장부지에 대한 포장공법으로 블록사용, 배수관의 유공관 매설, 빗물 유도 맨홀설치 등
  - 빗물이 지하에 침투될 수 있도록 공법유도, 행정기관 솔선수범

-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수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오염 등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됨
- 지하수는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하수 보전·관리가 중요한 물 관리 대책으로 부상됨
- 이에 따라 과학적인 지하수기초조사를 통해 지하수 부존특성 및 이용 개발 가능량 등을 파악하고
- 체계적 지하수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 계획 수립이 당면 과제임
- ※ 2001.11.17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는 시도단위의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 지하수 폐공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전개
  - 기존의 폐관정, 폐공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되메움 조치
  - 폐공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으로 주민참여 유도
  - 지하수 폐공 등에 대하여 개발자 원상복구 의무화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징수
- 지하수 보전관리 전제로 지표수와 연계이용 계획

- 지표수와 연계하여 지하수를 보조수원 또는 비상용수로 활용
- 암반 지하수 및 양질의 지하수는 음용 위주로 개발·이용
- 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 및 관측자료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

#### 4) 맑고 청명한 대기질 보전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굴뚝감시 TMS시스템 구축
  - 화력발전시설 및 대규모 사업장은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유도 및 악취 배출물질 특별관리
  - 배출업소 현황을 D/B화하여 장래 총량규제나 배출량거래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기오염 예보제와 연계하여 대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대기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충남 대기GIS 구축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대체에너지 사용 적극 권장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저유황유 또는 LNG 등 사용유도
  - 청정연료 사용의 지역난방지역 점진적 확대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
-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 이동차량 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한 원격감시측정기 도입
  - 차세대 도로·차량제어체계 개발로 차량흐름 향상시켜 오염물질 감소

-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중 식재로 생태녹화사업 동시 추구
- 인체에 위대한 이차오염물질 생성억제 및 대기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추진
  - 천연가스버스 단계적 도입 : 2007년까지 市지역 시내버스 전면교체

<p>● 천연가스버스 단계적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부터 시내버스 운행량이 많은 천안·아산과 충전소가 인접한 논산·공주 시범실시</li> <li>○ 2007년까지 100%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li> </ul>
--

- 2003년부터 시내버스 운행량이 많은 천안·아산과 충전소가 인접한 논산·공주 시범실시
- 2007년까지 100%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

- 도로청소 전용차량 확보(現 2개市) : 2010년까지 전 市지역 확보

## 5) 연안오염 방지

- 통합적 연안 환경관리 체계 구축
  - 육상환경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연안 중심적 관리
  -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전·육성, 수산경제의 활성화, 해양·해저 에너지자원의 개발, 해양지식산업의 육성 등
  - 갯벌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으로 갯벌 및 습지의 관리
- 환경허용 용량을 감안한 오염총량규제 실시
  - 연안환경의 총량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안 토지이용 관리, 산업단지·양식장 등의 해양수질오염방지, 해양폐기물 투기 방지, 갯벌보호구역의 지정 및 갯벌 생태지도 작성
  - 해양 폐기물투기 억제 및 폐기물 수거를 위한 해양정화선 도입

- 연안바다밑 쓰레기와 퇴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정화사업 실시
- 수질악화 해역을 특별 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며, 청정해역을 환경보전 해역으로 지정·관리
- 해수수질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준설사업 실시
- 적조제거기와 경보기 도입 등 과학적 대응체계로 전환
-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통합적 연안 환경관리」 강화

### 3 통합관리 방재시스템의 구축

#### ○ 시·군별 종합방재시스템의 구축

- 시·군 방재체계와 중앙방재시스템과 연계된 종합방재시스템으로서 지역별 현장상황의 정확한 인지 및 효율적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의 컴퓨터 행정망과 행정전화, 재해응급 체제, TV나 라디오의 방송망을 결합한 종합 방재 네트워크화가 필요
- 유형별 현황 조사·분석 및 지역별 재해정보 DB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첨단 방재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재해발생 DB와 방재정보 DB를 연결하여 재해정보제공 및 사전예방활동, 구난, 구조, 응급의료, 구호물자 보급 등 각종 응급지원 활용
- 재해발생 DB와 방재정보 DB는 상습수해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 및 관리자료로 이용하여 사전예방활동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재해 특성별로 효율적 방재계획 수립

● 종합 지역안전관리체제 구축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는 각종 재난·재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사회인 바, 충남 지역에서도 각종 사고로 해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접근성, 이용편의성, 신뢰성, 포괄적 구조·구급서비스 효율이 가장 높은 「119」 중심의 종합안전 관리체제 구축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역점 추진

□ 사업내용

-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재해 등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대상물의 DB화 추진
- 각종 안전관련 상황접수·처리 기능을 도 단위 「119」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완벽한 119 중심의 종합안전관리망을 구축하며, 특히 안전관련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는 현행체제하에서 정보처리 및 초동대응을 「119」로 일원화,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안전관리의 시너지효과를 도모

○ 「충청남도 119종합안전정보화센터」 설치 운영

-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재난과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관한 각종 지역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 조치를 주민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119」를 통해 종합적으로 종합안전정보화센터를 설치, 소방안전본부 산하의 법정직제로 운영
- 현행 광역소방체제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강화한 소방정보통신 및 무선시스템 등 통합 운용·관리로 각종 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 「충청남도 119종합안전정보화센터」 설치 운영

- 「119종합안전정보화센터」는 화재·폭발·산불·붕괴·교통사고 및 구조구난·응급처치 관련, 광역소방정보통신망(119위치정보시스템, GIS, GPS, 119통합지령시스템)으로 초동조치 및 현장대응 촉진
- 각종 재난·재해·소방안전 및 민방위 상황의 동일장소의 통합적 관리 및 법정직제화로 지휘·통제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유사 상황관리 기능간의 업무연계 및 정보공유로 종합상황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도모
- 「119종합안전정보화센터」 추진을 위한 사업규모는 119억원(3개년 계속사업)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및 지방비 각 50%

○ 방재전용방송국의 창설

-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건중 하나는 정확한 재해정보가 방재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기존 방송은 이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함
- 재해정보 전달시스템중 방송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며, 특히 라디오는 섬이나 산간지방에 정보 전달의 효과가 높음
- 충남지역의 방재전문 FM방송을 창설하여 지역여건에 적절한 방재조치를 적기에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재해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재해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TV나 라디오 단말기에 ON/OFF장치의 부착도 병행추진
- 방재전문 FM방송은 도의 홍보실과 연계되어 도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병행한 방송으로서 도정과 관련된 정책 홍보외에도 시·군의 특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홍보가능

● 자연재해 대비 대응능력 강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귀중한 재산 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 피해('91~2001)

· 사망·실종 : 62명

· 이 재 민 : 31,721명

· 농경지침수 : 98,554<sup>ha</sup>

· 피 해 액 : 7,271억원(복구액 11,433억원)

□ 사업내용

- 방재관련 홈페이지 구축으로 강우상황, 교통두절 재해위험 상황과 주민행동 요령 등 제공

- 도민 스스로 재해상황 대응능력 부여

○ 충남지역의 종합구조·구난 네트워크 구성

- 각종 재난·재해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급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 및 구급이송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구원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
- 부상자의 구명율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구급처치가 가능한 구급구명자격을 갖고 있는 구급요원의 양성 등 자질향상을 추진하는 외에 구조 공작차 등의 구조기구를 장비한 구조대의 계획적인 편성·배치
- 도 및 시군지역 구조·구난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구난센터를 정비하고 고도정보·통신기술이나 방재행정무선의 활용에 의한 구조·구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광역적인 상호응원 체제의 충실
- 도민이 재해·재난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구조 조직을 학교, 직장 단위로 구성하여 지역의 자주 구조체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지역별 교육훈련 실시

○ 하천방재를 위한 하천정보센터의 설치

- 충남도 하천의 정비율(2000년 현재)은 약 20%대로 낮은 상태이며, 특히 개발이 현저한 지역의 하천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지의 설치나 개발구역내의 저류기능을 갖도록 하는 하천정비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
- 하천의 조기정비시 하천정보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중소하천의 수위, 유량의 측정 정보, 수문, 배수장의 정보, TV 카메라에 의해 하천을 종합적 관리에 만전

○ 교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전면허의 인구나 차량보유 대수의 증가와 수반하여 교통사고는 증가경향이 있으며, 도시부 및 간선도로에 있어서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해지므로 간선도로의 원활화, 도로교통 기능의 확보와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중요
-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도로의 상황 등 여러 가지 교통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교통기본정보관리 시스템의 정비로 교통안전 및 교통원활화 대책 필요
- 도로교통 원활화를 위하여 교통관제 센터를 핵으로 주요 도시에 서브센터를 설치하고 교통관리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며, 교통신호기의 계통화, 감응화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자나 신체장애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주변 및 교통위험 개소에 있어서 교통신호기를 신설
- 신자동차 교통정보통신시스템, 노변 통신시스템 등 교통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물 확충 및 계획적인 정비추진



● 교통사고대책 수립 추진

□ 사업배경 및 목적

-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손실로 사회적인 문제화 대두
  - 범 국민적인 교통사고 운동 줄이기 등 운동 전개
- 교통사고 주요 요인의 교통·도로시설물의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필요
  - 인본 행정의 실천
- 각종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교통·도로시설물의 개선으로 사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 교통여건 변화(4차선 이상의 고속화 도로 등)에 신속한 대처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민생활의 안정성 확보

□ 사업내용(5개분야, 552억원)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 324개소, 213억원
- 교차지점 개선 : 63개소, 78억원
-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 57개소, 63억원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갓길포장 : 1,233km, 198억원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 종사자 실천운동 전개
  - 종사자의 3과(과로, 과속, 과적) 추방 운동 전개 등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 178개소 79억원
-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 12개소 4억원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갓길 포장 : 665km 107억원
- 운수종사자 실천운동 전개 : 그동안 지속적인 운동 전개

## 4 예방 위주의 안전관리체제 강화

### ○ 방재 관련 도 조례의 제정

- 충남도의 조례에는 방재계획 관련 조례가 거의 없어서 방재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의 부족한 실정이므로 충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보전 그리고 세부 방재계획과 방재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할 수 있도록 방재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필요
- 충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재계획과 방재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재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조례 제정시급
- 방재관련 조례 제정방향은 재해기금을 이용한 연구용역으로 설정하고 연구결과에 의거 제정하여 도 및 시·군의 방재담당부서의 통일, 방재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및 지역방재에 대한 실질적 방안의 수립

### ○ 대규모 건설 및 단지개발시 방재사전심의 제도

- 우리 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표고 100m 이하의 구릉성 평야지대로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수도권 개발억제 정책,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의 개통 등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유입 증가 및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농지, 하천 등이 고 있는 보수(保水)·유수기능이 저하되어 안전기반의 위약화 우려
- 국립방재연구소가 10년(1989~1998)간의 자연재해 피해자료로 분석한 지역별 위험도를 보면 충남의 주택과손 위험도는 전국평균에 비해 29% 높고, 부여군, 당진군, 보령시, 논산시 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상기상에 의한 집중호우시 큰 피해발생 예상
- 따라서 대규모 건설이나 단지개발시 연약지반 문제, 산사태나 토사피해,

하천범람이나 침수 등의 방재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방재사전 심의제도의 도입으로 안전기반의 확립 필요

○ 방재상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제 실시

- 1978년의 홍성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으나 최근 지진의 발생회수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1986년부터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1988년 8월부터 6층 이상의 구조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도 카치 지진현장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는 지진에 대해 취약한 건물들을 개선하지 못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진에 취약한 기존 구조물, 특히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및 고층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제를 실시하여 내진 등에 대한 조기 조치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무료 안전점검 등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의 감소유도

○ 재난·재해관련 보험제도의 도입

-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고층화, 밀집화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인위 재난 인한 피해발생시 배상책임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피해자들은 지방정부(시랜드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등)에 무리한 배상·보상의 요구가 빈발하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
-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체육시설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3,000m<sup>2</sup> 이상인 공연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병원 등에만 화재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이나 유원시설, 그리고 3,000m<sup>2</sup> 이하인 시설물은 보험 사각지대임
- 재난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받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중 국가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재난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중 경과년수를 적용한 시설물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다중이용시설물중 인위재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재난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와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 이행

○ 지역별 안전성지수 개발

- 충남의 과거 10년간(1991-1999)의 풍수해 피해를 1991년에는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가 1995년 2,300억원의 큰 피해를 입은 후 크게 줄었다가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서해안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483억원의 국지적 집중피해가 발생
- 이러한 재해의 집중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재해·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별 안전성 정도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대비책의 수립 중요
- 도시 및 농촌지역에 대한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의거 지역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도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안전도를 높이는 안전도시로서 공인 받는 지표로 활용토록 함

## 5 일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충남 건설

○ 재해 및 재난예보 달력 제작 및 보급

- 재해 및 재난관리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부재로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다가도 곧바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음
- 도민들이 재해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재해 및 재난 달력은 월별 또는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재난을 과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시하며, 지역별 대피장소, 주요 관청 및 병원, 응급구조 센터 등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긴급시 활용
- 재해 및 재난예보달력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민들에게 재해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해나 재난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도의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

#### ● 사전 예방형 재해·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가 빈번하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환경 여건으로 우리 도에서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해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 사업내용

- 지역별 안전성 평가 및 재해·재난 예보달력 제작·보급
  - 화재, 붕괴 등에 대한 분야별 안전지표를 개발 지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단위 안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안전충남 건설에 기여
  - 달력에 월별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응급구조센터 등의 전화번호를 명기 하여 긴급시 활용생활화 유도

#### ○ 도시공공시설에 우수저량시설의 설치

- 충남도는 타시에 비해 산지나 대하천이 많지 않으며,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서 수자원의 부족문제는 현재 없으나, 앞으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촉진,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활동의 활성화에 의해 물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 필요

- 물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절수기기의 도입,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의한 중수도의 도입, 누수방지 강화, 마을별 빗물 저장소 설치 등과 같은 물의 유효이용을 촉진외에 건물 지하나 학교의 교정 지하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우수의 유효이용 검토
- 도시 공공시설의 신축 및 개축시 우수 저장 시설을 설치한 외에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및 대규모 민간시설에 침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우수유출 시설의 설치조성(갈수기에 이용가능)
-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효율적 물관리대책 수립

· 침수지역에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범시설 설치운용 검토

●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효율적 물관리대책 수립

□ 사업배경 및 목적

- 홍수시에 발생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강우종료후(가뭄시)에 방류하여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시범 설치 운용

□ 사업내용

- 사업명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대상사업 : 우수유출 억제시설(유수지, 유역저류시설) 1식  
                   녹색댐 기능제고(조립 531ha, 육림 3,691ha, 사방댐 4개소)  
                   이용시설 1식(농업, 공업, 생활·환경용수)
- 사업비 : 280억원(우수유출억제시설135, 녹색댐145, 이용시설30)
- 사업기간 : 2001 ~ 2010

○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 고령자 및 장애자의 증가에 따른 통행상 안전사고 방지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의 개선, 신호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

-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블록의 증설,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해소, 보도교의 신설·교체시 경사로 설치, 고령자 운전자 확대에 대비한 CRT식 운전적성 검사 기기의 설치, 안내표식과 도로표식의 정비, 도로조명의 개선하는 등交通安全시설의 정비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보행로의 확폭이 곤란한 곳은 수직이동 방안이나 보행자지역의 설치 등 입체이용을 추진하고, 또한 기시설 지하가와 연결되도록 해서 지하보행공간의 네트워크화 등도 적용

#### ○ 초·중학교 교과과정에 안전교육 도입

- 재해·재난과 관련된 안전교육은 현재 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도 이에 대한 준비 및 현황이 미흡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생활에 반영토록 초·중학교 교육에交通安全, 시설물 안전, 일상안전(전기, 가스, 폭발 등)에 대한 과목도입 검토
- 안전교육의 방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재난에 대하여 사고사례 예시와 간략한 점검표를 통한 주변시설물의 파악 등으로 유도
-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민들에게 재해나 재난을 대비한 방재 필요성의 인식과 안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장차의 재난발생을 크게 줄여 도의 사회적 비용절감 유도가능
-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도입 관련 교육청과 협의, 초·중 교육과정에 안전관련 교재를 개발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p>●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도입</p>
<p>□ 사업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파트너 십을 형성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음</li> </ul>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화재예방,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등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재해·재난 사고사례와 사고예방 점검표를 통한 주변 시설물의 점검방법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도입하여 안전의 생활화를 유도</li> </ul> </li> </ul>

○ 충남시설안전공단의 설립

- 충남내 재난위험시설은 124개로서 전국의 재난위험시설의 1201개의 약 7.6%이나 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재원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1세기 충남도내 시설물의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의 설립 필요
- 도내 중요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에 효율화 유도과 주요 건설현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일상안전성 확보
- 도내 각종 시설물의 관리효율화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도민들의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자문으로 효율적인 방재,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으로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



## 6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선진소방의 확립

### ○ 상비 소방력의 충실화

- 복합건물, 고층건축물의 증가, 신건축자재 및 화학물질 등 위험물 출현에 의해 화재·폭발 및 테러사태 등 각종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대하며, 그 양태도 계속 복잡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방력(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 확충을 비롯하여 소방관서 증설, 소방정대 신설, 소방안전타운 조성, 화재조사 전문화 등이 필요
- 소방인력은 1,983명 기준에 현재 1,174명으로 809명이 부족(확보율 59%), 소방서는 16개소 기준에 현재 6개소로 10개소가 부족하여(확보율 37.5%), 소방인력 확충은 2005년 80%, 2010년 100% 및 소방서(소방과 출소) 증설은 2005년 60%, 2010년 80%로 목표로 추진
- 소방장비의 과학화, 소방용수시설 확충,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및 전용차(2004년까지 7대) 확행, 2007년까지 소방헬기 1대 추가 확보

### ○ 「전국 제일의 안전한 충남」 만들기 국제공인사업 추진

- 민선 3기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안전도시·안전지역”(safe community) 만들기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편리성, 기동성, 신뢰성, 포괄적 구조구급서비스 효율이 가장 높은 119구급대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하여 충남의 시·군이 Karolinska Institute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 받도록 중점 추진
- Safe Community 만들기 관련 우수 시·군 안전지역 국제공인 획득으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범도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안전 체험교실” 등 교육과정 개설 (소방학교), 재난위험의 맥을 찾는 안전대책 추진, 월별 및 테마별 시의성 있는 안전확인 (해빙기, 우기, 혹서기 대비)

- 어린이·어르신·장애우 안전지도 강화, 생활안전 실천교육, 사고별 대처요령, 응급처치법 교육, 각종 시설물 정기안전검사, 재난·재해 대비 실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남 만들기” 추진
- 이와 병행하여 소방안전기반 조기확충 및 郡지역 소방서 및 서해안지역 消防艇隊 신설과 장비보강 추진

####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 화재조사는 모든 화재현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화재원인과 피해를 조사하여 이것을 근거로 화재의 예방·진압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화재조사는 조사요원의 비전문화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2002. 7.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여 화재연구, 화재원인, 정밀감식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정착 추진
- 이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관련 법규·제도를 개선하여 화재조사 우수인력의 양성과 전담부서의 설치, 그리고 화재조사장비의 단계적 확충이 이루어져 과학적인 화재조사 전문화 기반의 조성 PL법 시행 대비 및 화재 예방·진압업무의 개선에 적극 반영

#### ○ 「소방안전타운」 조성 및 「서해안 소방정대」 설치

- 소방안전타운은 소방안전작전의 고도화를 위한 화재시험과 소방대원의 소방훈련을 위한 소방훈련장 외에 학생 및 지역별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일상안전시의 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어주는 「도민안전체험관」 및 「화재안전시험동」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1세기 소방안전체제 구축에 필수적 기능을 수행
- 2005년까지 서해안 해양·해상사고 대비 「소방정대」 신설(보령·아산·서산·서해안) 및 2010년까지 「소방안전타운」 건립(119종합안전정보센터, 소방훈련장, 화재시험동, 도민안전체험관)을 추진

- 사업규모는 소방헬기 50억, 소방정대 100억, 소방안전타운 800억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475억원, 지방비 475억원으로 단계적 시행

#### ○ 119 구조·구급대원의 확충 및 전문화

-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부상에 의한 급·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구급이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명구조 장비 및 응급처치 보조장비의 확보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 열차, 항공기 사고 등 대형사고, 대형 재해 및 재난에 의해 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는 경우를 대비한 집단구조·구급대책의 계획과 21세기의 특수재난(화학, 가스, 유독물사고, 테러 등)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인명구조·구급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특수·대형재난 대응능력 향상, 인구 노령화 등으로 인한 구급수요 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 레저활동 증가 및 다변화된 구조구급 환경에 능동적 대처
- 찾아 나서는 「119봉사 활동」 전개 관련 도서지역과 노약자 등 소외계층 안전대책 추진, 의료지원 등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
- 119자동신고기 보급대상 확대(무의탁노인⇒장애인), 영세가구 무료안전점검 확대 실시, 사랑의 생명나눔운동 추진 (헌혈, 장기기증 등)

#### ○ 소방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 현재 충청소방학교는 「21세기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소방인재의 양성」,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구현」, 「국민안전을 위한 119 체험교육 역점 실시」를 교육목표로 삼고 운영중
- 그러나 각종 교육훈련에 따르는 특수시설물과 장비확보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재정형편상 시설투자 이후 충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시설, 장비에 대한 재투자에는 애로가 발생

- 따라서 충청소방학교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훈련 투자확대와 우수 전문교관 확보 및 학교 확장이전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시설 개선 등으로 고도화된 현장위주의 교육훈련 도모
- 특히 충청소방학교는 화재진압 및 화재조사분야에 특성화를 적극 추진

○ 자위소방대의 활성화

-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재해 증가와 고령화로 소방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소방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위소방대의 활성화 필요
- 자위소방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 외에 장비의 충실 외에 보험이나 수당 등을 지급하여 소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활동 외에 소방대원이 수행하는 방화시설물의 예방사찰을 보조하여 소방용 설비의 설치촉진이나 유지 적정화의 도모

## 7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생태가치적 환경관리	생태중심의 환경종합 계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 유도</li> <li>• 생태·자연도 작성</li> <li>•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적합성 사전평가</li> <li>• 권역별 환경목표 달성여부 평가</li> </ul>
	종합 '환경측정망 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망 자동화사업 추진</li> <li>•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과학화 도모</li> <li>• 토양 및 폐기물 측정의 정례화</li> </ul>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축의 보전·복원사업 추진</li> <li>• 서해안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호</li> <li>•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복원대책</li> </ul>
	과학적·생태적 수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무방류 관리시스템 도입</li> <li>• 건천화된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li> <li>•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역 생태뉴지 조성</li> <li>•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관리 기반구축</li> </ul>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자연에너지 개발사업 추진</li> <li>• 폐자원 에너지화로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 활용</li> </ul>
효율적 환경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방안	하천 및 호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현</li> <li>• 금강수질 II등급 완성</li> <li>• 중부권 생활용수 공급여건 조성</li> <li>• 여과수 개발로 북서부권 가용수원 확보</li> </ul>
	폐기물 감량 및 관리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전개</li> <li>• 음식쓰레기 처리 및 관리시설 기술개발</li> <li>• 폐기물 수거체계의 정착과 재활용 기반 조성</li> <li>• 폐기물 중간처리 활성화</li> <li>• 폐기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li> </ul>
	미래수자원인 지하수 보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존량 기초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li> <li>• 폐공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전개</li> <li>• 지하수 보전관리 전제로 지표수와 연계이용 계획</li> </ul>

효율적 환경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맑고 청명한 대기질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li> <li>•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li> <li>•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대책</li> </ul>
	연암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연안 환경관리 체계 구축</li> <li>• 환경허용 용량을 감안한 오염총량규제 실시</li> <li>• 연안수질개선 및 적조예방 대책 수립</li> </ul>
방재시스템 의 통합관리 구축	시·군 방재체계의 종합 안전시스템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 컴퓨터행정망과 행정전화, 재해공급체제 및 방송 국과 결합된 종합방재체계구축</li> <li>• 태풍·홍수 등 충남지역의 재해 유형별 D/B구축</li> </ul>
	방재 전용방송국의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이나 FM전용방송 창설</li> <li>• 방재외에 도정 및 시·군정 정책 홍보 기능</li> </ul>
	충남지역의 종합구 조·구원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및 시군 구조·구원센터에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정비</li> <li>• 종합구조·구원시스템의 광역화</li> </ul>
	하천방재를 위한 하 천 정보 센터의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의 현저한 지역하천에 대한 하천관리 시스템 구축</li> <li>• 하천정보센터에서 하천수위, 유량 및 수문 등에 대한 충남 지방하천의 종합적 관리</li> </ul>
	교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교통관리 네트워크 추진</li> <li>• 교통신호기의 계통화·감응화 및 교통정보 통신시스템 을 도입한 관리시스템 구축</li> </ul>
예방위주의 안전체계 강화	방재관련 도 조례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지역에 맞는 세부 방재 계획과 방재 시스템 추진</li> <li>• 시·군 방재 담당부서 및 방재관련 공무원의 전문화</li> </ul>
	대규모 건설 및 단 지개발시 방재사전 심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인구 유입 및 공장 등의 신·증설에 의한 개발 로 안전기반 위약화 우려</li> <li>•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사 피해, 하천 범람, 침수 등에 대비한 사전심의제도 도입</li> </ul>
	방재상 주요 시설물 에 대한 안전진단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세계적인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대비책 필요</li> <li>• 다중이용시설등을 중점적으로 내진에 대한 안전진단제 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대비</li> </ul>
	재난·재해관련 보험 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중 3,000㎡이하 시설에 1단계도입 계획</li> <li>• 인위재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단 계적 도입 계획</li> </ul>
	지역별 안전성징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지표 개발</li> <li>• 지역별 안전성 평가 및 정책 방안 수립</li> </ul>

## 제8장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21C의 충남도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본복지행정」·「지식경영행정」을 양축으로 삼고, 도민 위주의 서비스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도정운영시스템을 재정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기 위한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 공급체제를 완비하고, 이를 도정~시·군정간 긴밀한 연계성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초일류 행정혁신으로 인본효과 중심의 확인평가제도, 자율적 자문·지도형 정책감사제, 전방향의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바람 나는 충남도청 만들기」와 도민을 재난·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안전도시」(Safe Community) 국제공인사업을 역점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경영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문화 및 시스템에 입각한 도정운영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정보 공개화 및 참여행정 확대, 도민과 도지사간 토요데이트 및 도민패널회의 실시, 「도민 신문고」 설치, 투명행정을 위한 청렴계약제 및 반부패지수 공개제 도입,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기 위한 NGO와 함께 하는 행정 및 전문가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추진에 입각한 종합적 디지털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며, Single PPM 인증획득을 도정 전문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사이버 牧民心書」 구축으로 21C 新공직문화 정착을 비롯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학습조직문화 형성 및 지식공유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한편, 자치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대응적인 Local Governance 구축 차원에서 민·산·학·연·관의 협력지향적 도정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각종 현안쟁점들에 대한 인접지역간 협력·조정 및 공동대응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충청남도가 「서해안포럼」을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서해안시대를 펼쳐가야 한다.

특히 충남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시대 정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며,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지방균형발전 법제·운영체제 정립과 2001년 전국체전 1위,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 개최 및 월드컵 4위권 진입 쾌거를 민선 3기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한국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충남의 역할 수행」에 모두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 수요자 중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공급체제 완비

- 행정서비스 도민직접평가제 실시
  - 행정서비스현장별로 도민이 직접 행정시책에 대한 평가장치를 확대 운영
  - 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제3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각 분야별 현장 중심의 도민 직접평가제를 실시
- 도민과 도지사의 ‘토요데이트’ 프로그램 운영
  - 각계각층의 도민과 도지사간의 토요일 여론수렴 기회의 정례화 운영
  - 도민의 실생활 고충, 불만사항 및 제언, 모범공직자 칭찬 등 도민들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유지 및 그 결과의 공개화를 추진
- 인본효과 중심의 도정업무 전반에 확인평가제 도입
  - 현행 목표관리제 운영시스템 보완, 2단계 완성(2002)
  - 인본효과 중심의 평가지표체계 개발, 도정 전분야로 확대 운영
- 新공직관 확립을 위한 “사이버 牧民心書” 추진
  - 사이버상에 人本行政 구현을 위한 공직문화 행동강령의 학습기회 구현
  - 溫故知新 차원, 淸白吏 정신을 통한 공직관 확립 및 공직문화 쇄신 촉진
-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시책반영제 운영
  - 도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적극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제도를 운영,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화
  - 주민의 알권리(access right)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알릴의무(informing charge)에 최선을, 주민의 요구·제언을 행정시책에 의무적으로 반영 조치



- 읍·면·동사무소를 복지·문화형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lost our community)를 회복·복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모임터로 본격 육성
  - 충남의 지역특성과 주민여망에 부합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적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자치기반을 조기에 완비
- 전국 최우수기관으로서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의 정례화 실시
    - 안전, 교통, 복지,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
    - 2002년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단계별로 확대 추진
  - 「행정품질혁신」 운동의 확대 추진
    - 「ISO 9001」, 「S-PPM」 품질인증 획득 이후 행정품질 개선의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 강조
    - 행정품질혁신, 행정서비스헌장, 일하는 방식간의 연계추진 활성화
    - 관련 조직정비, 지속적인 교육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 추진
- 인터넷 정보망을 활용한 「전자세정」 운영
  - 인터넷 고지·납부제, 카드론 납부 등 납세자의 선택권 확대
  - 종래 법인방문 세무조사를 기업불편 최소화 위해 인터넷 세무조사 전환
  - 종래 세외수입 자료 및 국·공유재산 수기관리를 전산화 및 D/B 구축
- 보다 더 발전된 민원편의시책 개선, 시행
  - 인감증명발급의 온라인화 추진으로 현행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발급에서

온라인화시 가까운 읍·면·동 발급가능토록 전환

- 여권발급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화 추진 관련 여권발급시 민원인이 일일이 전화 확인방식에서 앞으로 발급결과를 민원인 휴대폰에 문자전송 통보,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업무능률 향상

○ 「200만 도민과의 대화」 계획

- 언론매체를 이용, 「역동적인 도정모습과 새로운 비전, 이슈문제를 도지사과 도민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
- 도정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충남지역의 화합과 발전의 모토로 적극 활용

- 시기는 일반행정을 정례화하는 차원에서 이슈문제는 상황판단에 따라 추진하며,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 연출을 모색
- 특히, 언론매체는 KBS, MBC, TJB, YTN, CBS, CMB, 평화·교통방송을 활용하며, 지방뉴스는 물론 주요프로그램 및 방송시간을 적절히 활용
- 운영방법(안)은 시·군 순방시의 도민과 대화를 도정시책과 연계, 시·군 발전비전, 이슈화 된 특정부문에 관한 관련 주민 및 전문가 토론, 도정 전반에 관한 비전 설명 및 각계각층의 도민 참여기회 제공, 기타 시사토론 및 현장 리포터 후 집중토론회 개최 등 추진
- 기대효과는 역동적인 도정모습과 비전에 대한 오해·불신 해소 및 이슈문제와 관련 주민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 「전자도서관」 시범설치 운영

- 5대 민원분야(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정)에 대한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민원체제로 전환 및 처리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확보
- 민원신청 및 접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 단일창구에서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

○ 「전자화폐」 도입

- 소액현금과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화된 지불수단 도입으로 교통과 유통,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도민편익 증진
- 2004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449억원)

○ 「전자도서관」 시범설치 운영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충청남도 전자도서관 포털 홈페이지」 구축
- 도내 공공도서관(19개) 정보통합(30억원) 소요

## 2 참여·투명행정 구현으로 도정 신뢰기반 구축

○ 행정정보 공개화 및 도민 행정평가제 운영

- 수요자 위주의 도정정보 공개제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행정제도 및 법령 재정비로 도민에게 상세한 행정정보 서비스의 확대 시행
- 주요 시책회의 및 의사결정시 도민대표·시민단체(NGO)·전문가 참여 확대 및 도민이 직접 행정시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환류체제 강화

○ 도민참여 「행정모니터링제」 확대 실시

- 현행 도정모니터링제를 확대 개편, 어르신·청소년·장애인·실직자 등 소외계층 중심으로 가감 없는 행정감시 및 확인기능 수행에 만전
- 도청 홈페이지 및 도정신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공개, 담당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조치

○ 「도민과의 대화마당」 운영

- 현장 수요자를 중심으로 도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생생한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환류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도민과의 대화마당」을 운영

● 「도민과의 대화마당」 운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에서 표출하는 행정욕구를 적극 수용
  - 오지·도서·도계마을 등 소외지역은 물론 시장 등 생활의 현장을 찾아 사회 저변의 생생한 목소리의 수렴
  - NGO, 전문가, 도정모니터 등 전문가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노력 필요
- 시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책 모색
- 도, 시·군정 연계행정 강화 및 민·관 협력증진으로 한 차원 높은 자치행정 구현 및 도정발전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시·군 순회 「도민과의 대화」 운영 : 연중
  - 종전의 의례적 방문 탈피, 지역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 NGO 등 각계 각층의 민간단체와 대화 : 수시
  - 이북도민회,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적십자 자원봉사단 등 각종 사회단체
- 도계·오지·도서마을 방문 대화 : 3~4회
-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 2회(상·하반기)
- 통리장 및 도정모니터와의 연찬회 개최 : 11~12월중(2회)
- 시군 문화·체육행사 계기 지역주민과의 대화 : 수시
- 초중생과의 대화 : 시·군 교육청과 협조 추진
- 도정자문 및 평가단 활용 내실화
  - 정책자문교수단회의, 도정평가단 등

-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열린행정」, 「참여행정」 강화
  - 도민의 「알권리」에 걸맞는 공무원의 「알릴의무」에 충실
  - 道~시·군정간 「종합자료화」 및 「행정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 연계시스템 보강 운영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정확인평가단」, 「도정정책자문교수단」, 「주부명예기자단」 등의 운영기반을 활성화, 도정조언·협조, 비판·감시기능 강화 등 투명행정 구현을 촉진
- 「도민신문고」 설치·운영
  - 사이버상의 “신문고” 뿐만 아니라, 도청광장 특정장소에 “도민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대형 북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 추진
  - “도민신문고” 운영부서를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백제문양으로 품격 있게 제작하여 “민생도정”의 상징적 징표로 적극 활용
- 도지사가 직접 수리하는 「부조리 신고 엽서제」 도입
  - 도지사 직접 수리의 홈페이지(전자우편)과는 별도로 廳內 수개의 도지사 직접 부조리 신고엽서 접수창구를 개설, 중간경유 없이 直訴制로 운영하는 시책을 적극 도입
  - 實名の 부조리 신고엽서를 접수 및 확인하여 반드시 조치결과를 최단 시간내 의뢰인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회신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추진
  - 건설·시공분야를 비롯하여 각종 입찰시 “청렴계약제” 도입, 추진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관련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NGO)를 청렴계약 옴부즈만으로 위촉, 활용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 및 「반부패지수」 발표
  - 도내 민원처리 실태·현황을 주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화 추진
  - “청렴도지수”의 조사·평가와 동시에 충남이 적극적으로 공직부패·부패 관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反부패지수”를 산출, 주기적으로 공개 조치
- 시·군 정기 종합감사 개선
  - 감사주기를 2년에서 단체장 임기중 1회 이상으로 조정 및 감사원 감사 주기 고려 안배 (자체 감사규칙 개정 연계)
  -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 위주에서 도, 시·군으로 조정

- 「취약분야 및 회계검사」 중심 운영 (소수 정예화)
  - 사업량이 적은 道 사업소·지소 등은 「서면감사」로 대체
- 「정책감사제」 도입 및 「업무계통감사」 확대
  - 주요 특정사업 등에 대한 「민관합동 정책감사」 실시로 환류·평가, 카운셀링 (정보제공, 조언·지도) 형태로 운영
  - 환경, 대규모공사, 세입·세출, 건축, 소방, 농지·산림관리 등에 대한 감사 주기 조정에 따른 취약업무 계통감사 실시
- 기강감사(服務), 시책점검의 점진적 축소
  - 복무기강 점검은 자체감사기능을 활용토록 위임
  - 주요 도정 시책점검 및 당면사항 확인 지양
  - 직무감찰은 최소범위 내에서 「특명사항」 위주로 시행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사이버 牧民心書」 구축
  - 목민심서의 현대적 해석작업을 통해 인본행정의 실천강령으로 재정리,

## 집대성

- Cyber 디지털화 하여 새로운 공직문화 창출의 교육장으로 활용
- 기관별 「청렴도 지수」 조사
  - 道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측정, 지수화하여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의 분위기 조성
  -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 지표개발 및 조사로 공정성·신뢰성 확보
- 부패 취약업무처리 편람 제작
  - 계획구상·예산확보, 발주·시공, 준공·사후관리 등 사업별 구체적 업무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단계별 부조리 요인 색출 적시 및 예방대책 등 편람화 추진
  - 인터넷 게재 등으로 민원인 편익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운영
  - 2002 하반기 조례 제정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
  - 공직자 영리활동 제한 및 이해충돌 회피, 선물·경조금·화환 등 수수범위 등 명시화
- 감사제도의 발전적 운영
  - 주요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정책감사」 실시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및 환류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유도
  - 관련부서, 학계·연구기관, 외부전문가 등 Task Force 구성·운영
- 道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현 감사자문관제도를 보완,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감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활용

- 감사행정에 대한 자문·심의 등 감사위원회 기능 수행 (10인 내외)

○ 예방감사를 위한 「일상감사」를 활성화

- 道 일상감사 범위 조정하여 물품구매·용역(2억원→1억원 이상), 공사(20억원→10억 이상)으로 조정, 운영

- 시·군 「일상감사」 위탁실시 등으로 지도·지원 강화와 관련 건설공사(20억원 이상) 등 일상감사 의뢰시 道에서 감사

○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한 감사기법 개발

- 서류·현장위주 감사에서 전산망을 활용한 감사기법 개발연구

- 취약업무별 道, 시·군간 네트워크화 및 상시점검·확인

### 3 지식기반행정 추진으로 도정 생산성 증진

○ Single PPM 인증획득 도정 전분야 확대 운영

- ISO 9001, 14001 품질인증 획득 성과를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도정 서비스의 고품질화·고품격화로 도민만족·도민감동 구현에 박차

- “5Best 운동” 등 전국에서 “일하는 방식”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식기반행정에 입각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경영체제 구축, 완비

○ 도정~시·군정 지식정보화 공유시스템 구축

- 도정~시·군정간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지식정보화 공유시스템을 구축, 자치정보·시책정보·경제정보·민원정보·안전정보·생활정보의 정보교류 및 생산성 높은 전자정보화 차원의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



- 특히, 도정~시·군정간 간과되기 쉬운 인사교류정보 및 인적자원개발정보 등에 대한 관련지식정보의 축적, 관리, 이용, 환류시스템 고도화 추진

○ 「행정자료실」 개편 및 학술정보교류 확대

- 기존행정자료실을 「충청남도자료관」으로 개편 운영
- 행정자료실 + 문서관리 + 정보공개창구 + 시청각실 등 유사기능 통폐합
- 정부기록보존소 + 도자료관 + 각 실과간 정보검색 활용
-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교류협정」 체결로 지식 및 학술정보의 유통과 공유로 필요자료 검색과 각종 정보자료 활용으로 도정발전 지원
- 도내 전 도서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확충으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 및 검색기능 제공 (대전시와 공동추진 방안도 검토 : 규모경제, 정보의 공동활용 등)

○ 전국모델의 「디지털도정 시범도시사업」 추진

- 전국최초의 “충청남도 디지털도정 선언”을 성공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성장 시·군 대상으로 디지털도정 시범도시사업 추진
-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디지털 정보문화 확산으로 “정보화 추진 시범마을” 조성 및 시·군 대상으로 단계적 적용기반 확대, 운영

○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 및 「전문가평가제」 실시

-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으로 낭비요인 원천 방지 및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비용 對 효과분석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
- 예산편성·집행·결산과정에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NGO,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전문적인 진단·자문활동 실시 및 객관적인 전문가평가제 운영

○ 건전한 회계운영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를 위해 2005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자치부 시험기관 선정·운영과 연계방안 모색)
- 자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 공사는 50억원 이하에서 235억원 미만으로, 물품구매는 3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로 적용

○ 지방채무 관리강화 및 감축 운영

- 지방채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 IMF 이전수준으로 감축
- 채무규모는 2001년 4,146억원에서 2006년 2,500억원으로 감소(△40%)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는 2002년 이후 200억원 이내
- 매년 40억원 규모의 감채기금 적립, 채무 조기상환 및 고이율 채무 차환 재원 활용

○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도~시·군 재정정보 공유 광역재정시스템 구축
- 예산·회계 등 재무행정 업무와 세외수입 등 세정업무 통합관리
- 합리적 자원배분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 자문·지도·성과 위주의 「정책감사제」 도입

- 비위적발 및 기강확립과 병행, 피감기관에 대한 자문·지도 위주의 정책 감사제도를 도입, 비리방지 방법 자문 및 업무개선기법 지도운영 활성화
- 불편부당한 회계감사 실시와 병행, 부분적·지엽적인 문제의 소재보다는 운영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검토, 보다 근본적인 원인처방에 주력

-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인사운영시스템 혁신
  - 종래 상하관계 위주의 인사평가방식에서 탈피, 동료·부하집단까지 포함하는 수평적이고 전방향의 다면평가제(360 degree evaluation system)를 도입, 단계적으로 도정 전분야로 확대 운영
  - 다면평가를 통해 상사로부터의 인정 외에, 동료로부터의 지지와 부하로부터의 신망까지 두루 포함한 “全人的” 인사관리 평가시스템을 지향
  - 이를 위한 Digital 기반 지속적인 구축 관련 인사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보존문서 목록(영구 및 준영구) D/B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스템 추진, 의전용 기념품목 D/B화, 주요행사별 초청관리인사 D/B화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 인사기준 사전공개, 실·국장 인사제청권 강화
  - 직위공모제·다면평가제 등 실적과 능력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모색
- 도정이미지 쇄신을 위한 기획홍보 T/F 구성
  - 충남도정의 대외적 이미지 관리 및 正體性 확립을 위해 현행 공보·홍보분야의 획기적 보강 또는 기획정보분야에 한시기구로 기획홍보 T/F의 설치, 탄력적 운영을 적극 추진
  - 道 정책자문교수단(공보분과위원회) 및 내외 전문가의 신축적 활용으로 기획홍보시스템 혁신, 주기적인 도정이미지 조사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대외적 공표
- Cyber 도정홍보 추진
  - 현재 도정 홍보Item을 출입기자 및 비상주자, 지역신문사 등에 Mailing Service 제공
  - 도정 홍보Item 및 도정신문을 Digital化하여 道 홈페이지상에 게재

-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국단위 홍보 및 해외홍보에 다소 미온적이고, 도정신문을 道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접속·이용자가 저조
- 앞으로 도정홍보 Mailing System구축 운영에 만전
- 특히, 도정홍보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E-mail Club」 운영, 도정홍보 Item·도정신문 제공 등 도정홍보의 場으로 활용으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 추진
- 별도의 Cyber 명예기자단 구성, 운영으로 평소 도정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On-Line방식 구성, 道 이슈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아이템 수렴의 場으로 활용으로 소속감과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 도계지역 「충남이미지 업그레이드」 추진

- 현행 道界지역 대상인 금산·서천 및 천안·논산 일부지역에 충남의 正體性 확립 및 도정운영에 협력적·중심적 역할을 부여토록 지속적 관심 증대와 안정적 투자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 중점적으로 추진
- 도계지역에 독창적인 충남의 상징물 건립, 충남 방문 환영탑, 고속도로 통과지역에 아름답고 살맛나는 충남 알리기 대형 안내판 설치 및 일부 도계분쟁지역(해상도계) 대상 道 차원의 각종 행사유치를 추진

○ 「신바람 나는 충남도청 만들기」 추진

- 거듭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도청근무 공직자 대상으로 도청을 “보람의 일터”로 만드는 각종 創發的인 시책개발을 추진
- 일선 공직자의 사기양양·후생복지(근무여건 개선)·직무만족도 향상책 추진과 병행, “減私奉公의 공직사명” 고취를 위한 별도의 학습프로그램 개발, 시행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 다각적 지원 관련 시네마극장 운영(대강당 활용, 주 1회 기준), 다양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무원 체력단련장 설치, 운영(신관옥상 50평에 런닝머신 등 30여종 운동기구를 신설, 샤워실 및 휴게실 운영 등) 및 제외대상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 방안 모색
-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직자 화합한마당」 행사를 위탁 운영 및 사무실 환경개선 등 별관 이전 배치
- 구내식당 시설 환경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아늑하고, 쾌적하며 기분 좋은 휴식공간을 조성
- 도청 본관의 야경연출 방안 모색
- 현행 당직운영은 일·숙직별 7명(사령 외 6명)으로 편성 연간 3~5회 근무 및 당직자의 임무는 청사내 방호, 방화, 보안, 순찰, 점검 등 청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실정
- 당직근무 제도개선을 위해 경비는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하고 당직상황은 「종합상황실」로 이관 운영
- 충청남도 「근로·화합 대상」 제정, 운영
  - 충청남도 근로대상 제정 및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시 시상으로 양대노동총·시군 추천 근로단체·근로자 3명(대상, 금상, 은상) 실시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등 제반준비(2003년) 및 기업인대상과 연계 추진
- 도정신문 제작·배포 개선
  - 현행 순간(월 3회), 매회 51,000부 발간(12면), 타블로이드판으로 DM망·해외 등 7,600여부는 우편발송하고 43,400여부는 택배로 시·군까지 탁송하며, 시·군에서 재분류하여 읍·면·동까지 보내면 읍·면·동에서 이

장을 통해 개별 배달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현 읍셋인쇄방식이 他 인쇄방식에 비해 인쇄비 및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인쇄방식 개선 필요성 대두 및 현행 읍·면·동의 인원감축 및 통·리장의 책임의식 결여로 일부 배포지연
- 앞으로 도정신문의 편집·인쇄방법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읍셋·운전방식의 장단점 비교 등 도정신문의 품위와 시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 마련을 추진
- 道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도정신문」 운영, Mailing Service 추진
- 도정신문 배포방법 개선은 현 배포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문·현지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택배·우편발송 확대 및 일간신문활용 배부 등 적은 비용으로 독자까지 조기 전달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 4 유연하고 대응적인 로컬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도민~NGO~전문가 협력체제(Local Governance) 구축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도민, 사회·봉사·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을 망라, 지역정체성 공고화 및 자치역량 배가·강화를 위한 道차원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에 의한 충남도정발전의 가속화 추진
  - 民중심·官후원의 방식에 입각, 사안별로 협력체제 구축 및 충남발전을 탄력화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수립, 본격화
  - 모든 개발사업을 입안단계부터 지역주민, NGO,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화, 분쟁의 사전예방
  - 「환경기본조례」 개정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 조항 신설 및 환경 대외협력팀 구성으로 기획부서에 배치, 조정기능 부여

- 「도민패널회의」 등 합의지향의 주민참여사업 추진
  - “언제, 어디서나 道民과 함께 하는 충남도정”에 걸맞는 “도민패널회의”를 시·군별로 按配 개최, 각계각층 도민대표와 도지사 및 간부직원이 직접 대면하여 사안별 토론·협의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기회를 공개적으로 마련
  - 굵직한 도정시책 추진에 앞서 “도민패널회의” 개최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갈등·마찰의 소지를 없애고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
- 「지역의사대변위원회」(Advocacy Committee) 설치·운영 후원
  - 지역의 보편적 의사(일반의사; general will)를 가감 없이 대변할 수 있는 민간중심 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 후원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입장과 견해 차이로 “지역의 진솔한 목소리”가 장애를 받아 차단되기 쉬운 현실을 효율적으로 극복, 지역내 사회·시민 단체 주축으로 지역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도정 위원회와 도민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각종 도정 위원회와 현장의 도민들 사이에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위원회 활동상 및 관련자료를 도청 홈페이지상에 공개, 활용도 증진
  - 쌍방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도민의 불만 및 제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환류,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
-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선 3기 지방자치의 着根을 위한 민·관 합동의 자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시·군별로 按配하여 순회교육방식으로 운영
  - 주민자치센터내 “자치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수시로 주민자치발전 모임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특강 실시, “自治的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모 포럼 구성 및 주제별 Study Group 운영 활성화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육성계획」 수립, 추진

-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 총체적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본격 추진
- 충남인의 여유와 따뜻한 인간미, 忠孝節義의 정신세계, 유구한 백제 역사 문화,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전통, 그리고 21세기 한국과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인한 실천의지와 함께 사회적 자본 형성전략을 민·관·산·학·연 합동으로 수립, 가시화

○ 민·관 협력파트너십 전담부서의 지정·운영

- 종래 지원 위주의 대민관계업무를 획기적으로 전환, 명실공히 民과 官이 상호협력하는 共生産체제(coproduction system)를 구축
- 민·관 협력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

○ 「충청남도NGO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 “NGO와 함께 하는 충남도정”을 實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충청남도NGO 재단을 설립, 기존 및 신규 NGO단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에 박차
- 전국최초의 독립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며, 공공·민간 공동참여로 운영기금을 조성, 항구적으로 건설한 시민단체활동을 지원, 육성

○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안내 인터넷서비스 실시

- 현행 자원봉사자 수요처 편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實時間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운영방식 채택
- 道 홈페이지상에 “자원봉사 수요처 연결시스템”을 보강 운영하여, 신규참



여 활성화 및 再參與 동기부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자치센터 내의 “디지털 정보방” 운영과 긴밀히 연계하여 장애인·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활지원·봉사활동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지원

- 「지능 충남도정」 구현전략의 수립, 추진
  - 급변하는 경쟁환경에서 보다 지식정보에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지능정부 구현이 경쟁력의 관건
  -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식발전소”의 확대 개편, 운영 및 「우수대학과 道 지식행정 파트너십」 구축

## 5 지역협력체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

-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정책협의회」 신설
  - 종래 행정협의회 운영체제를 보강, 대전·충남북 지역에 “충청권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협력·조정사안별로 실무자 및 전문가집단이 탄력적으로 참여, 지역간 문제해결 및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 1차적으로 행정협의회의 상설운영을 입법 추진,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재구축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충청권정책협의회를 신축성 있게 신설·운영, 대전·충청권의 지역협력체로서 역할 기대
-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조정심의제」 운영
  - 자체 문제해결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공동문제에 대한 종합조정, 자원공동이용·관리, 광역서비스공급, 지역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 규모의 경제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
  - 지역간 갈등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조정기능 보강조치 조속 추진 및 道 차원의 “조정률” 강화로 사전해결 및 사후관리 용이 기대

## ○ 도정~시·군정간 민·관 합동 정기평가제 도입

- 도정~시·군정간 협력관계 활성화 추진 및 연계성 강화 관련 전반적인 운영실태의 민·관 합동의 정기조사 비교평가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실시
- 평가결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 공개 및 도민의사의 적극 반영을 위한 환류시스템 정비, 구축

## ○ 도·시군정 연계·협력강화 방안의 시책화

도~시·군 관계공무원과 총발연 연구진으로 구성된 「(가칭)도~시·군정 공동 발전협의회」(합동 Task Force)를 구성, 구체적인 협력강화 시책발굴·추진

- 이를 통해 道 주관 시장·군수간담회 신설 정례화 개최(분기1회)로 현행 시·군 지도분담제를 정책지원제로 개정 종합지원체제 운영
- 「올해의 최우수 시·군賞」과 「올해의 최우수 시·군공무원賞」 신설의 영예 부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도~시·군 인사교류 협약체결, 기술직 중심 정기인사 교류제 등 시행

## ○ 시·군간 공동 시설이용·관리모델 수립, 확대 적용

- 시·군간, 지역간 공동투자 및 개발신탁, 공동협약, 공동기구 설치·운영, 전략적 제휴·협력 등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시설이용·관리모델을 수립, 운영폭을 획기적으로 신장
- 특히, 현재 시·군별로 대부분 설치되어 이용이 극히 저조한 종합운동장(경기장)과는 달리 광역 쓰레기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간주되어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군간 공동 시설이용·관리 모델 수립, 확대적용이 시급

- 민간 주도의 「충청권 자치발전포럼」 창설, 운영
  - 지역적 동질성이 비교적 강한 대전·충남북지역의 자치역량을 결집, 지역적 통합성을 확보하면서 한 울타리 속에서 자치발전을 함께 기할 수 있도록 충남이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포럼을 구성, 내실 있게 운영,
  -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조짐 및 자치권 지방이양과 같은 공통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설정과 같은 경쟁사안에 대해서는 상호양해·관계완화의 공감대를 조성
- 충청권 광역서비스 공동이용·관리프로그램 추진
  - 서로 인접한 대전·충남북의 지역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통사안별 광역서비스 공동이용·관리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
  - 대청댐 이용·수질개선, 공항 및 항만 활용,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향후 지역간 교통망 운영 관련 권역내 광역서비스 공동 이용·관리 활성화
- 대전·충남북 「문화관광 연계사업기획단」 공동설립
  - 대전 엑스포 및 온천관광, 충남 백제문화 및 해양관광, 충북 중원문화 및 산악관광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주제별 연속코스형 문화관광사업을 기획 추진하기 위한 대전·충남북간 공동출자·공동운영 방식을 도입
  - 권역내 다양한 문화관광요소를 특화, 인접지역간 연계운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단기방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숙박, 교통, 여가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공동 사업기획단을 구성, 탄력적으로 운영
- 「대청댐 살리기」, 「계룡산·금강 지키기」 운동 적극 후원
  - 나날이 수질이 악화되고 저수량관리의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대청댐을 대전·충청권의 식수원으로 보호하면서, 충남의 명산 계룡산과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적극 지원

- 우리 고장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책무로서, 이는 건전한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이는 대전·충청권의 공동현안이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

○ 중앙·도·시군과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정립

현행 局 소관 단위사무 190건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  
 - 위임사무 65건(34%), 고유사무 125건(66%)

- 중앙사무 중 道 이관 사무를 중앙에 적극 건의 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도지사), 인가취소(중앙)으로 이원화 및 개발사업 허가, 행정계획 수립(도지사), 사전환경성 검토(중앙시행)
- 道사무 중 시·군 이양 사무 : 지침 및 조례 개정 관련 청정연료 사용지역 관리, 대기·토양측정망 운영 관리
- 道와 시·군간 역할 재정립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은 시·군 고유사무로 道 연간 1회 실시 및 道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시·군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 도, 시·군과의 업무연계 강화 및 도정 역량제고

- 시·군 합동 교차평가 경쟁 유도 관련 시·군 보건소 사업평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업무 분야별 연찬회·토론회 개최(연 2회), 실무자급 시·군 담당제 시행은 복지·보건·환경 분야별 1명씩 지정하여 운영
- 애로 및 건의사항, 여론 등 수렴 시책반영으로 월 1회 이상 현지방문 또는 현장대화로 의견청취

## 6 지역현안에 모두가 함께 하는 자치역량 확대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방의 空洞化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경기도를 위시한 정부(산업자원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企圖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 체계적으로 대응
  - 인접 비수도권지역들과의 공동대응 추진 및 특히 대전·충청권내 주민·기업인·시민단체·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가칭) 지방살리기 운동연합”을 가동, 충남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지역균형발전 입법화 및 추진프로그램 운영
  - 수도권 규제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전략으로서 “(가칭)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며, 이는 충남이 주축이 되어 지방의회·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계, 추진
  - 이는 인접 비수도권지역들의 예민한 공동현안이므로 이들과 조직적으로 공동대응전략을 추진하며, 특히 충남 주축으로 추진프로그램을 전개
- 「지역균형발전법 법제화」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의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법」 법제화를 역점 추진
- 행정협의회 상설화를 충남 주도적으로 입법추진
  - 현행 행정협의회는 공식기구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상 實效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회 상설화를 포함, 결정사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입법화를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 충남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행정협의회 상설화 및 제반 운영기반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완료

- 현재 임의기구인 「시도지사 협의회」 입법화 추진

● 지역균형발전법 입법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과밀 집중 심화
  -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지방분산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
  -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5%, 금융의 68%,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는 등 과밀집중 심화
- 최근 수도권 정책의 관계법령 개·제정 움직임
  - 최근 국회·정부와 수도권 일각에서는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의 개·제정을 추진중
  - 6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건교위) 계류중
- 수도권 집중폐해의 대응논리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기틀마련
  - 따라서 수도권집중 현황, 원인과 폐해의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를 개발 및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법안 연구 등을 연구
  - 연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건의(對정부·국회 등)를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

□ 사업내용

- 수도권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방안 재정립
  - 대응논리개발과 가칭「지역균형발전법안」의 마련
  - 지역균형발전제도개선 건의 및 입법화여부를 점검하여 추진이 미흡할 경우 재건의 등 후속조치 이행

○ 서해안 종합발전계획 관련 “서해안포럼” 상설화

- 서해안 5개 시·도연구원(경기·인천·충남·전북·광주전남)이 “서해안포럼”을 구성,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개발연구원내 포럼사무국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 회원연구원들과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포럼 상설화를 추진
- 그러나 서해안 포럼 관련 경기·인천의 경우 지식기반산업 및 항만물류

산업의 특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내용상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되고 있음을 감안, 사안별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문화·농수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충남이 주축이 되어 서해안 포럼을 주도

○ 「서해안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운영

- 「서해안포럼」의 상설화 추진 관련 서해안 5개 시·도지사협의회를 충남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

● 서해안포럼 상설화 및 서해안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해안 연접 시·도간 공동관심사 및 共助의 필요성 증대

→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5개 시도 협의체 구성 검토

※ 2002. 6. 17 간부회의시 도지사 지시

- 서해안 연접 시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 서해안 개발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 도모
- 중앙정부에 공동대응 및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조율

□ 사업내용

- 서해안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로 운영
- 추진단계별로 적절한 구성절차 이행

※ 실무협의회→시도지사 간담회→시도지사협의회 창립총회

○ 충청남도가 선두에 서서 “지방분권특별법” 추진

- “중앙이 변치 않으면 충남이 나서서 변화시킨다”는 자치충남의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접 비수도권지역들과 연대 및 정치권의 협력·지원으로 충남이 중심으로 활동

-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화 추진에 충남이 선도
  - “지방분권화는 특정모델지역의 열정과 실천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남이 지방분권의 중심에 서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계획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프로그램을 추진
  - 분야별 논리와 소신이 분명한 전문가들을 영입, 원활한 실무지원 속에서 기획팀(태스크 포스)을 구성,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단체 기능흡수 관련 추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 추진전략을 수립
- 충남의 자치역량 제고 방안 모색
  - IMF 이후 개혁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제반시책 검토 관련 현실에 접목시 타당성과 문제점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검증 후, 중앙에 건의·제시
  - 목표관리제, 성과급제의 현실타당성 분석, 행정기구·정원 등 구조조정의 문제점 검토, 담당제 및 정원의 수적 개념에서 비용 개념으로 전환 개선,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개선 방안 등
  - 지방자치의 골격형성을 위한 검토과제 관련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문제 등
  - 「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의 입법화 및 지방사무의 재배분 방안, 감사제도 개선 등
- 지방분권화 확대 노력
  - Zero Base에서 사무 일제 전수조사, 지방적 성향의 중앙사무 지속 발굴 지방이양 적극 추진 및 중앙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 중앙 및 도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에 대폭 위임 확대



## ○ 「지방자치제도 개선연구」 추진

-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의 선도적인 역할을

● **가치화하는 차원에서 주체 중산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연구」를 역점 추진**

##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집권 체제의 비합리성
  - 급변하는 세계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의 비효율성, 비합리성, 경직성 등이 심각한 문제 사항으로 대두
- 민선 3기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 2002. 4. 9 민선 3기 도지사 출마선언 및 2002. 7. 2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방자치제도 완성의 견인차 역할 강조
-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의 선도적 역할 추진
  -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의 시급성 등을 지방 차원에서 실감 있게 부각시키는 한편, 지방자치 역량 강화의 다각적인 대책마련 및 촉구 등을 우리도가 선도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
-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마련, 입법화로 선진 자치제도 조기 실현·정착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02. 9월 ~ 제도개선 입법화까지
- 추진체계 : 「제도개선 연구팀」 구성 포럼 개최, 6대 과제 선정 연구 및 입법화 노력 전개

## ※ 6대 과제(案)

- ①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 ②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③ 교육자치행정 기관과 연계강화 방안 ④지자체공무원정수관리개선
- ⑤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통합방안 ⑥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등

## ○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 2002년 10월중 「포럼」 개최
  - ※ 주제 : 지방이양에 대비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방안
- 2단계 : 과제별 T/F 팀 구성운영(대선공약 반영 추진)
- 3단계 : 「시도지사협의회」안건 상정, 중앙·국회 등에 건의

○ 도정~시·군정간 지역현안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 도정~시·군정간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행정 운영상의 인사교류·재정배분·개발사업·시책추진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한 사전조정협의체를 사안별로 구성, 도정운영의 기본틀과 시·군정운영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조정·조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확대운영
- 특히, 보다 큰 틀인 국정과의 연계성도 포함, 지방자치행정이 A축(국정~도정~시·군정간 연계성), B축(인접지역, 시·도간 연계성), C축(지방정부와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간 연계성)으로 입체적 연계구조에 입각,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의 추진

○ 도민 위주의 “내고장 지킴이 운동” 적극 후원

- 忠淸人의 기본바탕인 인간미, 여유, 양보, 포용력, 예절범절을 십분 살리면서, 새 시대에 요청되는 뚜렷한 소신, 결단, 협력, 실천력을 배양하여, 충남의 정체성(identity)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도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애향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앞장
- 이를 위한 민선 3기 충남도정의 실질적 운영기조 중의 하나를 “충남의 正體性 확보”로 설정, 21C 자치발전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충남사랑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즐기치게 전개

○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정치역량」 강화

- 지방분권·분산·분업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필요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
- 중앙집중의 폐해와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연대한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앞장

- 중점 추진시책인 「지방분권법」 제정 추진, 「시도지사 협의회」 입법화 관련 대전·충북·충남 공동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방분권·분산·분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 입법과정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수도권산업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방분업이 반영되도록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노력 경주
- 대전·충남 등 충청권 공동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결성 운영
- 특히,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양대축으로 민선3기를 맞아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지방자치행정」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필요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과제로 되고 있는 중앙집중의 폐해와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연대한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앞장
-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참여도정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및 도정참여 지원 강화
  - 도 홈페이지에 NGO정보망 설치로 도정건의·상호협력 창구 제공
  - 전문분야별 자원봉사자 협의체 구성 - 도정참여·봉사활동 체계화
- 계룡산 천황봉 벵커복원사업 「도민 흙벽돌 나르기」 이벤트 개최
  - 민족의 靈山 鷄龍山에서 200만 도민의 상징적 참여분위기 조성
- 문예진흥기금 지원 심사 및 사후평가지 외부인사 참여
  - 기금확충 및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인·언론인 등 위촉

## 7 주요 추진시책

구 분		추진사업
<p>알찬 행정혁신으로 도민위주의 자치도정 실현</p>	<p>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공급체제 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서비스 도민직접평가제 실시</li> <li>• 도민과 도지사의 '토요데이트' 프로그램 운영</li> <li>• 인본효과 중심의 도정업무 확인평가제 도입</li> <li>• 新공직관 확립을 위한 "사이버 목민심서" 추진</li> <li>• 도 간부의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시책반영제 운영</li> <li>• 읍·면·동사무소를 복지·문화형 주민자치센터로 전환</li> <li>• 생명우선의 '안전한 충남 만들기' 국제공인사업 추진</li> </ul>
	<p>참여·투명행정 구현으로 도정 신뢰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 공개화 및 도민 행정평가제 운영</li> <li>• 도민참여 '행정모니터링제'의 확대 실시</li> <li>• '도민신문고' 설치·운영</li> <li>• 도지사가 직접 접수하는 '부조리신고 업서제' 도입</li> <li>• 계약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추진</li> <li>•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 및 '반부패지수' 발표</li> </ul>
	<p>지식기반행정 추진으로 도정 생산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ngle PPM 인증획득 도정 전분야 확대 운영</li> <li>• 도정~시군정 지식정보화 공유시스템 구축</li> <li>• 전국모델의 '디지털도정 시범도시사업' 추진</li> <li>•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 및 전문가평가제 실시</li> <li>• 자문·지도·성과 위주의 정책감사제 도입</li> <li>•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인사운영시스템 혁신</li> <li>• 도정 이미지 쇄신을 위한 기획홍보추진팀 구성</li> <li>• 도계지역 '충남이미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li> <li>• '신바람 나는 도청 만들기' 추진</li> </ul>
<p>자치문화의 성숙을 앞당기는 지방역량 강화</p>	<p>유연하고 대응적인 로컬가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NGO, 전문가 협력체제(Local Governance) 구축</li> <li>• "도민패널회의" 등 합의지향적 주민참여 시범사업 추진</li> <li>• "지역의사 대변자 위원회"(Advocacy Committee) 설치</li> <li>• 도정 각종 위원회와 도민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li> <li>•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li> <li>• 민·관 협력파트너십 전담부서 설치</li> <li>• "충청남도NGO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li> <li>•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안내 인터넷서비스 실시</li> </ul>

구 분		추진사업
자치문화의 성숙을 앞당기는 지방역량 강화	지역협력체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정책협의회” 신설</li> <li>• 조기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조정심의제” 운영</li> <li>• 도정~시군정간 협력실태 민관합동 정기평가제 도입</li> <li>• 시군간 공동 시설이용·관리모델 수립, 구축</li> <li>• 민간 주도의 “충청권 발전포럼” 창설, 운영</li> <li>• 충청권 광역서비스 공동 이용·관리 프로그램 추진</li> <li>• 대전·충남북 “문화관광연계사업기획단” 공동설립</li> <li>• 대청댐 지키기 및 금강 살리기 시민운동 적극 후원</li> </ul>
	지역현안에 모두가 함 께 하는 자치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 기본계획 수립, 추진</li> <l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화 및 추진프로그램 운영</li> <li>• 서해안 종합발전계획 관련 “서해안포럼” 상설화</li> <li>• 행정협의회 상설화를 충남 주도적으로 입법화 추진</li> <li>• 충청남도가 선두에 서서 “지방분권특별법” 추진</li> <li>• 자치권(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확보에 충남이 선도</li> <li>• 도정~시군정간 지역현안 관련 “사전조정협의회” 개최</li> <li>• 도민 위주의 “내고장 지킴이 운동” 적극 후원</li> </ul>

## 참여 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책임	김 정 연 연구실장	비전과 추진과제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 충남
연구진	이 종 상 연구위원 한 무 호 연구위원	지식기반의 경쟁력있는 산업 충남 - 1차산업분야 - 2.3차 산업분야
	이 인 배 연구위원	언제나 찾고싶은 관광 충남
	안 기 용 연구위원 송 충 근 충청남도전문위원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충남 - 교통·물류 - 정보 인프라
	임 선 빈 연구위원 오 석 민 연구위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충남
	송 두 범 연구위원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충남 - 사회·문화 복지분야
	민 경 자 여성정책개발원 정 책 개 발 부 장 이 영 세 여성교육부장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충남 - 여성 복지 분야
	이 상 진 연구위원 임 상 돈 연구위원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는 터전 충남 - 환경 분야 - 방재 분야
	최 병 학 연구위원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충남
	한 상 욱 연 구 원	도정 평가
자문위원 (정책지문 교수단)	조 성 겸 충남대 교수	공보분과
	허 용 무 천안대 교수	여성분과
	육 동 일 충남대 교수	기획정보분과
	이 해 준 공주대 교수	자치문화분과
	김 선 균 우송정보대 교수	농림수산분과
	문 희 철 충남대 교수	경제통상분과
	한 성 희 공주대 교수	복지환경분과
	윤 재 욱 호서대 교수	건설교통분과
	이 춘 하 호서대 교수	소방안전분과
	조 만 형 한남대 교수	진행간사